

사회적 청렴과 국가경쟁력 간 연관성 분석·연구

2009. 10.



제 출 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뢰한 「사회적 청렴과 국가경쟁력 간 연관성 분석·연구」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 10.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오 석

연 구 진

차 문 중 선임연구위원

김 병 연 서울대학교 교수

김 대 용 연구원

김 민 정 서울대학교 연구원

김 민 수 주임연구원

박 은 희 연구행정원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청렴의 이해.....	4
제1절 청렴의 정의와 사회적·경제적 의미.....	4
1. 청렴과 반부패의 관계.....	4
2. 부패의 정의.....	5
3. 부패의 속성과 발생원인.....	7
4. 부패가 국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10
제2절 청렴과 성장잠재력 및 국가브랜드.....	15
1. 제도와 경제성장.....	15
2. 국가브랜드와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	16
제3절 우리나라의 부패 현황 및 반부패 운동.....	23
1. 우리나라 부패 현황 및 반부패 운동의 현주소.....	23
2. 우리나라 반부패 운동의 성과 및 문제점.....	26
제3장 제도 변수와 경제의 관계 - 청렴을 중심으로.....	29
제1절 제도변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29
제2절 청렴이 경제에 미치는 기제와 유의성.....	33
제4장 청렴과 경쟁력, 국가브랜드의 국제적 평가.....	40
제1절 국제기구의 청렴도 평가 비교 및 요인 분석.....	40
1. 부패지수의 특징과 구분.....	40
2. 부패관련 개별지수.....	43

3. 부패관련 집계지수	49
4. 우리나라 청렴도 수준의 국제비교	53
제2절 국제기구의 경쟁력 평가 비교 및 요인 분석	55
1. 국가경쟁력지수의 종류 및 특징	55
2. WEF의 세계경쟁력지수	57
3. IMD의 국가경쟁력지수	59
제3절 국가브랜드 평가 비교 및 요인 분석	61
제5장 청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64
제1절 청렴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64
1. 청렴과 경제성장, 소득 간의 관계	64
2. 이론적 모형	67
3. 실증적 분석	79
제2절 청렴이 성장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90
1. 자 료	90
2. 부패와 성장변동성 - 실증분석	91
3. 부패와 경제위기 - 실증분석	96
제3절 청렴과 각종 사회·제도적 변수의 관계	101
제6장 청렴이 경쟁력 및 국가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4
제1절 청렴과 경쟁력, 국가브랜드	104
1. 개 요	104
2. 청렴과 경쟁력, 국가브랜드 간의 상관관계	106
제2절 청렴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09
제3절 청렴이 국가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113
제4절 청렴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작·간접적 효과	117
제7장 청렴과 국가적 품격 및 성장여건	122

제1절 국가적 품격 제고를 위한 청렴의 활용	122
제2절 반부패정책의 실천적 대안 제시	123
1. 반부패 국제동향	123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반부패 담당기관 현황	127
3. 반부패 운동의 성공 및 실패 사례	139
제3절 사례연구 - 반부패 교육을 통한 청렴도 제고	145
1. 우리나라의 부패방지교육 사례	145
2. 해외의 부패방지교육 사례	152
제4절 반부패운동의 국가브랜드化	160
1. 『아태지역 반부패 선도국』 국가이미지 확립	160
2. 국가신인도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제홍보 강화	162
제8장 결론	164
제1절 청렴 제고의 효과와 필요성	164
제2절 적정수준의 청렴도 달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	168
제3절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170

표 목 차

<표 2-1> 우리 사회 부패 발생 원인	9
<표 4-1> WEF의 세계경쟁력지수 작성에 사용된 부패관련 설문	44
<표 4-2> IMD의 국가경쟁력지수 작성에 사용된 부패관련 설문	45
<표 4-3> World Bank의 부패관련 설문	46
<표 4-4> TI-CPI 작성에 사용된 원천자료(예시)	50
<표 4-5> Kaufmann et. al.(1999a)의 부패지수 작성에 사용된 개별지수	52
<표 4-6> 국가경쟁력지수의 종류와 특징(2008년 기준)	56
<표 4-7> WEF의 경쟁력 평가체제의 변화	57
<표 4-8> WEF의 부문별 평가구성요소 변화: Global CI 기준	58
<표 4-9>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요소	60
<표 4-10> 우리나라 국가브랜드지수의 현 주소(2008년 기준)	62
<표 5-1> 부패와 성장손실	66
<표 5-2>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1980~2007년) : Pooled OLS	86
<표 5-3>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1980~2007년) : 고정효과 모형	87
<표 5-4> 부패가 경제성장 동력에 미치는 영향(1980~2007년)	90
<표 5-5> 부패와 성장변동성: 기간별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	93
<표 5-6> 부패와 경제위기: 프로빗 회귀분석 결과	98
<표 5-7> 제도적 변수 간의 상관관계 (1990~2006)	101
<표 5-8> 제도적 변수와 경제성장 - 정량적 분석결과	102
<표 5-9> 한국의 경쟁력 항목별 순위	103
<표 6-1> 청렴, 국가브랜드, 국가경쟁력의 상·하위 10% 국가	107

<표 6-2> 청렴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11
<표 6-3> 청렴이 국가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114
<표 6-4>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	119
<표 7-1> 국제기구별 부패방지활동 비교	125
<표 7-2> 우리나라 청렴교육전문가 과정(2009년 기준)	149
<표 7-3> 우리나라 사이버 청렴교육 과정(2009년 기준)	152
<표 8-1>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	166

그림 목 차

[그림 1-1] 우리나라 기간별 성장률 및 요소별 기여도	1
[그림 2-1] 부패의 발생원인	8
[그림 2-2] 부패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	11
[그림 2-3] 부패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및 경로	12
[그림 2-4] 국가브랜드 체계 모형	17
[그림 2-5] 국가브랜드의 전략 모형	18
[그림 2-6]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으로서의 다이아몬드 모델	20
[그림 2-7] 각 결정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21
[그림 2-8] 뇌물로 인한 공무원 징계 및 기소 비율의 변화(1980~2006)	23
[그림 2-9] 뇌물로 징계 또는 기소된 공무원 사건 비율(1980~2006)	24
[그림 2-9] 뇌물로 징계 또는 기소된 공무원 사건 비율(1980~2006)	24
[그림 2-10] 뇌물로 징계 또는 기소된 공무원 수 - 국가, 지방, 기타 공무원(1980~2006) ...	25
[그림 2-11] 우리사회와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	28
[그림 2-12]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부패유형 인식변화	28
[그림 3-1] 소득수준 결정 변수와 채널	32
[그림 4-1] 부패지수의 일반적인 구분방법	41
[그림 4-2] 개별지수와 집계지수의 관계	42
[그림 4-3] ICRG 부패지수 추이 비교	53
[그림 4-4] 우리나라와 OECD 평균 부패지수(ICRG-Corruption) 추이	54
[그림 4-5] 우리나라와 OECD 평균 부패지수(TI-CPI) 추이	54
[그림 4-6] Anholt 국가브랜드 지수(NBI) 상의 우리나라 브랜드 분석(2008년 기준) ...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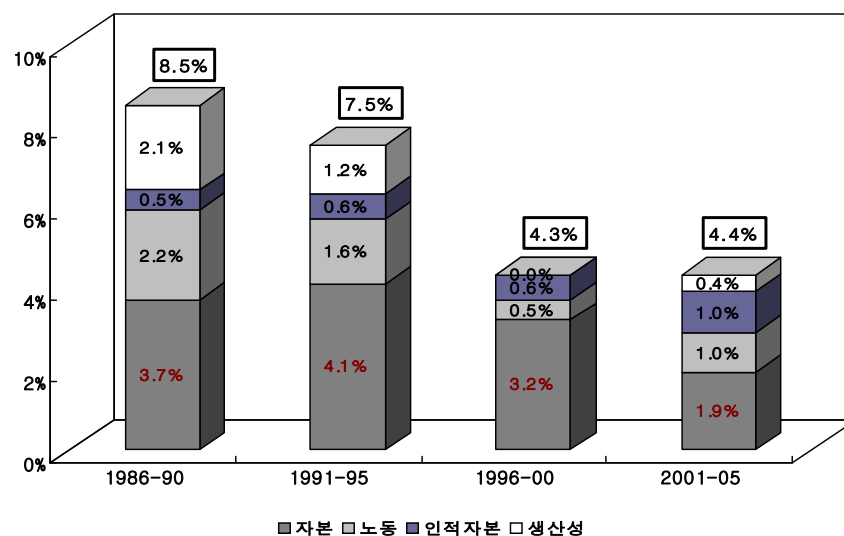
[그림 5-1]	국민소득과 부패지수	65
[그림 5-2]	OECD 국가 부패지수와 평균 경제성장률(2000~2006)	65
[그림 5-3]	절도 동반 여부에 따른 부패	67
[그림 5-4]	뇌물수수의 비용과 편익	74
[그림 5-5]	뇌물수수의 비용과 편익 - 탄력성과의 관계	74
[그림 5-6]	청렴과 GDP 수준 및 GDP 증가율 산포도	82
[그림 6-1]	청렴과 성장동력 및 국가브랜드, 경제성장 간의 관계	105
[그림 6-2]	청렴과 국가브랜드 산포도	108
[그림 6-3]	청렴과 국가경쟁력 산포도	109
[그림 6-4]	청렴지수와 국가경쟁력의 양적 관계 : 한국, 일본	112
[그림 6-5]	청렴지수와 국가경쟁력의 양적 관계 : 한국, 일본	116
[그림 6-6]	청렴지수와 국가경쟁력의 양적 관계 : 한국, 뉴질랜드	116
[그림 6-7]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상대적 비중	119
[그림 8-1]	상탁하청 모형	170
[그림 8-2]	규제 개혁과 경제 성장 효과	172

제 1 장 서 론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은 (i) 높은 경제성장률이 (ii) 상당히 큰 규모의 인구를 보유한 경제에서 (iii) 40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기적’(Lucas, 1992)이라 불리고 있으며, World Bank(1994) 역시 고성장이아시아경제(Highly Performing Asian Economies: HAPE)의 대표 주자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차문중, 2008).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하향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경제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체적인 경제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바, 특히 자본과 생산성의 성장 기여도의 감소 추세와 생산성의 부진은 향후 경제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우리나라 기간별 성장률 및 요소별 기여도



앞서 살펴본 우리 경제의 설비투자 부진과 생산성 저하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불확실성의 증가와 불투명성의 확산으로 인한 비효율의 증가에 기인한다. 결국, 투입 요소의 양적 증가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과 더불어, 경제의 효율성 제고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 정비 및 준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장잠재력을 확충·보강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창업, 투자, 기술개발, 고용 등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즉, 청렴도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제도적 여건이 향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key words가 될 것이라는 관점이 주목받고 있다(차문중, 2008).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정치·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등은 선진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즉, 부패의 척결은 경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며 자원과 생산물의 원활한 이동을 제고하여 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주장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렴도 제고·규제개혁 및 법·질서 준수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하여 각종 위원회 및 부처를 통해 경제환경 개선을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각종 제도적 문제와 제도의 위반으로 인한 부패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바람직한 제도 개혁 및 준수 방향을 논의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청렴의 제고를 통한 (i) 성장기반 확충과 (ii) 국민 후생 증대, 그리고 (iii) 國格의 제고라는 세 축 위에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청렴도와 경쟁력, 국가브랜드에 대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재정리하며,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해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실증분석 및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혁 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하겠다. 이를 통해 성장과 후생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경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대외신인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에 초점을 둘 것이다.

제Ⅱ장에서는 청렴의 다양한 정의와 속성, 발생원인 등에 대해 살펴보고, 청렴이 국가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협의의 제도로써 청렴이 경제성장과 국가브랜드 및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론적인 배경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부패의 현주소와 반부패 운동의 성과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청렴과 관련된 기존 문헌에 대해 살펴보고, 제도변수로의 청렴과 청렴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한다.

제Ⅳ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청렴도, 국가경쟁력, 국가브랜드에 대한 평가방법과 그 특징에 대해 각각 살펴보고, 지수화 과정에서 쓰이는 원천자료와 더불어 어떤 요인들이 평가항목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한다.

제Ⅴ장에서는 청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을 실시한다. 청렴이 경제성장은 물론, 성장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하에 청렴도를 의미하는 부패지수가 경제성장과 성장변동성, 경제위기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청렴과 다른 제도변수들 간의 관계도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제Ⅵ장에서는 청렴과 경쟁력, 국가브랜드 간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청렴이 성장동력은 물론, 경쟁력과 국가브랜드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청렴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제Ⅴ장에서의 실증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성장동력, 국가브랜드, 국가경쟁력 등의 관점에서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였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제Ⅶ장에서는 청렴도의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이러한 노력으로 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제Ⅷ장은 본 연구의 전체적인 논의를 종합하고 결론짓는다.

제 2 장 청렴의 이해

제 1 절 청렴의 정의와 사회적·경제적 의미

1. 청렴과 반부패의 관계

원래 청렴이라는 개념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맑고 욕심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 어원을 살펴보면, 청렴은 우리의 전통적인 8덕목, 즉 청백(淸白), 근검(勤儉), 후덕(厚德), 경효(敬孝), 인의(仁義), 선정(善政), 충성(忠誠), 준법(遵法)을 실천하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가리키는 말인 청백리(淸白吏)에서 유래하였다고 전해진다. 또한, 청렴한 청백리는 대체로 청빈(淸貧)한 생활에 자족했던 것으로 묘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렴성은 부패로부터 거리를 취하는 청백리의 도덕성을 의미하는 정도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좀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염근리(廉勤吏)라는 말도 이용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단지 청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성실하고 근면한 공직자상을 함축하는 의미하고 있다.

실상 청렴과 부패방지의 개념은 외견 상의 의미(sense)만 다른 뿐 그것이 가리키는 실질적인 내용(reference)은 크게 다르지 않다(황경식, 2006). 부패방지를 위해서 청렴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또한 청렴은 개념상 반부패를 의미한다 할 수 있으니 반부패와 청렴이라는 두 개의 개념은 사실상 하나의 지시대상을 나타낸다. 즉, 부패방지로부터 청렴 개념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패-반부패의 개념적 스펙트럼에서 크게 멀어질 수 없다. 단지 부패방지가 부정적·소극적 함의를 갖는데 비해 청렴은 긍정적·적극적 의미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렴과 반부패를 동일선 상에서 살펴보고, 부패가 국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부패의 정의

오늘날 부패의 정의는 공권력의 오·남용, 도덕적 해이라는 광의의 정의로부터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협의의 정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부패의 다양한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패를 뜻하는 영어 ‘Corruption’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는 부패행위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무너지게 한다는 공멸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부패(腐敗)의 한자어의 어원은 공적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원래의 순기능이 썩어 못쓰게 되고 역기능만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패는 세계적으로 정부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으로 보이며, 다소의 부침이 있었으나 부패는 시공을 초월하여 어디서나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원전 2300년경 인도 Chandragupta 지방에서는 관리가 정부로부터 공금을 횡령하는 40가지의 방법을 열거하였으며(Klitgaard, 1988), 고대 이집트 Ramzes IX세 왕조 시대의 파피루스에도 관리들의 뇌물수수 기록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Dashkov, 1995). 또한, 「일본서기」에는 기원전 관리들의 뇌물수수를 기록이 전해지며(오사무 사이트, 1995),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신라 제5대 왕 파사이사금 11년(서기 90년) 사자를 파견하여, 지방 담당관리로서 공사를 게을리하여 전야를 거칠게 한자를 염찰하고 백관의 기풍을 바로잡았다는 기록도 존재한다(감사원 1988).

부패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법학, 사회학, 인류학, 정치학, 경제학 등의 다방면에서 여러 견해가 상존하고 있다. Heidenheimer은 부패가 일어나는 영역에 따라 공직중심, 공익중심, 시장중심 분류하여 부패를 각각 정의하고 있다. 협의의 개념으로서 공직중심 정의를 살펴보면, 부패는 공직자가 사익을 위해 공직을 남용하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 하에 관료부패란 공공생활에서 차지하는 특수한 지위나 공직과 관계있는 영향력이나 권력을 이기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형태나 수괴행위의 모든 형태라고 정의된다(Myrdal, 1971).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부패를 정의하면, 공익중심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즉, 부패는 공직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 하에

서는 관료부패가 실질적인 공공복지에 이익이 되는 행동, 상징, 기구에 대해 합리적, 이성적으로 사심없이 헌신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도덕적 무능력이라 지칭된다(Dobel, 1978). 시장중심 정의에 따르면, 부패는 일반 경제주체들이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맡고 있는 공직자들로부터 특혜를 구매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즉, 부패는 공직자와 일반경제주체들 간의 일종의 거래현상이며, 부패한 일반경제주체들이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로부터 특혜를 구매하는 행위라 정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Leff, Nathaniel, 1964와 Robert O. Tilman, 1968).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하 TI)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부패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또는 ‘공직 지위를 남용한 사적 이익의 추구’로 정의하고 있다. 즉, 부패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돕는 일체의 일탈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부패방지법 상의 ‘부패행위’는 아래와 같은 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로 정의한다(『부패방지법』 제2조 인용).

- (i)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ii)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박재완(1997)에 따르면, 부패의 개념에 관한 주요 논점은 크게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부패의 공급주체를 공직자로 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공직부패와 민간부패는 보완재로서 상호촉진 작용을 하며, 부패의 본질이 주인-대리인 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결국 부패의 공급주체를 공직자에 국한할 실익은 없다고 보인다. 둘째, 부패를 대리인의 행위에 한정할 것인가, 자영업자나 전문 직업인이 뇌물성 급부를 받은 경우도 포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뇌물이 곧 부패의 충분조건이 될 순 없으며, 정부가 규제해야 할 부패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인의 이익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뇌물 등 부패 수요

자의 반대급부가 부패의 필요조건인가 하는 것이다. OECD 권고안이나 각 국의 형법과 부패방지법 등은 대부분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요자의 반대급부가 부패의 필요요건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대리인의 부작위 또는 대리인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금품수수도 부패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떡값’이나 대가없는 향응, 접대 등도 부패에 대한 기대 형성은 물론, 서비스 공급의 차별화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규제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위에서 논의한 4가지 논점을 종합하여 Tanzi(1995)의 정의를 대리인의 경우로 한정하여 부패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도 제기된다(박재완, 1997). 즉, 부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독립주체원칙(*arm's length principle*)¹⁾을 어기는 대리인의 도덕적 위해’로서 공급자인 대리인의 작위 여부와 수요자(유발자)의 반대급부 유무를 불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부패의 자율적 규제 또는 예방에 초점을 둔다는 정책적 의미를 내포한다. 특히, 구조적 부패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어떤 의미에서 불가피하게 부패에 연루되는 경우로 아래와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낮은 보수와 생계비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서의 생계형 부패,
- 떡이사슬과 같은 부패구조에 편입된 대리인이 자기방어를 위해 부패 공급자로서 개입되는 부패,
- 경쟁자에 대한 비교열위를 회피하기 위한 상황순응적인 무리 추종행태(*herd behavior*)로서 부패 수요자가 선택하는 구조적 부패

3. 부패의 속성과 발생원인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해 부패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초래한다는 근본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부패의 속성은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집약된다(권익위, 2004). 첫째, 공급자와 수요자의 합의에 의한 불법·부당 행위라는 점이

1) 국제조세분야에서 특수관계기업 간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의 조작을 통해 세전소득을 축소시킨 경우에, ‘경쟁적인 시장에서 독립적인 기업 간에 체결된 정상적인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과세소득을 조정하는 원칙을 일컫음.

다. 즉, 부패는 양측 합의에 의해 자행되므로, 어느 쪽을 겨냥한 반부패 정책이 보다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이다(Luksetich and White, 1982). 또한, 피해가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므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피해를 직접 그리고 즉시 인식하기 어려워 심리적 불안감과 죄의식을 이완시킨다는 점도 부패가 가진 심각함을 대변한다. 둘째, 재량권 남용 등 불완전 경쟁체제 하에서 나타난 지대 추구행위라는 점이다. 부패 가능성과 정도는 독점력에 따라 증가하고, 이러한 독점력은 시장에 대한 정부규제가 강력할수록 증가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셋째, 자기 강화적인 관성에 의하여 확산효과(Snowfall Effect)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Tower(1989)와 Cowell(1990) 연구는 자기강화적 속성으로 인해 부패의 파급수준은 복수의 안정적 균형점에 귀착하거나 순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패는 개인적 측면에서 이기적 욕심 등 인간 본성에 의해 유발되며, 사회적으로 사회집단은 각각의 목적함수를 가지며 집단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활동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부패의 발생원인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측면의 발생원인이다. 시장 진입 제약, 독과점, 인허가 특혜 등으로 대변되는 정·경·관 유착구조, 지역구 관리나 지방선거 비용 마련을 위한 고비용 정치구조, 비경쟁구조, 개방체제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제도적·운영적 측면의 발생원인이다. 부패는 행정과정 미공개하거나 시민참여 미흡하고 행정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과정의 투명성 부족, 애매하고 과도한 재량 법령,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에 기인한다. 셋째, 사회문화적 측면의 발생원인이다. 예를 들어, 온정주의, 연고주의에 기초한 사회 문화나 접대, 촌지, 청탁 관행 등 부패 유발적 사회 관행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윤리·도덕적 측면의 발생원인이다. 공·사 구분 불분명, 도덕 불감증, 고발의식 미약,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본다’는 잘못된 의식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림 2-1] 부패의 발생원인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가이드」, 2004.

우리나라의 경우 부패발생 원인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부패에 대한 관용적인 사회문화, 정치과정의 문제점,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이 지적하기도 한다(권익위, 2008). 권익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부정부패에 대해 관대한 처벌이 부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부패에 대한 관용적인 사회문화와 불합리한 법·제도, 행정규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공무원은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개인의 윤리의식과 관용적 사회문화를 지적한 반면, 기업인, 외국인, 여론선도층은 부패에 대한 관용적인 사회문화와 불합리한 법·제도, 행정규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부패를 유발하고 있음이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전반적인 청렴도 제고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2-1〉 우리 사회 부패 발생 원인

(단위 : %)

부패발생원인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		외국인		여론 선도층
	07.11	08.10	07.11	08.10	07.11	08.10	07.11	08.11	0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22.7	24.1	10.4	12.9	21.5	-	8.5	-	21.0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	20.0	23.0	17.9	19.6	23.3	-	30.0	-	28.4
각종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의 부패구조	13.6	17.4	28.6	35.6	14.5	-	19.5	-	11.0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19.6	17.3	22.6	15.9	15.5	-	15.0	-	13.9
각종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 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	20.3	17.0	17.7	15.3	23.0	-	22.5	-	24.7
기타	2.6	-	1.9	0.3	1.3	-	1.5	-	1.0
잘 모름	1.2	1.2	0.9	0.6	0.9	-	3.0	-	-

Tanzi(1995)는 부패발생원인을 공직자와 대중이 제공하는 원인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부패의 가능성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부패행위자(공직자)가 제공하는 원인으로, 관료제 관행, 공무원 저임금, 벌금제도, 권력집중도, 법률과 업무

절차의 투명성 수준, 상급자 혹은 지도자의 행태 등을 제시하였다. 자발적·비자발적 이유로 부패를 필요로 하는 민간인(대중)이 제공하는 원인으로는 규제와 권한, 조세제도의 특성, 공공예산 집행 제도, 비현실적인 공공구매 가격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공공권력의 권한집중과 규제가 강할수록 부패 가능성은 높아지고 민간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권력의 벽을 높게 느낄수록 부패를 강제당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4. 부패가 국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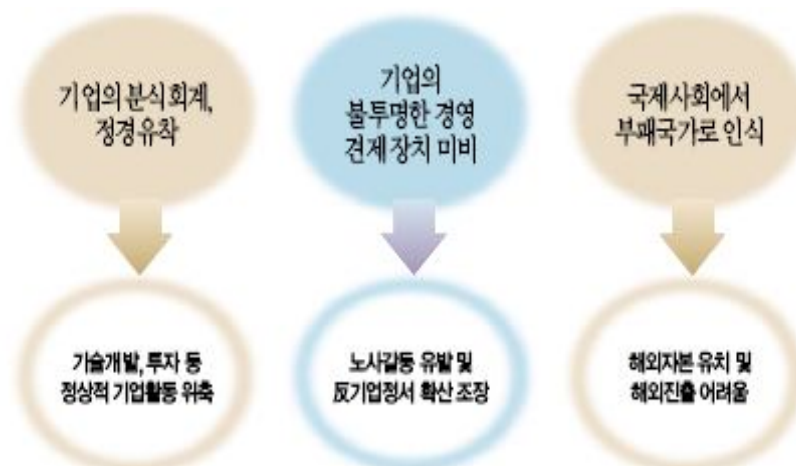
부패는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즉, 국제적인 거래와 계약에 만연된 부패가 자유롭고 투명한 공정경쟁을 해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불러와 궁극적으로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반부패정책에 관한 새로운 방지시스템을 시행 중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적인 추세로 자리잡게 되었다.

부패는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활기차고 역동적인 선진 경제』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기업의 분식회계, 주가조작, 비자금 조성, 정경유착을 통한 편법 경영 등이 성행함에 따라 시장참여비용을 높이게 되므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의 정상적인 기업활동 위축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부패기업의 비민주적·불투명한 경영, 대내외 견제장치의 부재로 인해 노사갈등 유발 및 반기업적인 정서의 확산을 조장한다. 부패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국가 간 자본이동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부패국가로 인식될 경우, 해외자본 유치 및 자국기업 해외진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도 초래하게 된다. 특히 부패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 추진 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부패의 만연은 정부에 대한 냉소주의, 정부정책의 수용성 저하, 행정서비스의 부진 및 행정가격의 상승 등을 초래한다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정부정책의 일관성·예측 가능성을 훼손되어 정책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부패의 만연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특히

행정비리, 촌지문화의 확산, 교육부패, 병역비리, 법조비리, 의료계 부조리 등 사회 모든 분야로 부패가 확산될 경우, 국가 및 사회운영시스템의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법질서를 우회하는 각종 기회주의를 양산하게 된다. 또한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결국, 부패에 대한 사회의 자정능력을 약화시켜 부패의 고착화를 초래하고, 근로의욕 저하, 계층간 갈등과 위화감 조성, 찰나주의·퇴폐주의·한탕주의 만연 등 가치기준이 전도될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 사회 후생 증대를 위해 쓰여야 할 자원을 낭비하여 취약계층 등의 사회적 불만을 고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에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고위직 부패는 사회계층 간의 갈등·대립과 균열을 조장함으로써 국민통합 달성을 방해한다. 결론적으로, 부패는 개인이나 조직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 법칙이 부패문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1997년 경제위기가 그동안 압축성장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은 각종 부패의 축적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그림 2-2] 부패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가이드」, 2004.

전통적으로 부패는 효율성, 소득, 투자 등의 경제변수와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다양한 연구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청렴도 지수 1단위가 증가하면 국민 1인당 GDP가 2.64% 상승한다는 George and Davoodi(2000) 연구와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패지수 1단위 감소하면 해외투자 0.2% 상승한다는 Shang Jin Wei(2000)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2000년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국가청렴도가 싱가포르 수준에서 말레이시아 수준으로 떨어지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100% 감소한다는 분석결과도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2001년 미 이코노미스트지의 분석 결과는 부패한 정부가 테러보다 경제환경을 더 위축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부패로 보통 GDP의 3~5%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 2-3] 부패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및 경로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가이드」, 2004.

부패가 가지고 오는 악영향에 대한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일각에서는 부패가 사회의 필요악으로 작용함으로 인해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을 부패 순기능 이론(Nathaniel H. Leff, S. Huntington)이라고 하며, 즉 일정한 조건에서 부패가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급에 비추어 공공서비스 가격이 낮게 책정된 경우에 웃돈 또는 급행료는 서비스 가격을 정상화하여 시장의 자원배분기능을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도 제시되었다(Lui, 1996;

Becker and Stigler, 1974). 또한, 부패를 통해 정부의 과잉규제나 악법을 우회함으로써 효율을 높일 수도 있다. 부패한 대리인은 '잔여이익 청구인(residual claimant)'의 입장에서 부패의 과실을 성과급(piece rate)으로 향유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공직을 매매하는 관행도 매직한 대리인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는 측면이 존재하기도 한다(Tullock, 1996). 부패는 그 모양인 불법행위의 확실성을 증대시켜 불법행위자의 위험프리미엄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부패 순기능은 차선의 선택으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국한되며 오히려 경제적 효율에 끼치는 역기능과 그 경로가 훨씬 다양하게 존재한다. 부패의 역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부패는 낭비적·소모적 지대추구 행위, 즉 직접적으로 비생산적인 이윤추구행위를 유발하여 자원배분을 왜곡하게 된다. 결국 비효율적이지만 친교적 자본과 지대추구의 노하우 등이 축적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현상을 파생하게 된다(Murphy, Shleifer and Vishny, 1993). Shleifer and Vishny(1993)는 만약 1명의 고위관리에 게 경제전체의 부패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 뇌물은 세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물품세와 경제적 효율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관료부패는 조세 등 정부수입을 감소시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세율 인상 및 세목 신설을 유도함으로써 인해 성실 납세자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부패는 감시비용, 집행비용 등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부패의 대상 분야, 업무, 제품 간 부패비용의 격차로 인해 대리인이 특정 분야나 제품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진입 차단 등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불확실성 하에서 사안이 진행되는 경우 당사자가 위험회피적이라면, 부패는 위험 프리미엄만큼 추가로 비용이 소모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부추겨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 질서확립수단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조직 내에서 공유되는 구조적 부패는 무임승차(free riding) 유인의 역할을 하여 조직의 비용통제 장치를 약화, 방만한 지출을 초래한다. 남의 행동을 모방하는 무리추종 행태는 각자의 행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보에 덜 반응적이도록 하고, 다른 경제주체에게도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Banerjee, 1992). 마지막으로 부패한 대리인은 '조사농사(Tax Farming)'의 경우처럼 과잉근무하거나 함정수사 또는 범죄대기처럼 파행근무하는 폐단을 초래할 수도 있다.

앙골라 정부수입의 90%는 석유 산업에서 발생하지만, GDP의 40% 정도가 재무성에 도달도 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케냐의 도시 거주민은 한 달 평균 16회 뇌물을 공여하며, 이 금액의 총액은 매월 미화 \$104로, 서베이 응답자의 한 달 평균 월급 US\$331의 1/3에 달한다. 이들이 공여하는 뇌물의 99%가 공무원에게 간다. 이 중 최악은 경찰로, 뇌물의 6/10 이 경찰에게 공여된다.(TI(www.tkenya.org))

필리핀의 기업인들은 기업 순소득의 2%를 반부패프로그램에 출연할 의사가 있다. 이들은 부패의 척결로부터, 순소득이 약 10% 상승하고, 계약 비용이 10%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Social Weather Stations (2001, from Philippines Daily Inquirer, 2002)).

자료 : 차문중(2008)

제2 절 청렴과 성장잠재력 및 국가브랜드

1. 제도와 경제성장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는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주제일 것이다. 경제성장에 관한 논의는 경제학의 시조인 아담 스미스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분업과 시장의 크기가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의 경제성장론은 신고전파 경제이론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경제모형과 구체적인 실증분석의 결과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 신고전파 경제성장론은 경제학에서 엄격히 검증된 최초의 연구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신고전파 경제이론에 입각한 성장률 추정식에 포함되는 주요 변수들로서는 자본과 노동을 들 수 있다. 신고전파 경제학자로서 경제성장을 연구한 솔로우에 따르면 외생변수인 저축과 인구 성장이 정상상태에서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이다. 그러나 솔로우모형의 문제점은 기술발전, 인적 자본 등 경제성장을 결정짓는 중요요인이라고 간주되는 변수들을 모형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제발전에 있어서 기술발전을 내생화시킨 논문들이 1980년대 후반부터 출판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내생적 경제성장 (Endogenous economic growth) 이론이라는 경제학적 분석들이 자리잡게 되었다. 예를 들면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의 선구자라고 불릴 수 있는 로머(Romer, 1987, 1990)는 연구개발부문에서의 지식의 축적이 기술발전을 야기하고 그 결과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은 실증적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맨큐·로머·와일(Mankiw, Romer and Weil, 1992)은 솔로우 경제성장모형을 변형, 인적자본의 대리변수인 교육을 포함시켜 경제성장의 국가간 횡단면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솔로우모형의 예측과 같이 저축률은 여전히 유의한 변수이지만 교육이라는 인적 자본의 대리 변수도 대단히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실증분석은 자본과 노동, 그리고 교육이라는 세 변수를 성장추정식의 핵심변수로 포함하여 진행되었다.

한편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의 추정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제도와 정책, 그리

고 지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세모글루·존슨·로빈슨(Acemoglu, Johnson and Robinson)은 장기 경제성장에 있어 제도가 갖는 중요성을 구 식민지 국가들의 “운명의 역전(reversal of fortune)”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인구가 조밀하고 경제가 발전되어 있던 식민지 국가들에는 유럽 정착민들에 의하여 착취형 제도가 이식된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는 장기 발전형 제도가 이식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들 국가 사이에서 발견되는 경제 성장 수준의 차이는 바로 이식된 제도의 결과라는 주장이다(Acemoglu, Johnson, and Robinson 2001, 2002). 이와 같이 경제성장에 있어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논문들은 이 분야에 있어 선구적 연구자이었던 노스(North, Douglass, 1990), 윌리엄슨(Williamson, Oliver, 1985)의 이론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 많은 실증적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또한 지리적 위치가 경제성장에 차지하는 영향에 주목한 연구(Gallup, Sachs, and Mellinger, 1999), 내생적 경제성장 이론에서 강조한 인적 자본의 중요성과 이를 장려하는 정책의 기여에 대한 실증적 연구(Glaeser et al. 2004)들도 경제성장은 복합적 요인들이 결합되어 일어난 성과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는 청렴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추정함에 있어 다음의 사실들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첫째, 경제성장의 회귀식에는 기존의 문헌들이 강조한 변수들, 즉 자본과 교육, 제도와 정책 관련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부패와 경제 성장 사이의 관계를 추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누락된 변수가 부패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패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과대추정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둘째, 경제성장 이론들에서 제시하는 주요 독립변수들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성장회귀식의 자료는 장기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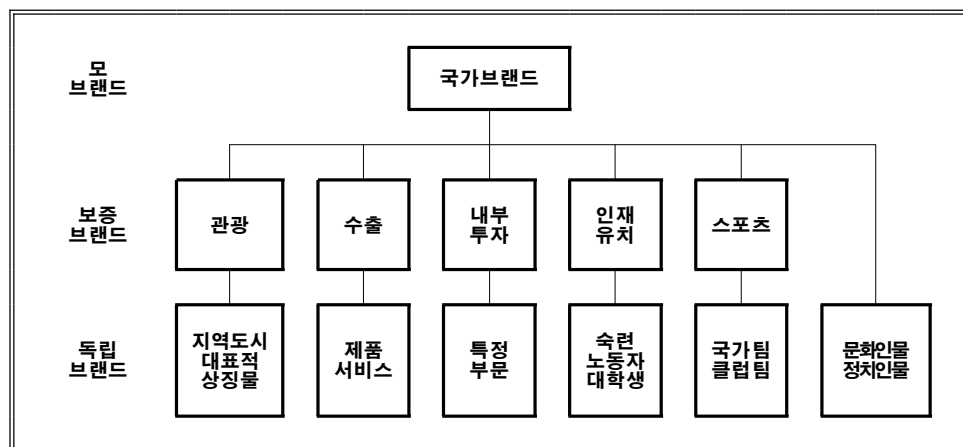
2. 국가브랜드와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

국가브랜드와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일천하다. 이는 그동안 이를 계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결정요인과 같이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이론적 연구가 불충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브랜드와 경쟁력은 국가라는 거시적 차원에서가 아니

라 미시적 차원, 즉 기업이나 산업의 성과 지표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국가브랜드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거시적 변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미시적 차원에서의 브랜드와 경쟁력의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를 이용하면서 그것을 거시적 차원으로 변환시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브랜드와 경쟁력의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접근법을 취한다. 또한 경제성장 이론의 틀 안에서 국가경쟁력과 국가브랜드의 결정요인을 이해함으로써 이 장에서 사용되는 실증적 분석의 틀을 일관성있게 유지하고자 한다.

브랜드의 결정 요인에 관한 대표적 연구로서 Olins(1989)를 들 수 있다. 그는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단일구조(monolithic), 보증구조(endorsed), 브랜드화된 구조(branded)로 구분하여 브랜드를 체계화 하였다. 단일구조에는 단 하나의 지배적인 통합 모(母) 브랜드(umbrella brand)가 존재한다. 따라서 단일구조상의 브랜드는 각기 다른 시장으로부터 추출된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창출한다. 보증구조는 개별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모 브랜드에 의해 보증을 받는다. 즉 보증구조상의 브랜드는 자신만의 개별적인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모 브랜드가 창출하는 영향력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브랜드화된 구조는 각각의 브랜드가 자신의 정체성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모 브랜드의 영향력으로 부터는 독립되어 있다. 즉 브랜드화된 구조상의 브랜드는 모 브랜드와 제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만큼 차별화되어 있다. Dooley and Bowie(2005)는 이러한 브랜드 구조를 남아프리카 국가의 브랜딩에 적용하여 국가브랜드 체계 모형을 구체화 하였으며, 이는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그림 2-4 참조).

[그림 2-4] 국가브랜드 체계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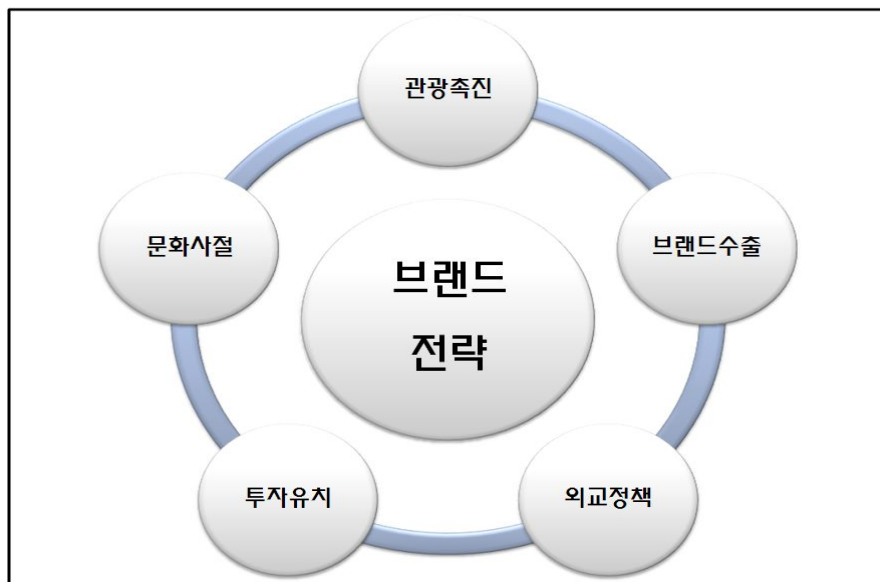


자료: 디니(2009), p.286.

위 그림에서 모(母) 브랜드는 ‘국가브랜드’를 나타내며, 그 하부 구조인 보증 브랜드는 관광, 수출, 내부투자, 인재유치, 스포츠로 구성된다. 국가 브랜드 체계 모형은 상부구조와 보증구조, 독립구조를 포함하는 하나의 브랜드 체계로서 관광, 인재 유치, 수출 등 각기 다른 하위 브랜드는 서로 연계되어 국가브랜드라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한편, Anholt(2003)는 관광 촉진, 브랜드 수출, 외교 정책, 투자 유치, 문화사절 등의 전략을 통해 국가브랜드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림 2-5 참조). 즉, 광고와 문화교류를 통해 관광을 촉진시키고 문화를 사절하며, 각종 정책 활동과 무역 관계를 통해 수출을 증진시키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각종 전략을 통합함으로써 강력한 국가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Anholt(2003)도 Dooley and Bowie(2005)와 같이 국가브랜드를 모 브랜드로, 개별 분야에서의 브랜드를 보증구조 브랜드로 이해하는 동시에 개별 브랜드가 모 브랜드에 의해 보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개별브랜드가 모 브랜드를 형성, 강화시키는 이른바 모 브랜드와 보증 브랜드 사이의 양방향 작용이 가능함을 상정하고 있다.

[그림 2-5] 국가 브랜드의 전략 모형



자료 : Anholt(2003), p.186.

이상의 논의는 국가브랜드의 결정요인으로서 다음의 변수를 고려해야 함을 시

사한다. 첫째는 투자이다. 투자의 증가는 기업의 발전과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외국인들은 한 국가의 기업이나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을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는 기업 브랜드의 형성과 성장을 자극하여 국가브랜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수출은 높은 국가 브랜드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이다. 즉 제품이 만들어져 해외로 수출되면 이를 구매의욕을 가지고 살펴보거나 실제 구매, 사용한 외국인들이 그 제품이 생산된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되면 이는 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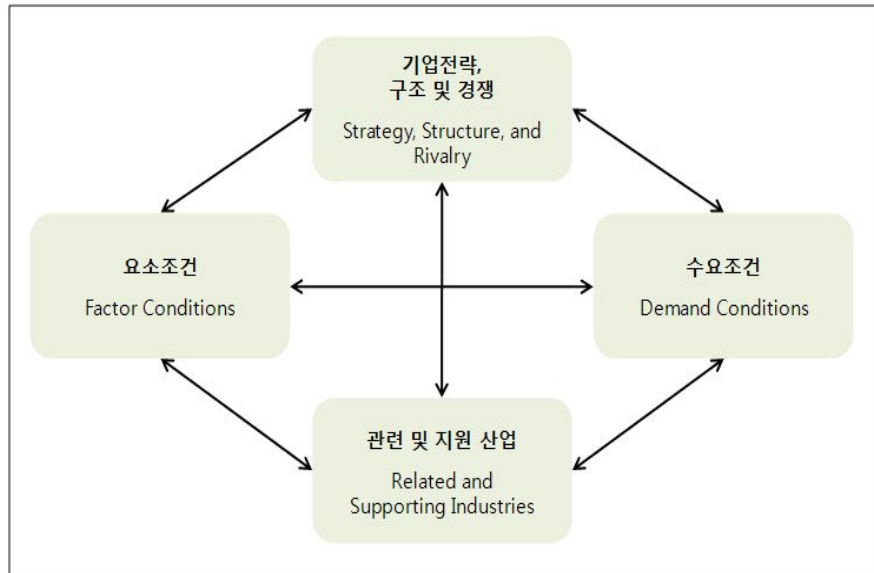
셋째, 인적 자본의 질이다. 인적 자본이 우수할수록 이들과 외국인들의 접촉을 통해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에 유학하는 학생들의 높은 학업열과 성취도는 그 학생의 출신 국가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한 나라의 경제수준도 국가브랜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한 국가의 성과나 관광 수입 등도 일인당 국민소득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다섯째, 한 국가의 제도의 질이 높을수록 그 국가의 브랜드 가치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안홀트의 모형에서 제시한 외교정책이나 문화사절 등의 질도 그 국가의 제도적 수준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의 연구와 관련시켜 볼 때, 한 국가의 부패는 제도의 질의 중요한 결정요인이자 가늠자이기도 하다. 즉 부패가 높은 나라일수록 제도의 질이 낙후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사실과 부패의 증가가 수출 및 투자 감소를 유발한다는 기존 연구를 동시에 고려할 때 부패와 국가 브랜드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은 현대 국가경쟁력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Porter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그에 따르면 국가경쟁력이란 국내 산업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조동성·문휘창, 2006). 즉, 국가경쟁력이 높은 국가란 국내 산업이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고 이를 계속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내여건을 조성해 주는 국가를 의미한다. Porter는 이러한 국내여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다이아몬드 모델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새로운 국가경쟁력 모델을 제시하였다(그림 2-6 참조).

[그림 2-6]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으로서의 다이아몬드 모델



자료 : Porter(2009), p. 133.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특정 산업에서 국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국가는 ‘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 및 지원 산업’, ‘기업전략, 구조 및 경쟁’ 등 4가지 속성에 있어 기업들이 경쟁하고 경쟁우위의 창출을 촉진하는 환경을 형성하는 국가라고 Porter는 주장한다. 이러한 속성은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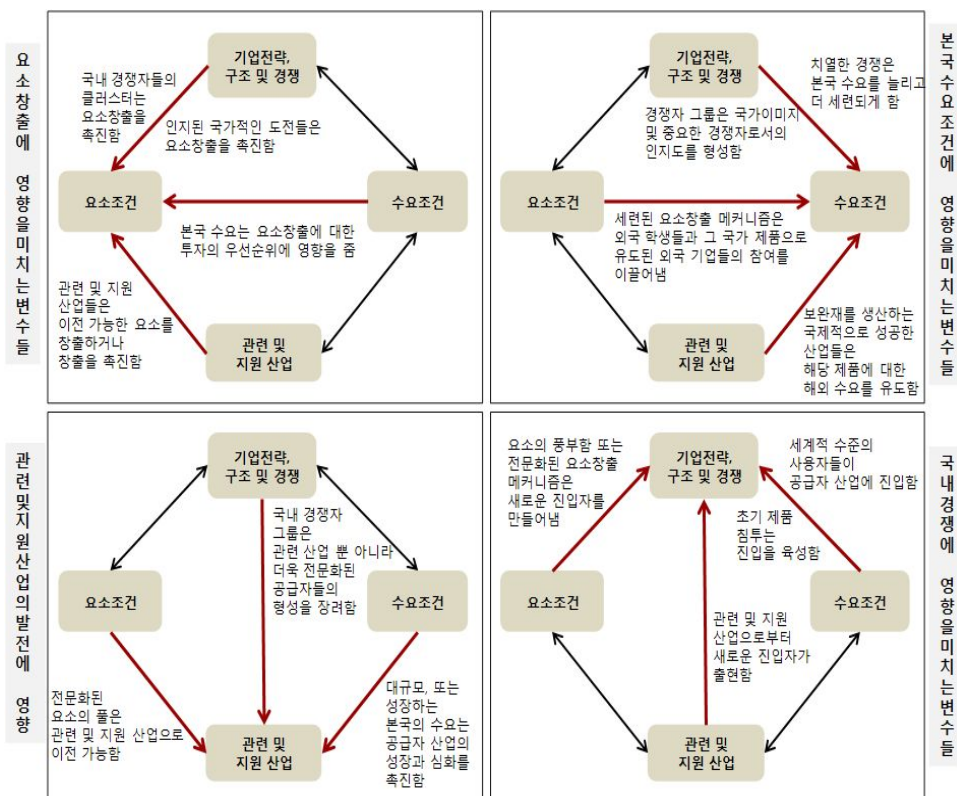
- 요소조건: (주어진 산업에서 경쟁하기 위해 필수적인) 숙련된 노동자나 인프라와 같은 생산요소에서의 국가 포지션
- 수요조건: 해당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본국 수요의 특징
- 관련 및 지원 산업: 해당 국가에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지원 산업들과 관련 산업들의 존재 또는 부재
- 기업 전략, 구조 및 경쟁: ‘기업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조직되며 관리되는가’를 지배하는 국가의 여건과 국내 경쟁의 특성

이 네 가지 결정요인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한 국가의 기업들이 생겨나고 경쟁하는 여건을 창출한다. Porter는 상위 4개 결정요인들을 ‘다

이아몬드' 구조로 설명하면서 이 각 요소들은 상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강화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한다. 즉 하나의 결정요소의 효과는 다른 결정요소들의 상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리한 수요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경쟁의 상태가 취약하다면 그 기업은 경쟁의 우위를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 산업의 경쟁우위를 육성하는데 있어 국가 우위의 결정요인들은 서로를 강화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화해 나간다. 이러한 상호강화작용이 진행되면서 다이아몬드 모형의 양방향의 화살표가 시사하듯이 각 결정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는 불명확해진다.

또한 Porter는 각 결정요소가 다른 결정요소들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별적인 요소들이 하나의 동적인 시스템으로 결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7 참조).

[그림 2-7] 각 결정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자료 : Porter(2009) pp. 213-225.

Porter의 논의를 국가차원에서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인적 자본과 그 나라의 요소 및 수요 조건 등과 경쟁,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 나라의 요소 및 수요 조건 등이 양질의 인적 자본과 국내외적인 경쟁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그리고 국가의 정책이 이를 잘 뒷받침할 때 국내산업의 생산성이 제고되고 이것이 국가 경쟁력의 바탕이라는 것이다. 즉 각 국가는 자신들이 처한 특수한 이점을 활용할 수 있으며 거기에 적합한 성장모형을 찾아 추구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Porter의 국가경쟁력에 관한 논의를 직접적인 방식으로 실증 분석하기는 어렵다. 그 주된 이유는 Porter의 이론이 다양한 국가들의 성장 경험을 관통하는 공통적 특성을 제시하기보다 각 국가별로 다양한 사례의 존재라는 개별 국가적(country-specific) 요소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식의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경쟁의 정도가 높고 인적 자본의 질이 우수하며 국가 제도나 정책이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국가경쟁력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한 국가의 국내외 경쟁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경쟁의 정도를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의 비중, 그리고 GDP 대비 자본량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가경쟁력과 국가브랜드, 그리고 다음에서 살펴 볼 경제성장의 결정 요인들은 거의 중첩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브랜드나 국가경쟁력을 각각 설명하는 별도의 추정식을 사용하기보다 이들 양자에 거의 동일한 독립변수가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청렴 수준이 위에서 살펴 본 기존의 독립변수에 추가되어 국가브랜드, 국가경쟁력의 결정 요인이 된다는 가설에 입각하고 있다. 즉 청렴 수준은 외국 소비자가 인지하는 국가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경쟁력이나 국가 브랜드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렴이 직접적으로 국가경쟁력과 국가브랜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다른 변수를 통해서 이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의 청렴수준은 거래비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투자나 인적 자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청렴 수준은 일국의 제도의 질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러한 해석은 다음에서 살펴 볼 부패와 경제성장에 관한 논의에도 해당되며 이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도 이러한 해석을 지지한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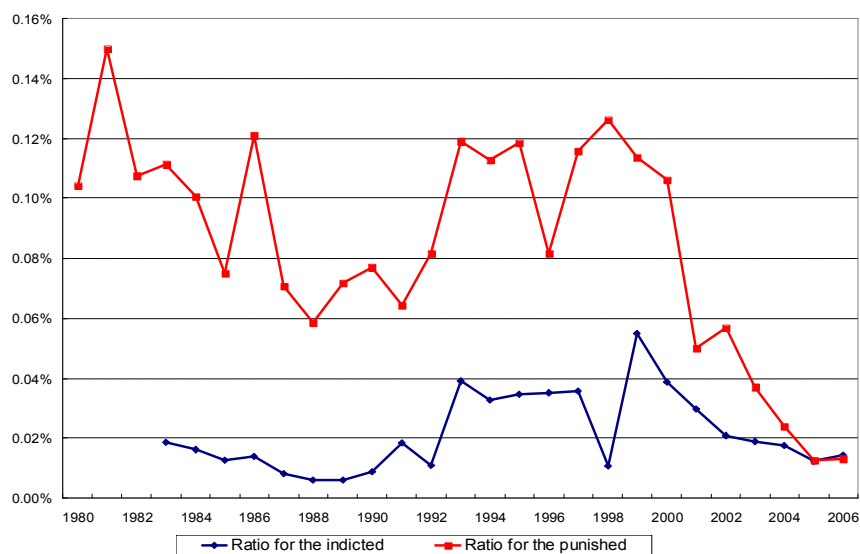
제4 절 우리나라의 부패현황 및 반부패 운동의 성과

1. 우리나라 부패 현황 및 반부패 운동의 현주소

최근 우리나라의 언론보도와 국민의 관심은 공직자, 정치인 및 기업인의 부정 부패와 비리 또는 부적절한 행동과 관련된 스캔들에 집중되어 왔다. 예를 들어, 대규모 쇼핑몰 사전분양과 관련된 굿모닝시티 비리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SK글로벌 사건, 패스 21과 같은 벤처관련 부패사건(일명 게이트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부패사건은 정치자금을 위장한 뇌물제공, 이권청탁, 사적이익을 위한 직위·권한 남용, 회계장부 조작 등 부패행위가 지능화되고 부패행위 가담자의 범위가 정치인, 공무원, 기업인, 전문직종사자 등 폭넓게 조직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공무원 등의 관료부패는 그 사회적 과장이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안의 중요성이 크므로,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이 뇌물 수수로 기소되고 징계된 비율은 1980년대 후반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한 후,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최고수준에 이른 후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2-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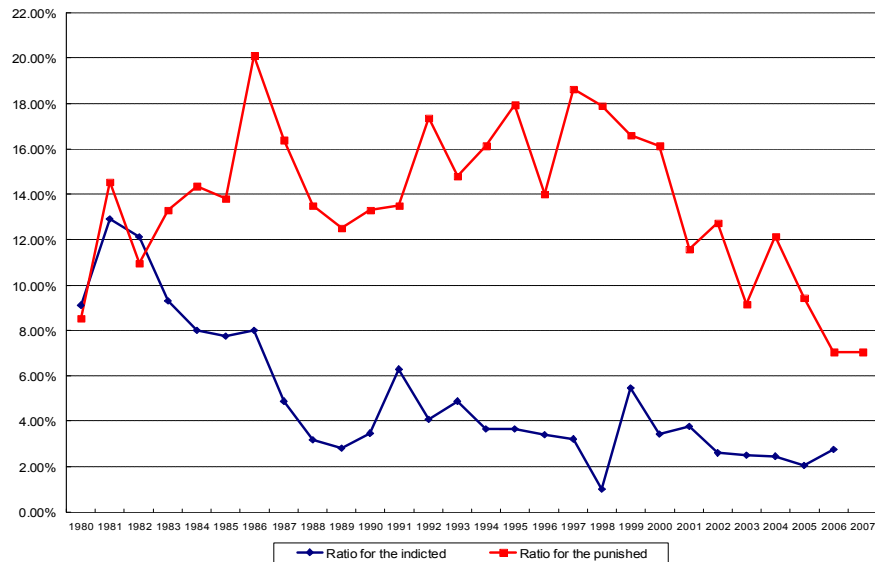
[그림 2-8] 뇌물로 인한 공무원 징계 및 기소 비율의 변화(1980~2006)



물론, 기소 또는 징계비율의 변화는 정부의 반부패 의지, 일선 수사기관의 능력 및 자원 투입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 자체가 우리나라 부패 현황을 정확히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기소 또는 징계된 전체 공무원 중 뇌물 수수에 의한 비율도 대체적으로 전체 공무원 중 뇌물수수에 의해 기소 및 징계된 공무원 비율과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 징계 공무원 중 뇌물 수수 공무원 비율은 1980년대 후반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1997년을 고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기소 공무원 중 뇌물 수수 공무원 비율은 약간의 등락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그림 2-9 참조). 따라서 우리나라 공직의 전반적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경우, 공무원들의 뇌물수수는 감소 추세라고 추정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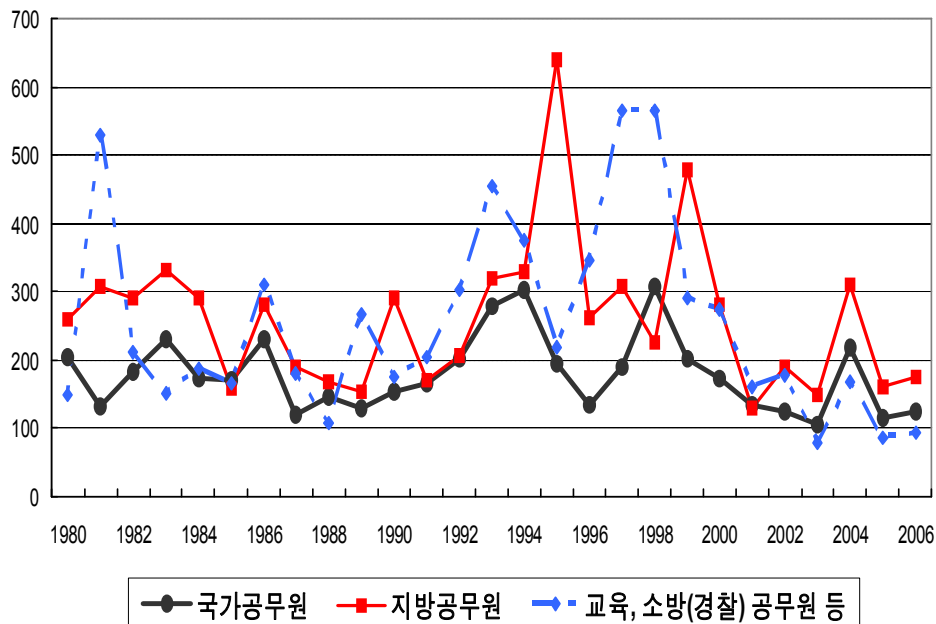
[그림 2-9] 뇌물로 징계 또는 기소된 공무원 사건 비율(1980~2006)



<그림 2-10>은 뇌물수수로 징계된 공무원을 국가·지방·기타(교육, 소방, 경찰 등)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 수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약하게나마 뇌물수수로 징계된 공무원 수가 감소하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모든 그룹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후반(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기)까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 부패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인지, 반부패의지가 강해 적발 징계한 횟수가 증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2-10] 뇌물로 징계 또는 기소된 공무원 수 - 국가,지방,기타 공무원(1980~2006)



한국형 부패의 핵심은 온정주의·연고주의 문화와 결합되어 생활 속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구조화되어 있어 국민의식 개혁 없이는 근원적인 해결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 고위공직자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대정부 신뢰가 저하되고, 도덕적 무감각을 초래하는 악영향을 미쳤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는 어느 한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고 있다.

- (i) 구조적 측면 : 정경유착, 고비용 정치구조, 관주도형 경제정책, 시장진입의 제약
- (ii) 제도적 측면 : 밀실행정, 복잡한 행정절차, 과도한 행정규제, 불공정경쟁

(iii) 문화적 측면 : 온정주의, 연고주의, 잘못된 접대문화, 청탁관행

(iv) 윤리적 측면 : 불분명한 공·사구분, 도덕불감증, 고발의식 미약,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는 잘못된 사회의식 등

또한, 국제투명성기구 등이 연구·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은 아직도 심각하며,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혁이나 부패방지 정책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이 미흡하고 관주도 위주의 대책만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부패방지대책이 그 자체로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채택되어 추진되지 못하고 정치적 목적 또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일시적·방편적 수단으로 시행된 것은 물론, 사전예방적 부패통제기능이 간과되고, 적발·처벌 위주의 사후통제 위주로 부패통제활동이 이루어져 왔다는 한계도 거론되고 있다. 부패 통제기관(사정기관)의 엄정하고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체크하는 견제와 균형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민적 의혹이 큰 부패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불신감이 팽배하는 경우가 아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 우리나라 반부패 운동의 성과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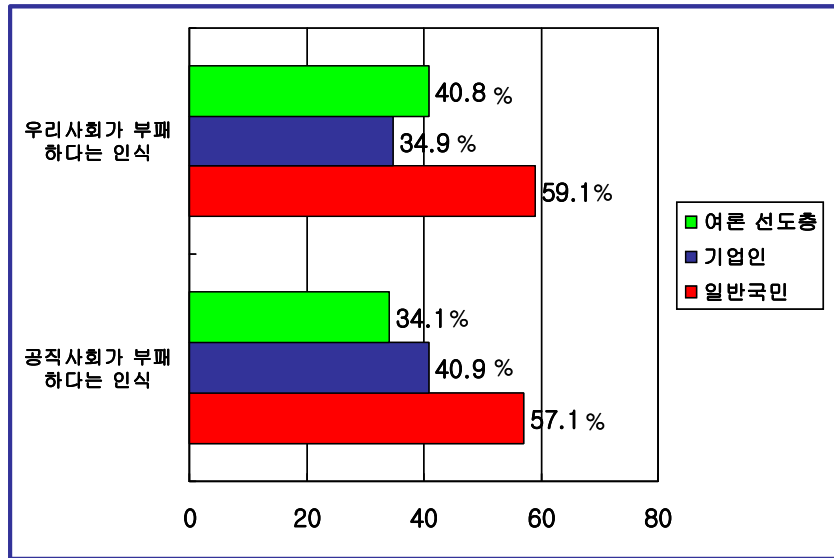
2009년 권익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국민들의 윤리적 기대수준 향상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통하여 내실있는 국민권익 보호 및 대외적 부패인식 변화 등에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우리나라 반부패 운동의 성과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구조적 취약분야의 불합리한 제도·법령이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민생침해 및 국민부담을 유발하는 부패취약분야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주택 공급·관리 투명성, 자동차 보험금 부당청구 등 4건 권고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도 개선하여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9개 기관에서 총 303건을 개선하였고, 878개 제·개정 법령의 부패영향평가 실시, 156개 법령에 대해 256건의 개선 조치를 시행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각급 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추진노력에 대해 촉진함은 물론, 적극적인 지원을 펼쳤다는 점이다. 각급 기관에 '투명행정 추진지침'을 시달하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체계의 개선·측정을 실시하고,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취약기관에 대한 「청렴컨설팅」 실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패신고 처리 및 행동강령에 대한 내실화를 들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로 권익위 출범 이후 974건의 신고 접수처리 ('08.2.29 ~ 10.31) - 부패행위 108건(11.1%), 행동강령위반 62건(6.4%), 일반신고 804건(82.5%) - 외식품, 환경위해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입법 추진 ('09.3 예정), 「공무원 행동강령」 보완을 통한 투명한 공직문화 정립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종교편향 관련 특혜금지('08.11 개정),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등 직무공정성 확보방안('08.12 개정 예정)을 마련하였음을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권익보호 기능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고충민원 접수사안 중 부패 관련사항 35건을 이첩·처리하고, 고충민원, 행정심판 재결례를 활용, 부패요인을 발굴하여 제도개선과제 선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왔으며, 국제적인 평가도 호전되는 성과를 보였다. 먼저 국가청렴도(CPI)는 2007년 43위, 5.1점에서 2008년 40위, 5.6점으로 상승하였고, OECD 뇌물방지협약의 2008년 우수이행국가(16개 국가)로 TI가 우리나라를 지정하였고, 아시아 부패지수(PERC)도 2007년 8위, 6.3점에서 2008년 5위, 5.65점으로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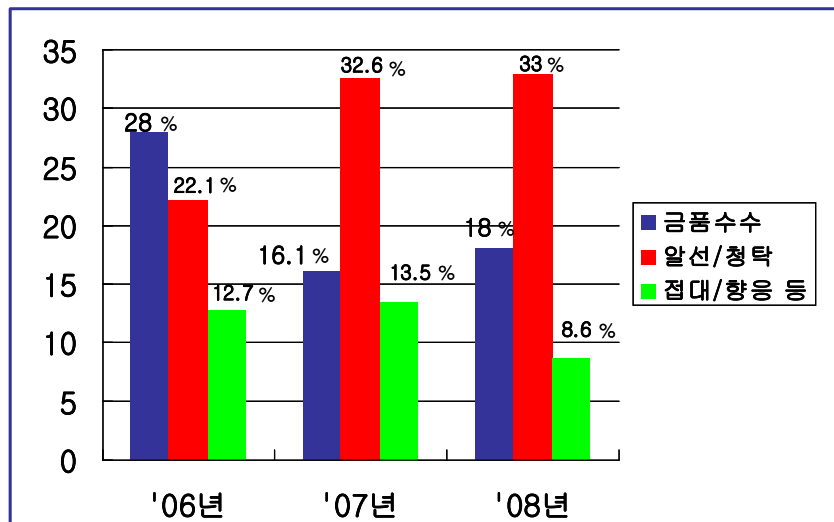
하지만, 2008년 11월에 실시된 부패인식도 조사(권익위)에 따르면, 완전하게 근절되지 않은 부패문제로 국민들의 부패인식 개선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2-11, 그림 2-12 참조). 국회의원 공천, 지방의회 의장 선거 관련 금품수수 등 정치관련 부패문제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으며,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 국방전산망 조달관련 비리, 공기업의 방만 경영·비리 등 구조적 부패가 잔존하고 있다는 인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일반국민 인식은 2007년 57.2%에서 2008년 57.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상태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그 간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에게 부패는 여전히 경영상 장애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업무와 관련된 금품·향응을 제공한 기업인 비율은 19.3%로 나타났지만, 동일 질문에 대한 일반국민의 답변은 2.5%에 불과하였다. 기업활동을 저해할 정도로 부패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국내기업인이 37.6%, 외국인이 58%로 나타났다.

[그림 2-11] 우리사회와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2008. 11).

[그림 2-12]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부패유형 인식변화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2008. 11).

제 3 장

제도 변수와 경제의 관계 - 청렴을 중심으로

제 1 절 제도변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법·질서 준수와 청렴도,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투명성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이러한 변수들을 뭉뚱그려 ‘제도’ 또는 ‘법치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분석 대상이 되는 경제 성과로는 주로 경제 성장을 사용한다. 그러나 ‘제도’와 관계되는 변수들은 쉽게 정량화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경제가 B라는 경제보다 더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쾌히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치주의가 더 확립되어 있을 경우, 몇 배 더 확립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 지배구조(governance)나 제도(institution)와 관련된 변수들을 서베이 등을 통하여 지수화한 변수를 보고 각국의 수준을 판단하고 분석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변수들을 지수화하여 정기적으로 각국의 수준을 조사하고 발표하는 기관으로는 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PRS Group (Political Risk Service), WEF (World Economic Forum), 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WB (World Bank) 등이 있다. 각 기관별로 중점을 두는 사항이 조금씩 다르고, 변수의 정의도 차이가 나지만, **Svensson (2005)**은 부패를 예로 들며 서로 다른 기관에서 발표하는 국가들의 제도 변수의 수준이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어느 기관에서 발표하는가에 관계없이 각국의 제도적 여건에 대해 대체적으로 유사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객관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지

수들을 종합하여 나름대로의 지수를 계산하여 정량적 분석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실증적인 연구의 결과는 (i) 제도와 관련된 변수들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ii) 영향을 미친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분석에 사용된 제도 관련 지수들이 다른 기관에서 발표되어서라기보다는, 분석 대상이 되는 시기와 국가, 사용된 방법론, 그리고 분석에 포함되는 변수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제도(Institution)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직도 모든 연구자 사이에서 완벽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i) 투자의 증대, (ii) 생산성의 증대, 그리고 (iii)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세 채널을 통해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다 각론적으로 각 연구자가 ‘제도’라는 변수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어떻게 개념적·실증적 분석에 사용했는지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제도를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한 대표적인 법경제학자로는 North가 있다. North (1990)는 특히 소유권, 거래비용, 경제조직 등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침을 강조했다. 소유권이 보장되고, 법질서의 준수와 투명성의 제고로 인해 안정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사회가 형성될 경우 이는 투자와 성장을 장려하게 되므로, 결국 ‘institution’이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Knack and Keefer (1995) 역시 좋은 제도가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였다. 즉 계약이 이행되는 확실성의 정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몰수나 징발의 위험 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소유권의 확립 여부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각 경제들의 소득수준이 미국의 소득수준에 수렴하는 속도(수렴률)는 각 경제의 소유권 수준이 명시적으로 회귀식에 포함될 때 매우 높아짐을 보이고 있다.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는가를 설명하는 ‘법치’ 지수는 소유권 및 계약권 등과 깊은 관계가 있고, 보다 크게는 경제를 구성하는 ‘제도’의 가장 큰 요소임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연구로부터 ‘법치’와 ‘제도’가 성장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특기할 사항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간주되어 온 ‘투자’를 컨트롤한 후에도 제도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다. 이 결과는 소유권의 보장 등 제도적 여건이 투자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자원배분 등과 연계된) 경제의 효율성 증대 등에 기여하여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즉 **제도적 여건의 개선은 경제의 가측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보다 더 수익이 높은 사업에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제도’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석에서 ‘제도’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할 때, ‘제도’가 포함되는 경우, 미국 소득에의 수렴식에서 소득의 계수가 크게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다. 즉 각국의 제도 수준이 명시적인 성장의 요인으로 분석에 포함될 경우, 제도적 여건이 우월한 개도국들이 그렇지 못한 개도국과 비교하여 더 빠르게 미국의 소득수준에 수렴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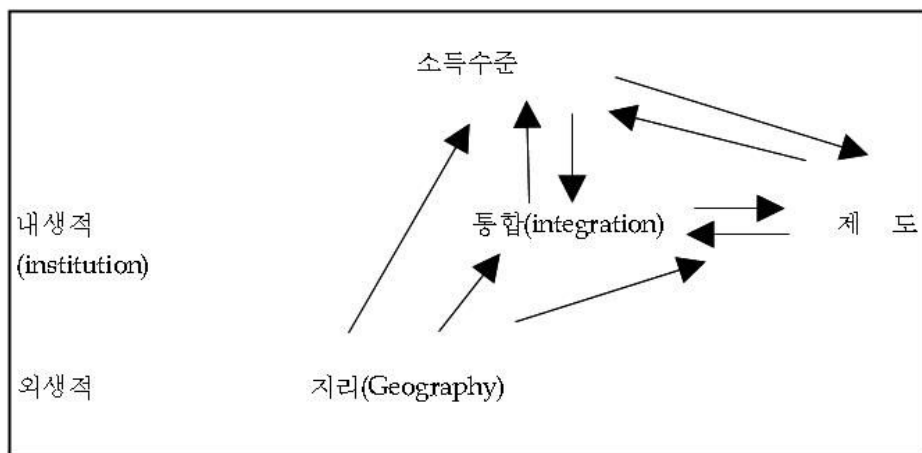
Rodrik (2002)과 Rodrik et al (2003)은 지배구조(제도), 지리, 개방정도 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 분석하여, 지리적 위치나 개방의 정도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라는 기존의 전통적 주장을 반박하고, **“institutions rule”(결국 제도가 지배적인 성장 요인임)**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러한 주장은 Rodrik, Subramanian and Trebbi (2004)의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기존의 성장이론은 물질적 자본, 인적 자본 등에서 성장의 원인을 찾고 있는 반면, 뒤늦게 주목을 받은 ‘내생적 성장이론’의 경우 기술의 변화에 그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자본의 축적과 기술의 발전은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대응 변수일 뿐이다. 성장의 원인을 분석할 때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인적·물질 자본의 축적을 지속하고, 기술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게 하는지, 그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법·질서 체계의 정비 및 준수와 청렴도 제고, 투명성 제고 등은 사회적 신뢰(Social trust) 또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등과 깊은 관계를 지니게 된다. 여기서 사회적 신뢰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같은 재원으로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게 한다. 청렴도, 민주주의 등 제도적 여건이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신뢰가 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해 투자를 증가시키고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채널은 이론적·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신뢰의 부재로 인해 생활의 전반에 스며있는 추정하기 어려운 거래 비용들이 모두 고려된다면 부패 등으로 인한 비용 규모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Rodrik, Subramanian and Trebbi (2004)은 제도(특히 the rule of law), 지리, 교역 등의 변수가 소득수준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제도의 질이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변수로서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3-1] 소득수준 결정 변수와 채널



이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교역이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분석의 틀 안에 '제도'가 고려될 경우 교역이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도가 사실상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인다. 즉 교역의 긍정적인 결과는 사실상 제도가 교역 여건을 결정짓고 이에 따라 성장이 영향 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Acala and Ciccone (2004)는 제도가 교역보다 더 중요한 성장요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약간 견해를 달리한다. 개방이 단순히 수출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역재의 존재로 인한 왜곡을 교정하는 효과까지를 실질개방도로 측정되어 회귀분석에 포함되는 경우, 개방 그 자체가 직접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제도의 질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 방법에 따라 항상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산출물당 자본의 양과 인적자본의 축적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Rigobon and Rodrik (2004)은 경제적 제도, 정치적 제도, 개방도, 소득수준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민주주의와 법치가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법치가 민주주의보다 소득수준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변수들 간의 채널링은, 개방이 소득수준과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법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방이 더 많이 진척된 사회에서 법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법치와 민주주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높은 수준의 법치를 지닌 사회가 민주주의 역시 발전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국가별 특성을 분석한 Butkiewicz and Yanikkaya (2006)는 법치가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Rigobon and Rodrik (2004)과 의견을 같이 하지만, 민주주의는 성장을 제고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결과가 분석 대상 샘플이나 추정방법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제도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제도와 소득 수준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Rigobon and Rodrik (2004)의 분석은, 높은 소득수준이 개방도와 제도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효과가 매우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제도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중 흥미를 끄는 것은 Easterly and Levine (2003)의 연구이다. 이들은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가 분석에 포함되면 거시경제 정책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시 말해, 거시경제 정책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사실상 좋은 제도가 있어야만 좋은 거시 정책이 가능하고, 따라서 성장에 기여한 근원적인 요인은 좋은 제도라는 것이다. Acemoglu et al (2001, p.1395) 역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메이지시대의 일본, 1960년대의 한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제도의 개선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 2 절 청렴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와 유의성

경제에 있어 부패의 중요성은 다른 제도적 변수의 중요성과 더불어 Rigdon and Rodrik (2004), Rodrik, Subramanian and Trebbi(2004), Svensson(2005), Woo(2004) 등의 최근의 연구에서 많이 강조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및 실천적 개혁을 추구하여 왔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이후 청렴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뒤, 다시 국민권익위원회로 그 기능이 흡수되었다.

Bardhan (2006)은 부패를 “공적 권한(office)의 사적 이익을 위한 행사”로 정의한다. 공적 권한 뿐 아니라 “사적 권한의 사적이익을 위한 행사” 역시 미국 EU 등에서는 중요한 문제이나, 이 경우에도 이러한 민간 부문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공공부문이 하지 못했다는 면에서, 부패에는 결국 공적 부문이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적부문의 부패는 (i) 관료집단의 부패와 (ii) 정치적 부패로 대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부패는 많은 경우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세계 각국에서 대규모 정부 조달이나 물품 구매에서 관료와 유력한 정치가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자주 목격된다. 민주화가 진전된 사회에서는 정치가들이 정기적으로 ‘선거’에 의해 평가받는 반면, 특수한 에이전시에서 일하거나 행정부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공공의 감시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덜 ‘경쟁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Bardhan은 지적한다.

부패는 민주적 사회제도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다(Eigen 2002). 정치적 체제와 지도자들이 갖는 합법성은, 이들이 공공의 이익을 수호할 힘이 있다는 데에서 출발하는데, 부패의 존재는 공공의 이익 수호가 실패했다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이러한 체제와 지도자들의 권위와 정통성을 훼손시킨다. **즉 부패는 사회의 기초를 흔드는 것이다.**

부패의 측정은 매우 어렵다. 부패행위 발생건수나 뇌물수수액 등이 부패의 한 대요변수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부패한 사회에서 부패행위의 ‘발생’은 실제보다 훨씬 낮게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언론이 통제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외국인 부패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인도의 거리에서 자잘한 부패는 무수히 목격되지만 정말 심각한 부패일 수 있는 미국 국방성의 무기구입관련 부패는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프리카 국가가 아시아 국가보다 훨씬 더 부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뇌물 수수액의 크기는 아시아가 더 크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미 국부의 상당부분을 뇌물로 흡수한 상태로, 뇌물 여력이 많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목적으로 부패수준 추정이 필요하고, 실제로 다양한 국제기관에서 세계 각국의 부패지수를 발표한다.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고, 부패의 증가는 도덕성 쇠퇴의 지수로 간주하고 있으나, 경제학자는 부패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유인과 부패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단순히 '문화'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예를 들어 특정 사회에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상사에 대한 의리나 충성이 매우 강조되는 '문화'가 있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는 부패로 간주되는 것이 이 국가에서는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은 비록 중요하고 현실적이기는 하지만 순환 논리적 성격이 강하다.

싱가포르의 경우 10~20년 만에 부패가 척결되었는데, '문화적 규범'이 이렇게 빨리 변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정부가 주도한 정책적 변화가 부패에의 참여에 대한 유인체계에 유효하게 변화를 주고, 이것이 부패의 존속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가장 단순한 부패모형은 과도한 규제가 있고, 이 규제를 이해하고 집행하는데 관료들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 재량권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사하는 것이다. 인디아에서는 관료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case by case)은 사실상 이해 당사자가 얼마나 많은 돈을 싸들고 오나(suitcase by suitcase)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근본적으로 부패는 한 국가의 법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제도를 반영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들의 결과물적인 측면이 있다(Svensson, 2005). 예를 들어 명시적 진입규제가 존재하는 경우에 뇌물 수수 등에 의해 정상적인 진입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진입이 가능해지면 기업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입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Djankov, Glaeser, La Porta, Lopez-de-Silanes and Shleifer, 2003).

Djankov 등(2002)은 85개국을 대상으로 한 진입 규제 분석에서, 진입 규제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업들로 하여금 막대한 진입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데, 부패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정치체제가 비민주적인 경제에서 더 자주 발견된다고 지적하고 있어, 부패나 민주주의 등의 변수가 명시적 규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변수가 명시적인 규제와 공존하는 것도 문제지만, **명시적인 규제가 개선되더라도 사회 및 경제 환경이 정비되지 않아 부패가 관행으로 남아 있거나 비민주적 사고와 체제가 유지된다면, 이들이 철폐되거나 개선된 규제를 대신하여 암묵적인 규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부패는 경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요인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으며, 부패와 다양한 경제 변수와의 관계, 특히 경제 성장과의 관계는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의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부패와 경제 변수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부패가 과연 전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인지,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서로 다른 형태나 종류의 부패가 특정 변수에 체계적으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의 논의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Mauro (1995) 와 Knack and Keefer (1995)의 연구에 뒤이어 부패가 거시 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 영향이 항상 부정적인 것인지, 만일 긍정적인 면도 있다면 어느 경우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었다. Shleifer and Vishny (1993), 그리고 Kaufman and Wei (1999)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가장 심각한 악영향 중의 하나는, 공공부문에서의 보상이 부패에 의해 증가하게 되고, 결국 민간부문에 고용될 경우 훨씬 생산성이 높았을 고급 인적자원을 부패한 공공부문이 비생산적인 관료 체계 안으로 흡수함으로써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 부문은 부패한 공공부문과 협상하고 대처하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허비해야 한다.** 부패 관련자들과 기관들은 비밀 유지를 위해 **경제와 시장을 왜곡하게 되며,** 관료들이 고의적으로 부정확한 기록을 남기거나 기록 자체를 말살함으로 인해 **정부의 세수 등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많은 경우 **부패는 투자에 대한 수익을 감소시키는 세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부패와 일인당 국민소득과의 관계는 Ehrlich and Lui (1999), Getz and Volkema (2001), Goldsmith (1999), Hall and Jones (1999), Husted (1999), Paldam (1999), Sandholtz and Koetzel (2000), Treisman (2000) 등에 의해 분석되었다. 이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패와 낮은 수준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법치 또는 법·질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부패가 투자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분석되었다. Svensson(2005)은 실증분석을 통해 부패와 기업성과와의 관계가 유의해서, 청렴도가 높은 경제에서 기업 성과가 높게 나타나지만, 부패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명확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보였다. 기업성과가 높은 경제에서 경제 성장이 빠를 것이라는 직관에 위배되는 이러한 결과를 Svensson은 ‘퍼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Mauro (1997)는 부패는 세금과 같아 민간투자를 심각하게 구축하고 결국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실증 분석을 통해 이를 입증했다. 부패지수를 0(대단히 부패) ~ 10(대단히 청렴)²⁾으로 측정할 때, 한 경제의 부패지수가 6에서 8로 증가할 경우 투자는 4%p 증가, 일인당 GNP는 0.5%p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일인당 GNP의 성장이 투자의 증가에 의한 일반적 일인당 GNP 증가보다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Mauro는 이 결과를, 부패의 개선이 단순한 투자 증가 이외에도 경제적 거래비용 감소, 생산성 증가 등 다양한 개선 효과가 있어, 성장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부패가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입증하거나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패는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고(예를 들면, Brunetti et al (1997), Knack and Keefer (1995), Keefer and Knack (1997), Mauro (1995, 1997), Rivera-Batiz (2000)), Woo (2004)는 **부패를 제거할 경우 총생산성이 증가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다수의 연구와는 달리, 부패가 관료제의 그리고 배분적인 효율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Leff (1964)는 부패가 부담스러운 여러 규제들을 회피하게 함으로써 관료 조

2) 대부분의 기관에서 발표하는 부패지수는 지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직의 효율성을 증가시킴을 역설하였고, Kaufman and Ackerman (1997)은, 관료가 자신의 수취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부패는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Kaufman (1997)은 또한 경쟁적인 입찰을 통해 수취가 이루어 질 경우, 가장 효율적이고 낮은 비용을 유지하는 기업이 가장 높은 액수의 뇌물을 제의하여 선택될 수 있으므로, 경제 전반적인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부패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Ackerman (1997)은 이럴 경우 가장 높은 액수를 제안하는 기업은 가장 낮은 비용을 유지하는 기업이라기보다는 낮은 질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뇌물을 준비한 기업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하였다.

Dreher and Gassebner (2007)는 다시 이 주제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 역시 부패와 규제의 밀접한 관계에서 시작한다. 규제는 경우에 따라 실제로 기업들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검증하고, 특히 기업의 창업을 위해 많은 절차와 높은 수준의 최소자본금이 필요한 경우 앙프 프리너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4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규제가 심한 경제에서는 부패가 오히려 긍정적인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이들의 연구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국가군에서는 부패가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고 기업가정신을 제고할 수 있는 방편이 되는 윤회유 역할을 할 경우가 있다.** 이는 Leff (1964)가 주장한 바 “정부가 그릇된 결정을 내릴 경우, 부패 행위에 의해 일의 진척된다면, 이 부패행위가 오히려 정부의 정책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가의 수가 많은 것이 반드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규제가, 시장에 진입한 이후 곧 파산하거나, 정부가 시장에서 제공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면, 기업 진입의 증가는 해로운 것이다.

둘째, 이러한 분석은 부패가 규제에 장기에 걸쳐 미치는 잠재적인 feedback을 간과하고 있다. 단기에는 부패와 규제가 시장진입에 관한 기업가의 결정에 외생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에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패한 관료가 더 많이 이권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과정의 의도적

지연을 통해 뇌물 수수의 기회를 만들고, 금융계좌의 통제 등 뇌물 수수를 위한 더 많은 규제 및 암묵적 통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화되는 규제와 이를 회피하려는 부패의 효과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효과를 보일지는 불확실하다. 예를 들어 Djankov et al (2002)은 진입규제가 부패와 깊은 관계가 있지만, 부패로 인해 진입이 증가해도, 이것이 질 높은 공공재 또는 사적재의 공급 증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셋째, 무엇보다도 부패가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사회가 매우 부패하였을 때만 성립한다. ‘윤회유’ 주장에 대한 동의가 확산되는 것은 사회를 고 부패의 함정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

부패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연구에 더해, 최근에 발전된 부패에 대한 연구는, 경제의 균형이 높은 수준의 부패와도 연결될 수 있는 개념임을 제시해 주었다. Andvig (1991), Ehrlich와 Lui (1999), 그리고 Paldam (1999)등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발전시킨 “복수 균형”의 모델은, [고부패-저소득], [저부패-고소득]이라는 두 개의 균형점과 이 두 안정적 균형점 사이의 불안정 균형점 또는 추축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다.³⁾

이 모델에 따르면, 경제가 [고부패-저소득]으로부터 [저부패-고소득]의 균형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두 균형점 사이에 존재하는 불안정 균형의 상태를 지나야 한다. 그리고 경제가 [고부패-저소득]으로부터 탈출하여 저부패 균형점으로 움직일 경우, 추축점(pivot point)이나 불안정 균형에 이르기 전 더욱 낮은 소득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아주 높은 수준의 부패를 겪고 있는 나라에게 단기적으로 가장 적절한 선택은 높은 수준의 부패를 유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전체의 후생을 장기적으로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면, 단기간의 소득 감소를 감수하고라도 [저부패-고소득] 균형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복수 균형의 경우, 역사적 배경이 중요하다. 즉, 부패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시작한다면 부패를 척결하거나 낮추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고부패 상태의 균형에서, 이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작은 충격 수준이라면 결국 높은 사태의 부패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3) 여기서의 소득은 일인당 국민소득을 의미한다.

제 4 장

청렴과 경쟁력, 국가브랜드의 국제적 평가

제 1 절 국제 기구의 청렴도 평가 비교 및 요인 분석⁴⁾

1. 부패지수의 특징과 구분

부패지수는 각 나라의 부패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연구기관, NGO, 민간 신용평가기관, 정부기구 등 다양한 기관에 의해 작성된다. 또한 주로 각 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평가자들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들의 인식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혹은 집단 간 인식의 차이의 문제 등이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곤 한다. 인식의 비교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부패지수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지적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부패지수를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TI의 CPI 등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집단간 인식의 차이가 지수의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Lambsdorff 1999b).

이러한 부패지수는 부패에 관한 대중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패수준과 다른 사회현상 사이의 관계(예를 들어 부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경제성장이 둔화되는지 여부)에 대한 학술적 연구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4) 이 부분은 강신욱(2000)을 요약하여 재구성하였다.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부패지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으며,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부패지수는 평가방법에 따라 **전문가들의 평가(poll)와 설문조사(survey)**에 근거한 평가로 구분된다(그림 4-1 참조). 여기서 전문가들의 평가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회사의 스태프들이나 학계의 전문가들이 부패수준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주로 개별국가들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신용평가기관들이 종종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설문조사에 근거한 평가는 평가자를 누구로 한 설문조사 인가에 따라 전문가 대상/일반인 대상, 자국민 대상/외국인 대상 설문조사로 구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부패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응답들을 평균하여 부패지수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림 4-1] 부패지수의 일반적인 구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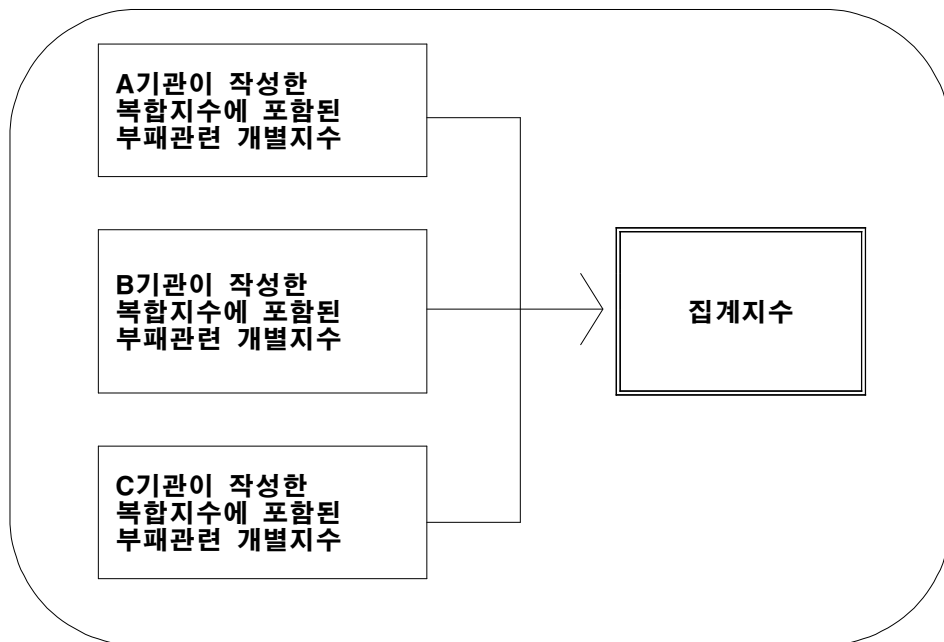


자료 : 강신욱(2000)

또한, 부패지수는 작성방법에 따라 개별지수와 집계지수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수의 구성체계는 여러 개의 지표들(indicators)이 모여 하나의 하위지수(sub-index)를 구성하고, 여러 개의 하위지수들이 모여 하나의 지수(index)를 구성된다. 예를 들어 국가경쟁력지수 아래에는 정부의 활동에 대한 하위지수가 있고, 그 아래에는 공공분야의 부패에 대한 지표가 존재하는 것이다. 개별지수란 부패지수가 어떤 지수를 만드는 데 하나의 지표로서 사용되어 점수화 된 것을 지칭하게 된다. 즉, 부패에 관한 각각의 지표는 하나의 개별지수(individual index)가 되는 것이다. 반면, 집계지수(aggregate index)란 각 기관에서 어떤 (복합)지수들을 만드는 데 사용된 부패관련 개별지수들을 모아 새로운 지수를 만들어 낸 것을 말한다. 결국, 지수는 서로 다른 현상을 측정한 다수의 개별지수들이 모여서 만들어

지는 복합지수(composite index 또는 complex index)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4-2] 개별지수와 집계지수의 관계



자료 : 강신욱(2000)

복합지수는 한 기관이 주제가 다른 여러 개별지수들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인 반면, 집계지수는 각 기관들이 작성한 동일한 주제(부패)의 개별지수들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집계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이한 기관이 작성한 성질이 다른 개별지수들을 표준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집계지수는 개별지수에 비해 비교 대상 국가의 수가 많다는 점과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얻어낼 수 있으며, 연구자의 목적과 관심에 따라 집계방식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집계지수로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는 부패인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를 들 수 있다.

2. 부패관련 개별지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개별지수의 경우, 개별지수는 하나의 설문으로부터 도출된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 대상자들에게 ‘귀하의 나라에서는 공공분야에서 뇌물수수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매우 그렇다’이면 0점, ‘전혀 그렇지 않다’이면 10점으로 대답하게 한 다음, 응답자들이 매긴 점수를 평균하면 그 나라의 부패지수로 산정하는 것이다. 이 때, 개별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설문의 내용과 응답의 척도(몇 점부터 몇 점까지 점수를 매기도록 하는가)는 조사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대표적인 부패 관련 개별지수로는 WEF, IMD, PRS Group, World Bank, TI 등의 국제기관에서 매년 또는 상시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World Economic Forum(WEF)의 부패지수를 들 수 있다(표 4-1 참조). WEF는 1996년부터 하버드 대학 국제발전연구소(Harvar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공동으로 『국가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GCR)』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를 근거로 종합적 세계경쟁력 지수를 작성한다. 복합지수인 경쟁력 지수는 정량 데이터(quantitative data), 즉 측정가능한 객관적 데이터 대한 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산정하게 된다. 수집된 데이터를 개방성, 정부, 금융, 하부구조, 기술, 경영, 노동, 제도 등 8개의 요소들로 분류하여 복합지수 구성, 부패의 정도에 관한 설문은 제도에 포함된다. 여기서 부패 관련 설문은 ‘1.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 매우 그렇다’까지 7점 척도로, 높은 점수일수록 부패하지 않음을 의미하게 된다.

〈표 4-1〉 WEF의 세계경쟁력지수 작성에 사용된 부패관련 설문

번호	지 표	설 문 내 용	비 고
제도 분야에 포함된 설문			
8.02	정부의 정실	정부와 친밀한 기업과 정부 사이의 긴밀한 거래가 보편적이지 않다	
8.03	비정상적 금품 제공	수출 수입허가, 사업면허, 외환관리, 과세, 경찰보호, 대출신청 등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이고 추가적인 금품제공이 보편적이지 않다.	CPI에 이용됨
8.04	추가적 금품제공	지난 5년 동안 규제를 피하기 위한 추가적 금품제공이 감소하였다.	
8.09	사법부패	판사나 법원 인사 혹은 사법의 집행과 관련된 다른 공무원들에게 비정상적 금품제공을 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다. 또한 법적 절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8.20	뇌물과 리베이트	고위 경찰관에 대한 개인적 뇌물과 리베이트는 공적 논의나 소문으로도 전혀 거론되지 않는다.	
경쟁력 지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참고자료로 조사된 것			
s.01	정보의 입수	사업과 관련된 정보는 폭 넓고도 쉽게 얻을 수 있다.	
s.02	회계 정보	회계정보 공개는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이루어진다.	

자료 : WEF(1999).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IMD)의 부패지수도 부패 관련 개별지수 중의 하나이다(표 4-2 참조). IMD는 1987년부터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WCY)』을 발간하고, 이 연감 작성을 위해 실시한 조사를 근거로 각 국가의 경쟁력 점수와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지수 작성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는 주로 각 기관들로부터 입수하는데, 대다수는 종합경쟁력순위 집계에 활용되고 일부는 배경지식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설문을 통해 조사 대상 국가의 관리직 전문가(국내, 국제 기업의 최고위층 및 중간층 관리자)들의 견해 조사, 객관적 데이터를 보완하도록 고안되었다. 평가지표들은 경제학

문헌에 근거하거나 델파이조사를 통해 선택하게 되며, 조사 결과를 갖고 전체 평가지표에 대해 각각 표준화된 점수를 구하게 되는데, 각 지표별 STD 값들을 조합하여 각종 지수와 순위를 산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부패와 관련된 항목은 주로 정부와 기업경영과 관련된 투입요소에 포함되어 있으며, 설문문항은 '매우 그렇다 0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0점'까지 분포되어 각 항목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표 4-2〉 IMD의 국가경쟁력지수 작성에 사용된 부패관련 설문

번호	지 표 체 계 (투입요소/하부요소/지표)	설 문 내 용	비 고
3.30	정부/국가효율성/투명성	정부가 정책목표에 대해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	
3.36	정부/국가효율성/뇌물과 부패	공공분야에서 뇌물수수과 부패가 존재한다.	CPI에 이용됨
6.21	경영/경영활동/기업 신뢰도	대중은 기업경영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6.36	경영/기업문화/사회적 책임성	기업의 지도자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무시한다.	
*6.21	경영/기업활동/이사진	이사진이 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활동을 금하지 않는다.	
*6.36	경영/기업문화/윤리적 실천	기업에 윤리적 실천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료 : WEF(1999).

세계은행(World Bank)은 정부의 행동이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책변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를 목적으로 1996년 8월부터 1997년 6월까지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World Bank and Basel University의 부패지수를 발표하였다(표 4-3 참조). 지수 산정을 위해 세계은행은 스위스의 바젤대학(Basel University)과 공동으로 74개국의 지역 기업(local firm)⁵⁾ 경영자들 대상(표본은 3,500명 이상)으로 25개의 항목에 대해 설문 조사를

5) 다른 조사들과 다른 점은 이 조사가 주로 지역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추진하였다. 즉, 69개국 이외에 5개국을 조사대상에 추가, 이를 근거로 Brunetti et. al.(1998)은 신뢰도 지수(Credibility Index)를 작성하였다. 신뢰도지수(credibility indicator)는 다섯 개의 하위지수(subindicator), 즉 예측가능성지수(4개의 설문에 대한 응답을 단순 평균하여 작성), 정치적 안정성지수(2개 설문), 정부의 재산권침해지수(2개), 사법권 행사의 예측가능성지수(1개), 부패지수(1개) 등으로 구성된다. 모든 설문에 대한 답은 6점 척도로 평가, 질문마다 어떤 경우에는 높을수록 바람직하지만, 반대인 경우도 존재한다.

〈표 4-3〉 World Bank의 부패관련 설문

번호	설문내용	비고
일반적인 정부의 사업 방해 항목 중		
12-n	다음의 각 정책 영역들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6점 척도로 평가해주시시오 n. 부패 (1.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 - 6. 매우 방해된다)	CPI에 이용됨
관료의 red tape 항목 중		
14	내 사업분야의 기업들에게 사업 성사를 위해 비정상적(irregular)이거나 추가적인(additional) 금품제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 항상 2. 대부분 3. 자주 4. 종종 그렇다 5. 거의 그렇지 않다. 6. 전혀 그렇지 않다)	CPI에 이용됨
15	내 사업분야의 기업들은 이 추가적 금품제공이 얼마인지 사전에 알고 있다(1. 항상 2. 대부분 3. 자주 4. 종종 그렇다 5. 거의 그렇지 않다. 6. 전혀 그렇지 않다)	
16	기업들이 추가적 금품제공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예컨대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또 다른 요구가 있을까봐 항상 걱정이다(1. 항상 2. 대부분 3. 자주 4. 종종 그렇다 5. 거의 그렇지 않다. 6. 전혀 그렇지 않다)	
17	만일 기업이 추가적 금품제공을 요구받고 행한다면, 합의된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1. 항상 2. 대부분 3. 자주 4. 종종 그렇다 5. 거의 그렇지 않다. 6. 전혀 그렇지 않다)	

자료 : World Bank(1997).

체 표본의 2/3에 해당되는 기업이 전혀 외국인 투자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 물론 이러한 표본의 특성은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지닌다.

PRS Group은 1982년부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정치, 경제 및 금융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ICRG)이다. ICRG의 위험평가시스템(ICRG Risk Rating System)은 각 국가의 위험정도를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누어 측정한다. 그 세 가지는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 금융상 위험(financial risk), 경제적 위험(economic risk)이고, 부패는 이 가운데 정치적 위험의 평가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PRS의 부패지수는 가장 부패한 것을 0, 부패가 가장 적은 경우를 6으로 평가되며, PRS지수가 정부 내에서의 부패로 간주하는 것은 특별한 금품제공(special payment)의 요구 및 수출입허가나 외환관리, 과세, 정치적 보호, 대출 등과 관련된 뇌물 요구 등이 있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Bribe Payers Index(BPI)도 대표적인 부패관련 개별지수이다. TI는 1995년부터 발표해오던 부패인지지수(CPI)와는 별도로 1999년부터는 BPI를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BPI는 주요 수출국들의 기업들이 외국에서 활동할 때 외국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수화한 것이다. 지수 산정을 위한 조사는 주요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는 나라들(14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상공회의소의 의장이나 주요 간부, 주요 외국인 및 자국 기업의 최고경영자, 회계법인의 파트너, 은행,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다. BPI를 산출하기 위한 질문은 “당신이 잘 알고 있는 사업분야에서, 아래의 나라 기업들은 이 나라에서 사업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높은 편인지, 제공할 것 같지 않은지 등을 표기해 주십시오”라는 하나 뿐이며, 이 질문에 대해 뇌물을 제공할 것 같은 정도가 가장 높으면 0점, 가장 낮으면 10점으로 평가한다. BPI는 한 국가의 뇌물공여 성향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기업들의 성향에 대한 평가인 셈이다. 하지만 TI는 초국적 기업의 수가 워낙 많고, 부패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순위부여 및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별 평가로 대신한다.

이외의 부패 관련 개별지수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⁶⁾.

○ DRI

- 각 국의 기업 및 금융분석 전문가, 정책입안자들에게 데이터와 분석, 전망, 전문적 조언 등을 제공해주는 컨설팅 회사. 1973년 Standard & Poor의 지사로 설립

6) Kaufmann et. al.(1999a), pp. 29~53.

- 1996년부터 Country Risk Review를 발간하여 국제 투자가들에게 각국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분기별로 제공해오고 있음.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 세계 각 나라의 정치, 경제 및 기업환경에 대한 분석 결과와 전망을 제공해주는 영리 단체. 1949년 설립, 런던에 소재. 1997년부터 The Country Risk Service와 Country Forecast를 분기마다 발간
 - 이들 보고서는 각국에 산재해 있는 500여명의 정보수집가들이 올린 정보를 지역전문가들이 재평가한 후, 그것을 근거로 작성
- BERI(Business Environment Risk Intelligence)
 - 각 나라의 사업환경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제공해주는 민간기업. 1966년 설립, 스위스의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음.
 - 전문가들의 평가를 근거로 50여 개국에 대하여 연 3회 BRS(Business Risk Service) 발간
- CEER(Central and Eastern Europe Review)
 - Wall Street Journal의 유럽지사. 1995년부터 매년 유럽과 미국의 기업으로,
 - 전문가들을 상대로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상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간함.
- FHNT(Freedom House Nations in Transit)
 - Freedom House는 1941년 설립, 뉴욕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NGO. 1995년 Nations in Transit 출범
 - 1998년 「Nations in Transit」이라는 보고서 발간.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한 28개 국가들의 민주적, 경제적 개혁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Gallup International
 - 각 국에 산재해있는 49개 전문 조사기관의 연합.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947년 설립

- 1997년,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44개국 3만명의 대중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Gallup International 50th Anniversary Survey」란 보고서로 출간
- TPERC(Political Economic Risk Consultancy)
 -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기업에 대한 분석과 사업 전략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로 1976년 설립되었고, 홍콩 소재를 둠.
 - 아시아 주요 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각각 실시(「Corruption in Asia」, 「Transparency Problems in Asia」, 「Shortcomings of the Media in Asia」)

3. 부패관련 집계지수

집계지수를 작성하는 방법은 원천자료들에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는가, 원천 자료의 점수를 어떻게 표준화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집계지수 작성을 위해서는 다른 기관들의 조사결과들을 수집, 각 기관이 각 해마다 조사한 자료가 집계지수를 위한 원천자료(source)로 쓰이게 된다. 대표적인 집계지수로서 TI의 CPI와 Kaufmann 등이 세계은행 보고서(Kaufmann et. al. 1999a,b)에서 제시한 부패지수(Graft Index) 등이 있다.

TI가 발표하는 CPI는 각 나라의 공무원과 정치가들 사이에 부패가 얼마나 상존하는가를 평가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집계된다. 먼저 모든 원천자료(표 4-4 참조)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각 해의 CPI는 전년도 CPI를 출발점으로 하여 작성하게 되며, 최초(1995)의 CPI는 각 원천자료들의 점수를 모두 11점척도(0점부터 10점까지)로 환산한 다음, 이것을 단순 평균하여 도출한다. 전년도의 CPI에서 출발하여 올해의 CPI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해 추가되는 하나의 원천자료를 택한 후, 이 원천자료와 작년의 CPI에 모두 포함되는 나라들을 추려내 표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전년도 CPI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금년도 『국제경쟁력연감』에는 포함된 나라들에게도 적용된다. 위의 과정을 다른 원천자료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상기 절차를 거쳐 나온 결과는 모든 원천자료별로 각 국가마다 표준화된 점수가 계산되게 된다. 각 원천

자료별로 한 나라가 얻은 표준화된 점수를 평균하면 당해년도 CPI가 된다.

〈표 4-4〉 TI-CPI 작성에 사용된 원천자료(예시)

작성기관	원천자료명	연도	조사대상	응답자수 (명)	대상국가 수
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PERC)	Asian Intelligence Issue	1997	외국인경영자	280	12개 아시아 국가
		1998		각 국당 40~50	
		1999			
Gallup International	50th Anniversary Survey	1997	일반대중	34,000 (각 국당 약 1,000)	44
Wall Street Journal, Central Economic Review	Annual Survey	1997	유럽과 미국의 기업 평가 전문가	-	26개 동유럽 국가
Freedom House	Nations in Transit	1998	미국의 학계 전문가 와 Freedom House 스텝의 평가	-	28개 동유럽 국가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WCY)	1997	국내 및 외국 기업의 최고 및 중간층 경영자	2,515	46
		1998		4,314	
		1999		4,160	47
World Economic Forum(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GCR)	1997	국내 및 외국 기업의 고위 경영자	2,778	56
		1998		3,167	53
		1999		3,934	59
	African Competitiveness Report	1998		582	20
Political Risk Service(PRS)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ICRG)	1999	전문가 스텝의 평가	-	135
World Bank/ Basel Univ.	World Development Report, Private Sector Survey	1997	기업 경영자	3,500이상	74
Economic Intelligence Unit(EIU)	Country Risk Service and Country Forecast	1999	전문가 스텝의 평가	-	115
International Working Group	International Crime Victim Survey	1996 ~ 1997	일반대중	약 40,000	43

주 : 위의 원천자료는 1999년 CPI 원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자료: Lambsdorff(1999b)

Kaufmann 등은 세계은행 정책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개별지수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집계지수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Kaufmann et. al. 1999a, b). 이러한 집계지수들은 통치지수(Governance Index)라고 통칭되며, 부패지수(Graft Index)는 그 가운데 하나로서, CPI에 비해 보다 많은 원천자료들을 이용하여 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통치지수는 기존의 여러 원천자료로부터 300여개의 지표들을 추출한 후 재구성하여 작성한다. 하나의 원천 자료 안에 부패와 관련된 유사한 질문이 있으면 이를 평균하여 원천자료별 개별지수를 계산한다(표 4-5 참조). 이 개별 지수들에 대해 높을수록 바람직한 상태를 나타내도록 점수를 다시 부여하는데, 즉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 없는 상태를 의미하도록 된 자료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것으로 다시 점수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한 국가의 점수를 개별 지수별로 표준화하여 아래와 같은 식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이 결과 표준화된 각 지표의 값들은 0에서 1까지의 값을 지니는 표준화된 점수들이 되고, 가중평균이 각 나라의 부패지수가 된다.

$$\text{표준화된 점수} = \frac{\text{개별지수상의 점수} - \text{개별지수의 최소가능점수}}{\text{개별지수의 최대가능값} - \text{개별지수의 최소가능값}}$$

7) ‘graft’의 사전적 의미는 권한이나 권력을 이용한 금품수수 행위로써, ‘수뢰(收賂)’, ‘독직(瀆職)’ 등으로 번역될 수도 있으나,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부패’로 번역하기로 한다. 실제로 Graft Index의 산출을 위해 집계된 개별지수들의 설문 내용은 거의 모두 공공분야에서의 부패를 묻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표 4-5〉 Kaufmann et. al.(1999a)의 부패지수 작성에 사용된 개별지수

원천자료	포괄 범위 지수	부패관련 설문	비 고
대표성이 있는 자료			
DRI	0.23	공무원들의 부패, 반부패정책의 효율성	
EIU	0.19	공무원들의 부패	CPI와 공통
PRS	0.10	‘해외투자에 대해 위협’이 되는 정치 체제적 부패	CPI와 공통
WDR	0.25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추가적 금품제공’의 빈도 ‘사업의 방해요인’으로서 부패	CPI와 공통
대표성이 약한 자료			
BERI	0.44	부패에 대한 인식	
CEER	0.85	어떤 국가의 사업지역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부패의 영향	
FHNT	0.82	공공서비스와 정책입안자들의 사업상 이해에 있어 부패에 대한 인식	CPI와 공통
GALLUP	0.50	공무원들의 ‘부패행위’의 빈도	CPI와 공통
GCR98,97	0.42	수출입허가, 영업허가, 외환통제, 과세평가, 치안 및 대출에 있어서 비정상적이고 추가적인 금품제공	CPI와 공통
GCRA	0.73	수출입허가, 영업허가, 외환통제, 과세평가, 치안 및 대출에 있어서 비정상적이고 추가적인 금품제공 사업 발전의 방해요인으로서 부패	CPI와 공통
PERC	0.83	외국인 회사 사업 환경에 대한 부패의 영향	CPI와 공통
WCY98	0.59	공공부문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CPI와 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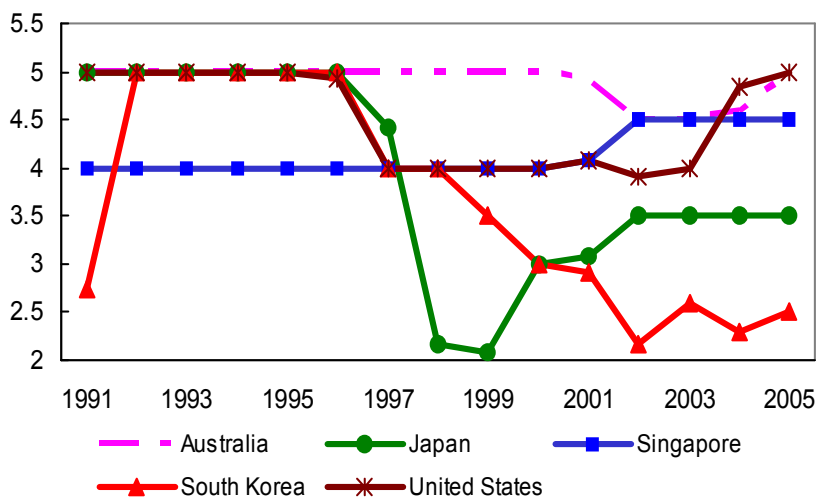
자료: Kaufmann et. al.(1999a).

4. 우리나라의 청렴도 수준 국제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의 부패의 정도는 조사기관이나 조사 방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며,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PRS Group, 국제투명성기구 등이 있다. PRS Group은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이하 ICRG)를 통해 Corruption이라는 항목을 지수화하여 공개하며, 국제투명성기구(이하 TI)는 매년 세계 각국의 공무원·정치인의 뇌물수수, 공공자금 횡령 및 유사범죄행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정도를 평가하여 지수화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이하 CPIX)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는 갠럽인터내셔널과 함께 한국을 포함한 47개국 4만 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국제부패 척도 2003”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국제투명성기구가 2003년 7월 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69.4%가 앞으로 3년간 부정부패문제의 개선이 어렵거나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PRS Group(2007)의 ICRG에 따르면, 우리의 부패 정도는 호주 등에 비하면 아직 심각하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 싱가포르 등과 어느 정도 동등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호주, 미국, 싱가포르 등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림 4-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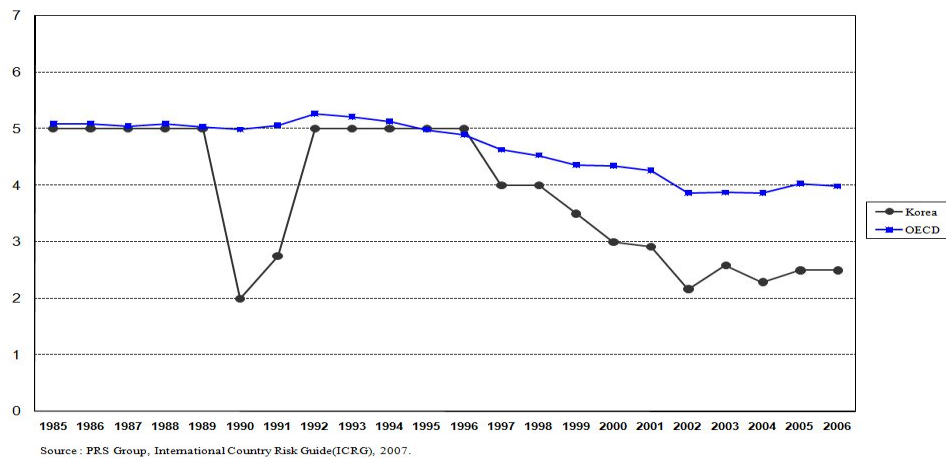
[그림 4-3] ICRG 부패지수 추이 비교



주: 지수 0은 매우 나쁨, 6은 매우 양호함을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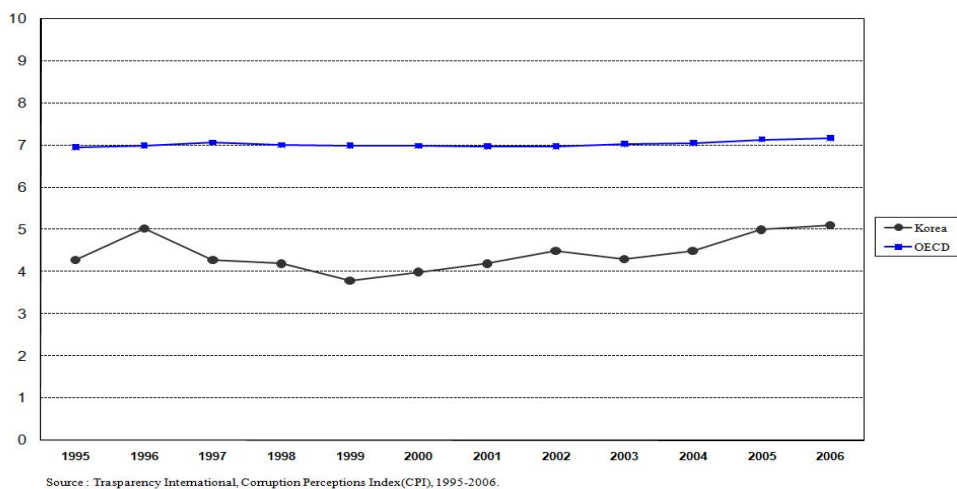
또한 OECD 평균 부패 정도와 비교해 볼 때,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그림 4-4 참조).

[그림 4-4] 우리나라와 OECD 평균 부패지수(ICRG-Corruption) 추이



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우리의 부패인식은 OECD 국가 평균수준과는 상당 수준의 괴리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5 참조).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패인식 수준은 OECD 국가 중 2006년 23위를 기록, 최하 위권 그룹으로 분류된다.

[그림 4-5] 우리나라와 OECD 평균 부패인식지수(TI-CPI) 추이



제2 절 국제 기구의 경쟁력 평가 비교 및 요인 분석

1. 국가경쟁력지수의 종류 및 특징

국가경쟁력이란 일반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성장 및 삶의 질을 제고하는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의미한다(김득갑 외, 2008). 국가경쟁력은 평가기관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

- IMD(International Institute of Management Development) : 국가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국내 및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의 능력
- WEF(World Economic Forum) : 1인당 GDP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국가의 능력으로, 중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지해주는 제도와 경제정책의 조합을 의미
- IPS(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

대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은 경제 및 비경제적 요소가 모두 포함된 복합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총체적으로 지닌 경쟁역량이란 의미는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비과학적 측면이 강해 기존 주류 경제학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는 개념이다. 한 예로 IT산업하기 좋은 환경이 반드시 조선업 환경에 좋을 수 없고, 디자인이나 문화콘텐츠 산업 환경은 조선업 환경과 또 다를 수 있다.

IMD나 WEF 등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양한 특정 항목에 대한 국가간 비교이며, 이들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은 이들 지수를 자체적인 룰과 방식에 따라 합산(가중평균)한 것에 불과하다. 이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금융시장의 성숙도, 또는 경제의 혁신 역량이 모두 버무려져 하나의 수치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국가경쟁력 지수는 과학적 엄밀성이 부족한 대중적 시그널로, 정부는 그 방향성이나 장기적 추세를 고려

하는 정도에 그쳐야 하며, 단기적으로 이 지수 자체를 향상시키는 정책적 노력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종합적인 관점에서 측정된 국가경쟁력지수는 WEF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GCI)』, IMD의 『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WCS)』, IPS의 『National Competitiveness Rankings(NCR)』 등이 있다(표 4-6 참조). 세계 최초로 1979년부터 발표된 국가경쟁력지수인 GCI는 기본요인(제도 및 인프라, 거시경제 안정성 등), 효율성(교육 및 훈련, 상품·노동·금융 시장의 효율성 등), 기업환경의 성숙도와 기술혁신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그 평가대상은 2008년 134개국으로 가장 많지만, 평가항목의 70% 이상이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1989년부터 시작된 WCS는 경제성과(국내경제, 국제무역, 투자, 고용 등), 정부의 효율성(재정 및 세제, 거버넌스 체제, 기업관련 법규 등), 경영 효율성(노동시장, 금융·경영활동 등), 인프라(기초, 과학기술, 환경, 교육 등) 등에 대해 주로 평가한다. 그 평가대상은 2008년 55개국이며, 경성자료(hard data)와 설문자료를 거의 비슷하게 구성된다(경성자료:설문자료 = 52:48). NCR은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물적요소(생산요소 조건, 경영여건, 시장수요 조건 등)와 인적요소(근로자, 정치가 및 행정관료, 기업가 등)에 대해 평가한다. 그 평가대상은 2008년 65개국이며, 경성자료와 설문자료의 비율은 50:50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IPS(산업정책연구원)는 1993년 설립된 국내 연구기관이다.

〈표 4-6〉 국가경쟁력지수의 종류와 특징(2008년 기준)

지수명(시작연도)	평가기관	설문내용
Global Competitiveness Index(1979)	WEF	· 총 134개국을 대상으로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환경의 성숙도와 기술혁신 등 12개 부문 평가 · 설문자료(70%)와 경성자료를 활용(총 110개 항목) · 국가별 발전단계(생산요소 중심, 효율성 중심과 혁신 중심) 등에 따라 각 부문별 가중치를 차별화
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1989)	IMD	· 총 55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경영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부문을 평가 · 경성자료(52%)와 설문자료(42%)를 활용(총 331개 항목)
National Competitiveness Rankings(1998)	IPS	· 총 65개국을 대상으로 생산요소, 경영여건, 관련지원산업, 시장수요 등 물적요소와 근로자, 정치가 및 관료, 기업가, 전문가 등 인적요소를 평가 ·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기업가 인터뷰(총 202개 항목)

자료 : 김득갑 외(2008).

2. WEF의 세계경쟁력지수

WEF는 1976년부터 The Competitiveness Report를 통해 국가경쟁력 관련 평가를 실시한 이래, 그 이후 1995년까지 IMD와 공동연구를 진행하다가 1996년부터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발표로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조병구, 2006). WEF의 경쟁력 평가지수는 1996~1997년 경쟁력 지수(Competitiveness Index, 이하 CI)를 통해 단일 종합순위를 발표하였다. 1998년부터 미시 경쟁력 지수(Micro Industrial CI, 이하 MICI)를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기존의 경쟁력지수(CI)와 이원체계를 구성하였으며, 여기서 미시 경쟁력 지수(MICI)는 단기적인 거시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경쟁력 지수를 뜻한다.

2000년부터는 미시 경쟁력 지수(MICI)의 명칭을 경상경쟁력(Current CI, 이하 CCI)로 변경하는 한편, 종래의 경쟁력 지수(CI) 대신 새롭게 개발한 성장경쟁력 지수(Growth CI)로 대체되었다. 여기서의 GCI는 한 국가의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잠재적 지표이며, CCI는 현 시점에서의 국가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적 지표를 나타낸다. 2003년부터는 CCI를 기업경쟁력 지수(Business CI, 이하 BCI)로 변경하였고, 2006년부터는 기존 GCI를 글로벌 경쟁력 지수(Global CI, 이하 GCI)로 변경되었다(표 4-7 참조).

〈표 4-7〉 WEF의 경쟁력 평가체제의 변화

연도	경쟁력 평가체제	
1996	경쟁력 지수(Competitiveness Index, CI)	
1998	경쟁력 지수(CI)	미시경쟁력 지수(MICI)
2000	성장경쟁력 지수 (Growth CI)	경상경쟁력 지수(CCI)
2003		기업경쟁력 지수(BCI)
2006	글로벌 경쟁력 지수(Global CI, GCI)	

자료 : 차용진·이홍재(2007).

〈표 4-8〉 WEF의 부문별 평가구성요소 변화: Global CI 기준

연도	평가 구성요소
1996~1999	개방, 정부, 금융, 기업경영, 제도, 인프라, 기술, 노동
2000	대외개방, 국민경제성과, 정부 및 재정, 금융, 기업특성, 기업활동 및 전략, 국내 경쟁, 환경정책, 제도, 인프라, 인적자원, 기술
2001	국민경제성과, 거시경제지표, 계약 및 법률, 부패, 국내시장 경쟁도, 기업활동 및 전략, 집단발달, 환경정책, 기술혁신 및 확산,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2005	거시경제안정성, 국가신용등급, 재정비효율성, 계약 및 사법제도, 부패지수, 기업혁신, 기술이전, 정보통신기술
2006	제도, 인프라, 거시경제, 보건 및 초등교육, 고등교육 및 훈련, 시장효율성, 과학기술수준, 기업활동 성숙도, 기업혁신

자료 : 차용진·이홍재(2007).

2006년부터 WEF는 글로벌 경쟁력 지수(GCI)를 적용하여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측정하고 있다. GCI는 기본요건, 효율성증진, 혁신요인의 다음과 같은 3개 구성요인으로, 각각의 구성요인은 2~4개 지표로 세분화되어 총 9개 지표로 구성된다.

- 기본요건 지표: 제도, 인프라, 거시경제, 보건 및 초등교육
- 효율성증진 지표 : 고등교육 및 훈련, 시장효율성, 과학기술수준
- 혁신요인 지표 : 기업활동, 성숙도, 혁신

GCI 산정을 위해 전체 자료 중에서 1/3을 차지하는 경성자료(hard data)과 나머지 설문자료(soft data)를 이용하여 9개의 지표를 측정한다. 경성자료는 IMF, World Bank, UN, ITU, WHO 등의 국제기구 통계를 직접 수집·활용하며, 설문자료는 각국의 파트너 기관이 WEF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각각의 자료를 통해 총 125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측정지표에 가중치를 차별화하여 산정한다. 가중치 산정기준은 1인당 GDP로, 기존요건 주도형(factor-driven, \$2,000 미만), 효율성 주도형(efficiency-driven, \$3,000~\$9,000), 혁신주도형(innovation-driven, \$17,000 초과) 경제체제로 분류하여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3. IMD의 국가경쟁력지수

IMD는 1989년부터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통해 매년 5월 경 세계 주요국들의 국가경쟁력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정치, 사회, 문화적 부문을 간과한 채 단순히 GDP나 생산성으로만 평가되던 국가경쟁력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작성을 시작하였다. IMD의 평가는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능력”에 대한 상대적 평가이며, 결국, 고전적인 시장주의에 기초하여 국가경쟁력을 정의하고 있다. 지수 산정을 위해 전 세계 60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해 인구 2천만 명을 기준으로 2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통계자료 집계 및 설문조사를 병행하게 되며, 2003년 평가부터 스코틀랜드 추가, 51개 국가와 9개 지역을 조사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IMD는 세계 57개 파트너 연구기관(한국은 (주)경쟁력평가원)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설문조사는 각 국가의 상위 관리자를 대상으로 매년 1월부터 3월초까지 시행한다.

IMD는 각국의 종합적인 경쟁력 평가를 위해 경제운영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 분야로 구분, 각 분야를 5개 부문으로 나누어 경성 및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국가경쟁력 순위를 산정한다. 총 20개 항목에 대해 전체 323개 지표로 지수요인으로 구성되며, 경성자료(통계지표, hard data) 129개에 가중치 2/3을 적용하고, 설문조사(soft data) 지표 112개에 가중치 1/2을 적용하여 총 241개 지표를 표준화된 값으로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산정한다. 이 때, 설문응답의 척도는 1~6인데, 이를 표준화하면서 0-10 척도로 전환시켜 적용한다. 일부 82개 지표는 순위 산정에서 배제되어 배경 정보로만 이용한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항목의 세부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표 4-9 참조). 첫째, 경제운영성과 부문은 83개 지표를 포함하여 국내경제활력에 대한 거시 경제적 평가하게 된다. 둘째, 정부행정효율 부문은 77개 지표를 포함,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의 영향 정도를 분석한다. 셋째, 기업경영효율 부문은 69개 지표로 구분되며 기업경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혁신능력, 이윤추구, 경영책임성의 기준을 평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발전인프라 구축 부문은 94개 지표로, 경제기반, 기술인프라, 과학인프라, 인적자원 활용이 기업의 요구에 맞는지 평가하게 된다.

〈표 4-9〉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요소

연도	내 용	세부부문
경제 운영 성과	국내 경제의 거시경제적 평가	국내경제
		국제무역
		국제투자
		고 용
		가 격
정부 행정 효율	정부정책의 경쟁력 기여도 평가	생산성·효율성
		노동시장
		금 융
		경영활동
		형태·가치
기업 경영 효율	기업의 혁신성·수익성·책임성 평가	공공재정
		재정정책
		제도적 여건
		기업관련법
		사회적 제반여건
발전 인프라	기업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기본적·기술적·과학적 인프라와 인적자원 평가	기본인프라
		기술인프라
		과학인프라
		보건 및 환경
		교 육

자료 : 차용진·이홍재(2007).

이외에도 1990년대 들어 특정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국가경쟁력 지수들을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다(김득갑 외, 2008).

- World Bank의 Ranking on the ease of Doing Business
 - 총 10개 항목을 통해 181개국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사
 - 1만명의 기업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Heritage Foundation의 Index of Economic Freedom
 - 총 10개 항목을 이용하여 162개국의 경제자유도 조사

- World Bank, WTO, IMF 등의 기관자료 활용
- UNDP의 Human Development Index
 - 총 5개 항목을 통해 177개국의 삶의 질 조사
 - 각국의 경성자료를 이용
- A. T. Kearney의 Globalization Index
 - 총 12개 항목을 이용하여 72개국의 글로벌화 조사
 - 국제통화와 여행객 등 18개의 경성자료 이용

제3 절 국가브랜드 평가 비교 및 요인 분석

국가브랜드(Nation Branding)는 ‘한 국가의 명성지수를 구체적으로 객관화시킨 지표’를 의미하며, 국가브랜드 지수는 이를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는 잣대로 널리 활용된다. 이는 국가에 대한 호감도·신뢰도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군사력·경제력 등 Hard Power보다는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의 품격(國格)·이미지 등 Soft Power를 지칭한다. 국가브랜드 평가로 유명한 Anholt 보고서에서는 국가브랜드를 “How a country is seen by others”로 설명하고 있다. 결국 국가브랜드는 해외국가·국민이 우리 국가와 국민을 대하는 태도나 우리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국가브랜드 지수는 2005년 영국의 국가 브랜드 전문가 Simoon Anholt와 미국의 시장조사업체인 GfK 로퍼 사가 만든 Anholt-GMI 국가브랜드 지수(The Anholt-GfK Roper Nation Brands Index, 이하 NBI)이다. NBI는 국가의 국민, 통치, 수출, 관광, 문화와 유산, 투자와 이민이라는 6개의 항목으로 평가한 지표로, Anholt-GMI는 전 세계 18세 이상 성인남녀 2만5000명을 대상으로 타국가에 대한 정부·문화·관광·기업·이민·국민성 이미지를 설문 조사를 통해 NBI를 산정하여 매년 공식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국가브랜드 지수 및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Anholt NBI를 산정하기 위해 국가브랜드를 『국가경쟁력의 6가지 영역에 걸친 소비자 인식의 합』이라고 전제하고 각 영역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 있다(Anholt, 2005). 각 영역에 대한 상대적 이미지의 균형은 소비자들이 국가의 특성과 개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며, 이러한 구성요인(영역)은 국가 이미지 형성의 원천이 되며, 국가 브랜드 개성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김유경, 2007).

국가 이미지(브랜드)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국가 이미지가 국가의 경제적 발전, 정치적 분위기, 문화적 발전, 교육정도, 부유함, 국가의 크기, 인구밀도, 인종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며, 이러한 요소에 의해 영향 받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오미영 외, 2003). 국가 이미지는 경제, 국민, 자연환경, 기술, 사회, 역사, 정치, 문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Kotler and Gertner, 2002), 이와 유사한 결과로 국가 브랜드가 역사, 정치, 문화, 외교, 경제, 사회 및 문화, 예술, 스포츠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다(Roth and Romeo, 1992). 국가 이미지가 정치적 자원, 경제적 자원, 기술적 자원이라는 세 가지의 국가이미지 구성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요인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는 연구도 있다(Martin and Eroglu, 1993).

Anholt NBI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의 위상에 대해 살펴보면, 그 순위는 33위('08, 50개국 중)로 세계 13위의 경제규모('07년 GDP 기준)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표 4-10 참조). NBI 세부항목별 순위는 2008년 기준 정부 28위, 국민 31위, 이민·투자 28위, 관광 33위, 수출 15위, 문화 29위(그림 4-6 참조) 등으로 나타나, 수출 항목(15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30위 정도의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표 4-10〉 우리나라 국가브랜드지수의 현 주소(2008년 기준)

순위	1	2	3	5	7	8	10	15	17	24	27	28	33	34	36
국가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뉴질랜드	싱가폴	인도	중국	한국	태국	터키

자료 : 국가브랜드위원회 보도자료.

[그림 4-6] Anholt 국가브랜드 지수(NBI)상의 우리나라 브랜드 분석(2008년 기준)



자료 : 국가브랜드위원회 보도자료.

NBI 이외에도 마케팅 기업인 퓨처 브랜드(Future Brand)는 11월 초에 국가 브랜드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퓨처 브랜드의 국가 브랜드 지수는 여행의 '하드웨어'를 강조하는 관광산업 경쟁력 지수와 달리, 여행자들의 설문 조사를 주축으로 순위를 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 5 장

청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 1 절 청렴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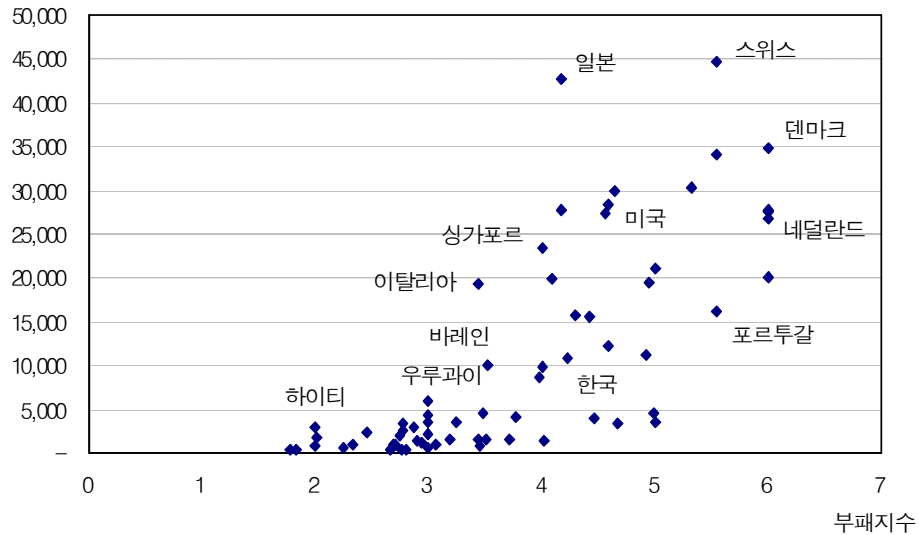
1. 청렴과 경제성장, 소득 간의 관계

국가 경제에 있어 제도적 변수의 중요성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강조되어 왔다 (Rigobon and Rodrik(2004), Rodrik, Subramanian and Trebbi(2004), Svensson(2005) 등). 이러한 제도적 변수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여기에서는 경제성장과 소득 및 부패지수 등의 횡단면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림 5-1]은 부패지수와 경제성장 간의 산포도이다. 분석결과, 청렴도가 높은 경제가 대체적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 차이로 인해 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OECD 내의 저소득 국가 그룹과 고소득 국가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림 5-1]에서 한국과 동구권 국가들을 한 그룹으로 보고 나머지 국가를 또 한 그룹으로 본다면, 이 기간 동안 두 그룹 모두에서 두 변수 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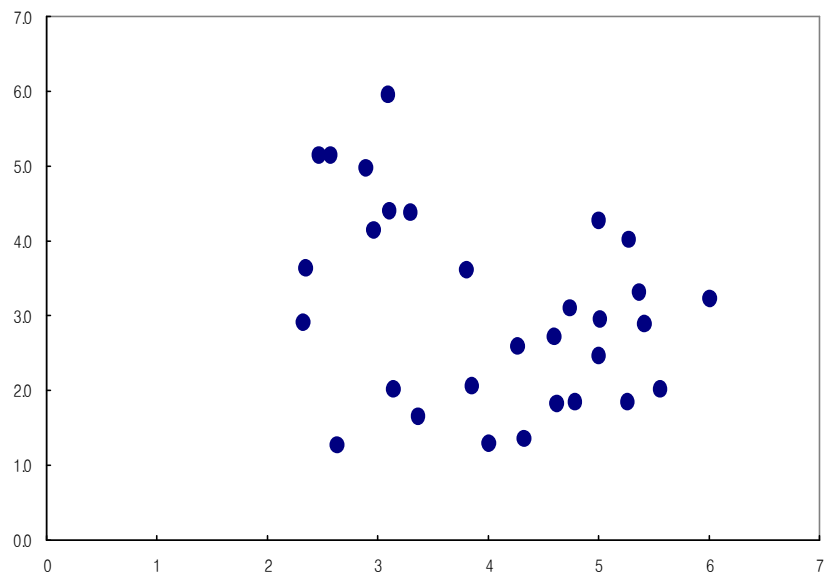
[그림 5-1] 국민소득과 부패지수

일인당 국민소득



자료: Political Risk Service Group(2004), World Bank(2004)에서 재구성.

[그림 5-2] OECD 국가 부패지수와 평균 경제성장률(2000~2006)



자료: ICRG(2007)와 IMD(2007)에서 재구성

차문중(2005)에 따르면, 1991~2000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청렴한 경제에서의 성장률이 높고, 성장률의 편차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991~2000년간 제도적 여건이 전체적으로 한 단위 정도 개선될 때 성장은 0.9~1.4%p 내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차문중(2005, 2008)는 OECD의 평균적 경제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부패로 인해 1990년대에는 연평균 약 0.72~0.83%포인트 내외, 2000년 이후에는 약 0.65~0.78% 포인트 정도의 성장 손실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표 5-1>은 1991년부터의 네 기간 동안 우리의 평균 부패지수를 각각 구하고, 이를 같은 기간 OECD 평균 부패지수 및 성장률과 비교하여, 우리가 OECD 국가들보다 부패수준이 높아 그 기간 동안 감수해야 했던 연평균 경제성장의 손실을 계산한 것이다. 이는 OECD 가입국 중 현저히 낮은 수준의 부패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5-1> 부패와 성장손실

기 간	1991~2000	1991~2001	1991~2002	1991~2003
평균부패지수				
한 국	4.22	4.11	3.95	3.85
OECD	4.80	4.75	4.70	4.71
한국 성장손실*				
(% 포인트)	0.83	0.97 (0.78)	1.19 (0.72)	1.37 (0.73)
한국 성장손실**				
(% 포인트)	0.72	0.85 (0.70)	1.05 (0.65)	1.22 (0.66)

주: *, **는 회귀식을 다르게 이용하여 추정하였을 경우를 뜻함. 괄호안의 수치는, 2000년 이후 한국의 부패지수가 4.22를 유지했을 경우를 가상했을 때의 성장손실임.

자료: 차문중(2008)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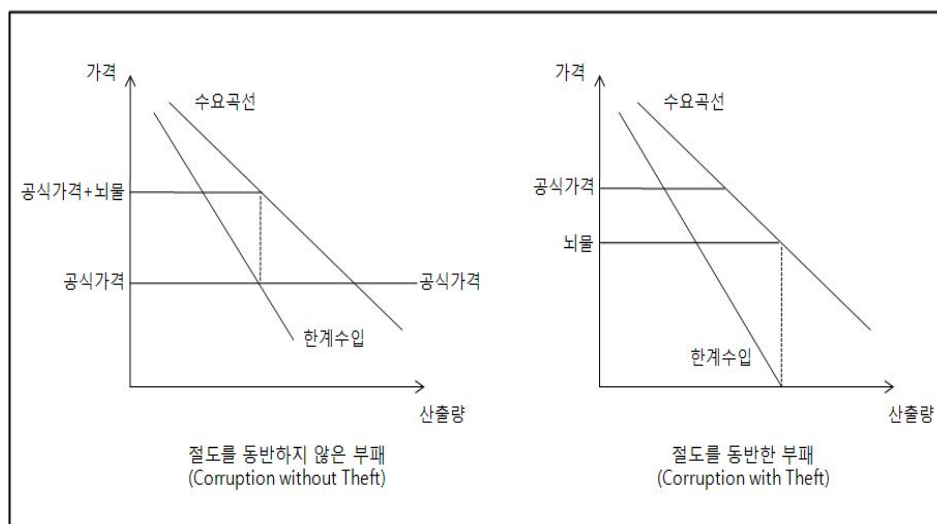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부패수준(부패지수로 측정된)과 경제성장과는 일의적이거나 단조적인 관계 이상의 복잡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제시되었다(차문중, 2005). 분석에 쓰인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살펴본 결과, 부패의 정도와 경제성장이 단순한 선형관계가 아닌, 비선형 관계를 지닐 개연성을 지닌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2. 이론적 모형

가. Shleifer and Vishny의 모형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기본적인 모형은 Shleifer and Vishny(1993)의 연구에서 출발한다. Shleifer and Vishny는 정치적 환경에 따라 부패 수준이 달라지며, 그로인해 성장이 저해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들은 정부 관료들의 부패를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여 독점적으로 정부의 재화를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즉 그들의 모형에서 관료들은 재화의 판매 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독점적 생산자와 같으며 재화 생산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지불하기 때문에 관료들에게 부가되는 생산비용은 없다. 따라서 정부 재화를 판매하는 관료들의 한계 비용은 재화의 공식 가격과 동일하다. 여기서 Shleifer and Vishny는 관료들이 재화 판매 금액을 정부에게 되돌려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Corruption without theft'와 'Corruption with theft'로 모형을 구분하였다. [그림 5-3]의 좌측의 그림은 관료들이 판매 금액을 정부에게 되돌려주는 '절도를 동반하지 않은 부패(Corruption without theft)'의 경우이며, 우측의 그림은 정부 재화의 판매 금액이 관료들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절도를 동반한 부패(Corruption with theft)'의 경우이다.

[그림 5-3] 절도 동반 여부에 따른 부패



자료 : Shleife and Vishny(1993), p.602-p.603.

‘절도를 동반하지 않은 부패’에서 재화 판매에 따른 한계비용은 공식가격과 동일하기 때문에 관료들이 실질적으로 재화를 판매(예를 들어 허가증 발급)하는 금액은 공식가격에 뇌물이 합산된 수준이다. 반면 ‘절도를 동반한 부패’에서 공무원들은 정부 재화 판매 사실을 숨김으로써 판매 금액을 정부에게 되돌려주지 않는다. 따라서 재화 판매에 대한 한계비용은 0과 같다. 결과적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 즉 뇌물의 금액은 공식가격과 같거나 또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절도를 동반한 부패’인 경우 뇌물의 수준이 공식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공무원과 구매자간의 이익이 일치된다. 따라서 적발이 어렵고 부패는 더욱 확산된다.

한편 ‘절도를 동반하지 않은 부패’인 경우, 구매자는 공식가격 뿐 아니라 뇌물도 지급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공식가격 이상이 된다. 때문에 재화의 구매자는 관료들의 이러한 부패 행위를 고발할 유인이 크다. 따라서 ‘절도를 동반하지 않은 부패’는 구매자들의 불평이 목살될 만큼 관료들의 권력이 강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 상호보완적인 복수의 정부 재화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수입업자는 수입품을 운송하고 판매하기 위해 몇 개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허가 및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건설업자는 소방·수도·치안 등의 부문에서 몇 개의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두 번째 모형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재화가 서로 이질적이며 상호보완적인 두 번째 모형은 정부의 권력분배와 그로 인해 달라지는 시장 구조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앙당국의 권력이 강력하여 공무원들이 결합된 구조의 독점가로서 정부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joint monopoly)이다. 두 번째는 중앙당국의 권력이 다소 완화되어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정부 재화를 독점 판매하는 경우(independent monopoly)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재화를 판매하는 공무원이 적어도 두 명 이상인 경우(competition)이다. 결과적으로 Shleifer and Vishny는 독립적 독점(independent monopoly)인 경우 공무원들은 개별적으로 뇌물을 추구하고 이 경우 산출량은 가장 낮아지고 성장은 저해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Shleifer and Vishny에 따르면 경쟁구조(competition)인 경우 부패는 극소화되고 전체적인 산출량은 극대화된다. 이를 통해 완전한 민주주의는 부패를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 부패가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Shleifer and Vishny의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독재 정권이 약화되고 민주주의로 이행되지만 완전한 민주주의로 성립되지 못한 경우, 즉 독립적 독점(independent monopoly)인 경우가 독재 정권이 강화된 경우, 즉 결합된 독점(joint monopoly)인 경우보다 부패는 극대화 되고 산출은 극소화 되어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Shleifer and Vishny(1993)의 연구가 실증적 분석에 주는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패는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부패한 관료들은 일종의 독점주의자와 같아서 부패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출량을 낮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패수준이 증가한다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부패는 장기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절도를 동반한 부패의 경우는 뇌물공여자나 수수자 모두가 부패할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 이러한 형태의 부패를 적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발달이라는 제도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는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부패와 경제성장에 관한 의미있는 연구는 장기 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부패와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기존의 신고전파 모형에서 경제성장 추정에 사용되는 변수 이외에 제도 관련 변수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도 관련 변수나 그 이외 다른 변수들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횡단면 분석 보다 고정효과 패널 분석 추정 기법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

나. 부패의 폐해 - 진입, 생산,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차문중(2005)은 시장에 대해 발생하는 공적 부문의 부패가 기업의 시장 진입, 생산, 이윤, 그리고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1) 기본적 생산 모형

인적 자본과 자본을 결합하여 한 가지의 대표 소비재를 생산하는 경제를 가정하자. 이 경제의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Y = AH^\alpha K^{1-\alpha},$$

여기서 A 는 이 경제의 기술 수준을, H 는 인적 자본을, K 는 실질 자본을 뜻한다. Ethier (1982)와 Barro and Sala-i-Martin (1995) 등의 논문에서 가정하는 바와 같이, 자본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자본재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지며, 자본의 축적은 이 특성들의 종류가 증가하며 이루어진다. 이 경우, 경제 내의 자본 스톡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

$$K = \left(\int_0^N x(j)^{1-\alpha} dj \right)^{1/(1-\alpha)}$$

다시 말해 총 자본 스톡은 각각이 $x(j)$ 로 표기되는 다양한 종류의 자본재의 연속적 총화(composite)로 해석된다. 경제 내의 대표 기업의 자본 임대 수준은 아래의 식 (5.1)과 같이 자본의 한계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m = \frac{\partial Y}{\partial x} = A(1-\alpha)H^\alpha x^{-\alpha}. \quad (5.1)$$

분석의 편의를 위해, 자본재 $x(j)$ 의 한계 생산비는 항상 1이라는 가정과 자본재는 완전히 감가상각 된다는 가정을 채택한다.⁸⁾ 이자율(r)이 고정되어 있는 정상 상태에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 함수는 아래와 같다.

$$\pi_t = -F + \int_t^\infty [mx - x]e^{-r(s-t)} ds.$$

이 식에서 F 는 고정 비용을 의미한다.

2) 부패와 새로운 기업의 진입 규제

경제 내에 부패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완전경쟁 형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하자. 또한 경제에 부패가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위험 중립적인) 기업이 특정 시장 내에서 조업하기 위해서는, 당국자에게 뇌물을 공여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즉 경제내의 부패가 암묵적으로 진입규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

8) Barro and Sala-i-Martin (1995), Borenzstein et al. (1998) 등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는 가정이다.

우 뇌물 공여는 이 경제 내에 존재하는 암묵적 진입규제를 피해가는 ‘허가’ 또는 ‘세금’과도 같다.

뇌물이 상품의 판매량과 비례하거나 또는 lump sum이거나에 관계없이 어느 경우이나 본 연구의 기본적인 결과는 변화하지 않지만, 편의상 상품의 판매량(또는 시장점유율)에 비례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이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한계비용(ν)은 뇌물이 없는 상태에서의 한계 비용($=1$)보다 크거나 같고($\nu \geq 1$), 뇌물 공여의 대가로 당국은 뇌물 공여 기업이 불완전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 진입, 일정 수준의 편익($\mu \geq 1$)을 올릴 수 있게 줄 것이다.⁹⁾ 이에 따라 뇌물 공여 기업의 이윤 함수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pi_t = -F + \int_t^\infty [\mu m x - \nu x] e^{-r(s-t)} ds. \quad (5.2)$$

μ 과 ν 는 이 경제의 부패 수준인 c 의 함수이다. 경제의 부패 수준이 증가할수록 비용을 지불하고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의 수는 감소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논리의 전개를 위해서 비용과 편익에 대한 다음의 두 가정을 도입한다.

[가정 1]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경제의 부패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뇌물 공여의 편익은 증가하지만 $\left(\frac{\partial \mu}{\partial c} \geq 0\right)$, 한계 편익의 증가율은 감소한다 $\left(\frac{\partial^2 \mu}{\partial c^2} < 0\right)$.

[가정 2]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경제의 부패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뇌물 비용은 초기에는 감소하지만 $\left(\frac{\partial \nu}{\partial c} \leq 0\right)$, 부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비용이 증가하고 $\left(\frac{\partial \nu}{\partial c} > 0\right)$, 그 이후 한계 비용의 증가율은 증가한다 $\left(\frac{\partial^2 \nu}{\partial c^2} > 0\right)$.

[가정 1]은 전반적 부패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저해되기 시작하며, 이에 따라 진입 기업의 수가 감소, 시장이 불완전 경쟁으로 변화하고 진입 기업들이 매 단위 생산으로부터 받는 편익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

9) 이 편익은 다양한 수단에 의해 얻어질 것이다. 당국이 경제 내에 조업할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제한하고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것도 그 일례이다.

산 단위당 획득할 수 있는 한계편익은 감소한다. [가정 2]는, 부패가 거의 없는 경제에서는 제도적 환경이 정비되어 있어 뇌물의 공여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부패가 만연되어가며 상대적으로 낮은 뇌물 비용을 지불하고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패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심해질 경우, 시장에 진입하여 조업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매우 적어지며, 이 적은 수의 ‘허가증’을 획득하기 위해 기업이 지불해야하는 비용은 증가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¹⁰⁾

[그림 5-4]는 위의 가정들을 만족시키는 μ , ν 와 부패의 수준 c 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¹¹⁾ 부패가 존재하지 않는 경제의 경우($c = 0$), 시장 진입이 뇌물 비용에 합당한 편익을 유발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청렴도가 높아 사회 제도나 관습, 경제적 제재, 법적 구속력 등에 의해 당국자를 부정부패에 연루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제에서는, 기업이 당국자를 매수하기 위해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은 아주 높은 반면, 시장의 형태는 완전 경쟁에 가까워 진입후 획득하는 편익은 낮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의 부패가 존재하는 경제에서는 뇌물을 공여하고 시장에 진입하여 이윤을 획득할 동기가 부여되며 이는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부패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의 견제, 감시 처벌 기능이 약화되고, 당국을 매수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어져, 시장에서 비호를 받으며 조업하기 위해 기업이 지불하여야 하는 뇌물액은 감소하는 것이다. [그림 5-4]에서 부패 수준이 c_0 를 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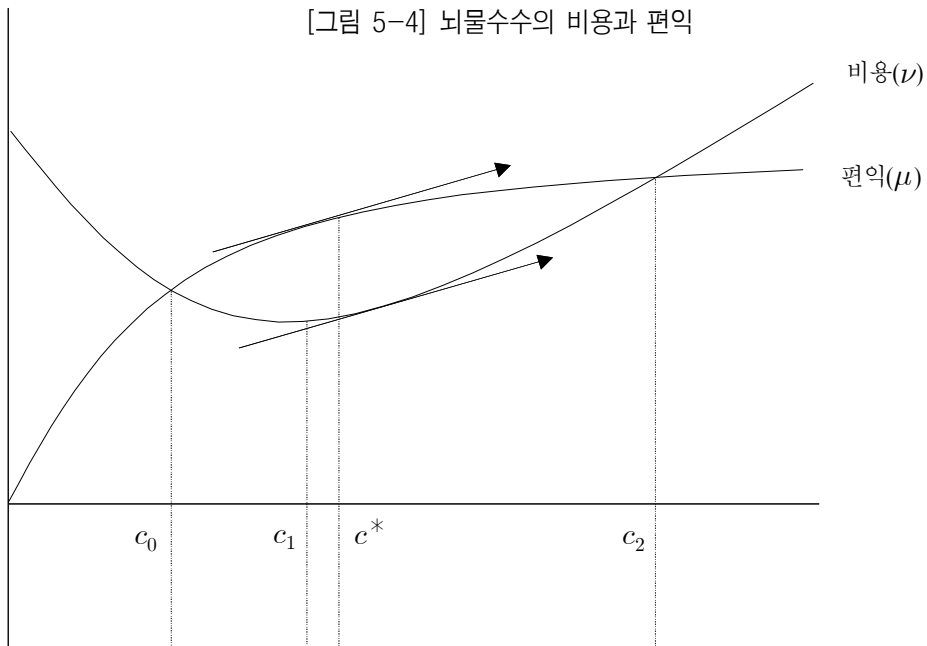
하지만 부패가 극심해지면서, 예를 들어 부패 수준이 그림의 c_1 을 지나면서, 뇌물의 ‘효율성’이 감소하며,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어느 수준 이상에서는 뇌물을 진입 비용으로 지불하며 조업해도 한계 편익이 비용에 미치지 못해 진입의 동기가 감소할 것이다. 그림에서 부패수준 c_2 가 이에 해당된다.

10) 예를 들어 부패가 심한 개발도상국에서 권력자의 측근이나 인척들이 주요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 일반 기업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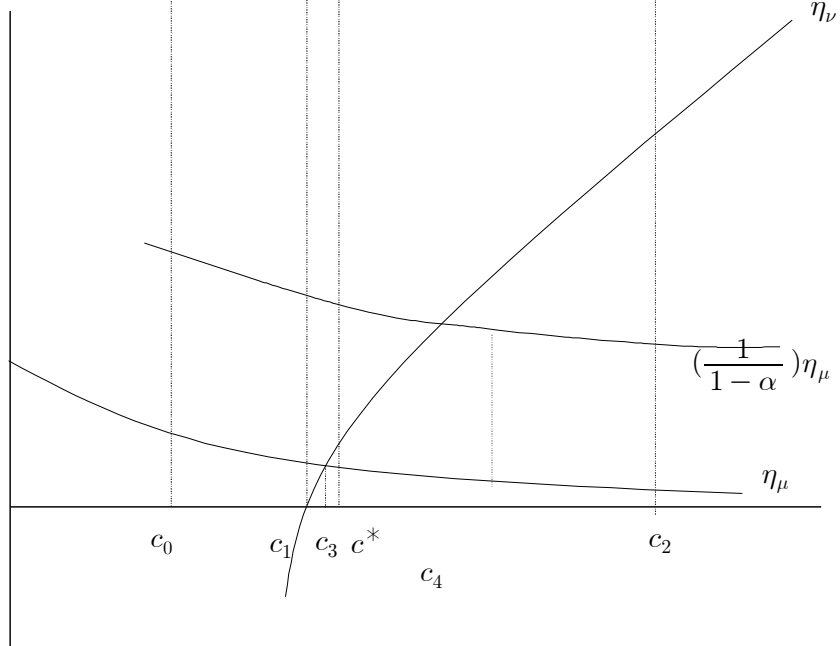
11) 뇌물의 대가나 비용이 반드시 그림과 같은 형태일 필요는 없다. 본 논문의 분석을 위해 정확한 함수의 형태나, 일계 도함수의 부호 등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추상적이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비용과 편익에 대한 가정을 도입하였다.

12) [그림 5-5]는 비용과 편익의 부패 탄력성을 스케치한 것으로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의한다.

[그림 5-4] 뇌물수수의 비용과 편익



[그림 5-5] 뇌물수수의 비용과 편익 - 탄력성과의 관계



경제의 부패 수준은 한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 전체에 주어진 환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어느 특정한 경제에서 기업이 편익과 비용의 차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패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부패수준과 비용 및 편익에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점을 찾는 것이다. 즉, 점 c^* 에서는 단위당 대가와 뇌물 비용의 차이가 극대화되고 그 이후부터는 단위당 지불하여야 하는 뇌물의 액수가, 비호를 받으며 조업함으로써 얻는 수입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만, 이 수준의 부패는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¹³⁾ 즉 이 그림은 부패 수준이 c^* 인 경제에 속한 기업이, 시장 진입 경우 획득하는 단위당 순 편익이 다른 경제에 속한 기업들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지만 단위당 순편익이 가장 높으므로 기업이 그 부패점을 찾아내는 것은 아니다.¹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부패의 수준이 심화됨에 따라 시장에서 조업하는 기업들의 수는 감소한다는 가정과 뇌물의 공여와 이에 따른 비용과 편익에 대한 두 가지 가정 하에, 부패의 증가가 생산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에서는, 특히 Cournot 형태의 경쟁이 존재하게 될 경우 생산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각 생산자의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시장 전체적인 생산량은 감소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패에 따른 묵시적 진입 비용이 존재할 경우, 부패의 수준이 증가하고 생산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기업이 생산량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경우도 있음을 보여, 부패에 따른 시장의 왜곡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더 심각하게 후생을 감소시킴을 보인다. 또한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의 왜곡 역시 분석하고, 데이터에 근거,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3) 자본 임대율과 기업의 생산 및 이윤에 미치는 효과

기업이 그 경제에 주어진 부패 수준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생산하여야 하는 최적 수준의 생산량 x 를 구하기 위해 식 (5.2)의 일계 조건을 구하여 정리

13). 가정 1과 2에 따르면, ν 와 μ 의 기울기를 동일하게 하는 부패 수준은 하나이며, [그림 3]의 $[c_0, c_2]$ 구역 내에 존재한다.

14). 그러나 개방경제를 가정할 경우, 생산자원의 국제적 이동이 가능할 경우에는 생산자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패수준을 지닌 나라로 이동하여 조업의 최적 부패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면 아래의 식 (5.3)과 같다.

$$x \mid_{corruption} = x^B = \left(\frac{\mu}{\nu}\right)^{\frac{1}{\alpha}} A^{\frac{1}{\alpha}} (1-\alpha)^{\frac{2}{\alpha}} H. \quad (5.3)$$

식 (5.3)을 (5.1)에 대입하여 풀면 자본 임대율은

$$m = \frac{1}{(1-\alpha)} \frac{\nu}{\mu}.$$

이 결과를 경제 내에 부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임대율 $1/(1-\alpha)$ 과 비교하면, 부패가 시장 임대율을 왜곡시킴을 알 수 있고, 그 왜곡의 정도는 부패의 함수가 되는 μ 와 ν 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의 가정에 따르면, 기업들이 뇌물의 수수를 통한 진입 동기를 지니는 경제의 부패도는, $\mu \geq \nu$ 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c \in (0, c_2)$ 이다. 즉 이 범위 내에서는 시장 임대율이 정상 임대율보다 낮아진다.

이 기업이 각 기간 중 항상 동일한 $x (= x \mid_{corruption})$ 단위를 생산, 판매하는 경우, 기업의 장기 이윤 π^B 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는데, 기업이 뇌물을 공여하고 시장에서 조업하기 위해서는 이 이윤이 양의 값을 가져야 한다.

$$\pi^B = -F + \left(\frac{\alpha}{1-\alpha}\right) \left(\frac{\nu}{r}\right) x^B \geq 0. \quad (5.4)$$

$\eta_{\mu c}$ 를 추가편익의 부패 탄력성,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경제의 부패 수준이 심화됨에 따라, 뇌물 공여의 대가로 시장에 진입한 기업이 상품을 한 단위 더 판매함으로써 얻는 수익의 변화율이라고 하고 $\left(= \frac{\partial \mu}{\partial c} \frac{c}{\mu}\right)$, $\eta_{\nu c}$ 를 뇌물의 부패 탄력성 $\left(= \frac{\partial \nu}{\partial c} \frac{c}{\nu}\right)$,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경제의 부패 수준이 심화됨에

따라, 당국의 비호를 받고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기업이 상품 한 단위당 공여해야 하는 뇌물 비용의 변화율이라 하자. 식 (5.3)으로부터 부패 수준에 따른 기업의 생산량의 변화를 구한 뒤, 이 두 가지의 탄력성을 이용하여 재구성하면, 부패 수준

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생산량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eta_{xc} = \frac{\partial x}{\partial c} \frac{c}{x} = \frac{1}{\alpha} [\eta_{\mu c} - \eta_{\nu c}]. \quad (5.5)$$

즉 경제의 부패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에 진입한 기업이 생산량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두 개의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5-5]는 부패의 수준과 탄력성의 관계를 [그림 5-4] 및 식 (5.5)와 관련지어 보여준다. 대가의 부패 탄력성이 비용의 부패 탄력성보다 클 경우 ($\eta_{\mu c} > \eta_{\nu c}$ 또는 $0 \leq c \leq c_3$), 뇌물을 공여하고 시장에 진입한 기업은 경제의 부패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을 증가 시킨다. 그러나 부패 수준이 c_3 를 넘는 경우, 부패 수준이 1% 변화에 따른 비용의 변화율이 편익의 변화율보다 크고, 이는 $(1/\alpha)$ 에 의해 확대되어 생산량의 변화율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즉 부패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은 감소하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장내의 생산자의 수가 감소할 경우, 일반적으로 각 생산자의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시장 전체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이것은 가격의 상승과 소비자의 후생 감소로 이어진다. 위의 분석은, 부패에 의한 진입비용이 존재할 경우, 진입 기업들은 주어진 부패 수준과 이에 따른 비용 및 편익을 고려하여 생산량을 조절하게 되는 바, 기업의 수가 감소하며 오히려 기업당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생산 총량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소비자의 후생은 규제가 없이 생산자의 수가 적었던 경우보다도 더욱 감소하게 된다.

기업의 생산량과 마찬가지로, 이윤도 부패 수준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부패가 기업의 장기 이윤 π 에 미치는 영향은 역시 비교 정태적 방법으로 식 (5.4)를 부패 수준인 c 에 대해 미분한 뒤 탄력성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식 (5.6)과 같이 구해진다.¹⁵⁾

$$\frac{\partial \pi^B}{\partial c} \frac{c}{\pi^B} = \left[\frac{1-\alpha}{\alpha} \right] \left[\frac{1}{1-\alpha} \eta_{\mu c} - \eta_{\nu c} \right] \quad (5.6)$$

15) 분석의 편의상 고정비용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진입 기업이 누리는 이윤은 부패의 수준에 따라 정해지는 진입 지불비용과 그로부터의 편익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다. 다시 말하면 부패의 수준이 [그림 5-5]에서의 부패 수준 c_4 에 도달할 때까지는 부패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편익의 탄력성이 비용의 탄력성보다 크고, 진입 기업의 이윤은 증가한다. 하지만 부패가 그 수준을 넘어설 경우, 진입 기업의 이윤은 감소하기 시작한다.

4) 소비 패턴에 미치는 효과

본문에서 부패가 기업의 수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분석한 바가 있지만, 부패는 경제 내의 왜곡을 증가시켜 소비 수준이나 패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부록에서는 표준적인 소비자의 기간 간(intertemporal) 효용함수를 사용하여 부패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적 소비자는 CRRA(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 효용함수를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U = \int_t^{\infty} \frac{C_s^{1-\sigma}}{1-\sigma} e^{-\rho(s-t)} ds, \quad (5.7)$$

식 (5.7)에서 C 는 소비, σ 는 상대적 위험 회피 지수, 그리고 ρ 는 시간 할인율(time discount factor)이다. 부패가 없는 상태에서 이 소비자의 최적 소비 경로는 오일러 공식(the Euler equation)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g = \frac{\dot{C}_t}{C_t} = \frac{1}{\sigma} (r - \rho). \quad (5.8)$$

본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제 내에 부패가 존재하여, 조업을 위한 뇌물 공여액과 그 대가가 정해진 경우, 식 (5.2)와 (5.3) 그리고 m 을 사용하여, 경제의 이자율 r 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r = A^{1/\alpha} \alpha (1 - \alpha)^{(2-\alpha)/\alpha} H[(\mu/\nu)^{(1-\alpha)/\alpha} - (1 - \alpha)(\mu/\nu)^{1/\alpha}] (F + \pi)^{-1} \quad (5.9)$$

자본에 대한 임대율의 식으로부터 $[\nu \geq (1 - \alpha)\mu]$ 의 관계가 얻어지고, 이 관

계에 따라 식 (5.9)의 이자율은 항상 0과 같거나 0보다 크다. 식 (5.9)의 이자율을 식 (5.8)에 대입하면, 부패가 존재할 경우 시간의 변화에 따른 최적 소비 경로는 다음과 같아진다.

$$g = \frac{1}{\sigma} \{ \Phi H(F + \pi)^{-1} (\frac{\mu}{\nu})^{1/\alpha} [\frac{\nu}{\mu} - (1 - \alpha)] - \rho \} \quad (5.10)$$

식 (5.10)에는 여러 모수와 변수들이 복잡하게 혼재하고 있어, 부패가 적정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명쾌하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대략적인 영향은 알 수 있다. 우리가 예상한 바와 같이, 시간에 따른 소비의 변화는 다른 여러 변수 및 모수와 더불어 부패의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뇌물로부터의 편익 μ 와 진입을 위한 뇌물 비용 ν 에 의존함을 보여 준다. 최초의 고정 투자가 많이 요구되든지, 불완전 경쟁 상태를 반영하는 진입자의 이윤이 클 경우 이자율은 감소하게 되고, 주어진 시간가치 할인율을 고려하면, 시간에 따른 최적소비의 변화율은 음(-)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 내에 부패가 존재하여 기업의 시장 진입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 진입 기업들은 완전 경쟁 상태보다 높은 이윤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는 이자율의 하락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비 증가율의 감소를 유발한다. 특히, 대가의 부패 탄력성이 비용의 탄력성보다 큰 경우, 부패 수준의 증가할수록 진입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며 소비를 훼손하게 되는데, 이는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부패 수준이 낮은 경우에 발생한다. 바꾸어 말하면, 부패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부패의 척결에 의해 기업 환경이 개선되는 경우, 소비의 상승 또는 생산량의 증가가 더욱 현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식 (5.10)은 또한 비용과 대가의 비율이 생산량의 자본 탄력성 $(1 - \alpha)$ 와 가까워질수록 소비의 증가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거나 소비 자체가 아예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인다. 이 사실은 경제의 발전 단계와 연관되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같은 수준의 부패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 부패의 비용과 편익도 동일할 것이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대체적으로 생산에 있어서의 자본의 비중(the product of capital share)이 높음을 고려한다면, 동일한 수준의 부패를 경험할 경우, 선진국의 비용/편익 비율(ν/μ)이 후진국의 그것보다 자국의 생산량의 자본 탄력성 $(1 - \alpha)$ 에 가까울 것이고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비수준

증가율의 감소 또는 소비 자체의 감소로 이어진다.

즉 같은 수준의 부패라도 선진국의 성장 또는 소비 증가에 미치는 타격이 크며, 이는 개발 도상국의 수준을 벗어나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는 종전과 같은 수준의 부패를 용인하더라도 성장과 소비의 훼손은 더욱 커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발견은 부패 척결 등을 통한 기업환경의 개선이 최근 우리 경제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한 논거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4. 실증적 분석

가. 기존 실증연구 분석

부패는 모든 국가의 사회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는 현상이지만 그 규모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많은 경제학자들이 부패의 규모를 결정하는 원인과 부패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패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는 대립되는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부패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Leff(1964)는 부패가 지닌 긍정적인 측면을 지적하였는데, 그 첫 번째는 부패가 공무원들의 성과급(piece-rate)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이는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패된 행동, 예를 들어 뇌물 지급을 통하여 기업은 경제 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패의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하였을 때, 일정수준의 부패는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Leff는 주장하였다.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조명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부패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Gould and Amaro-Reyes, 1983; United Nations, 1989; Klitgaard, 1991; and Shleifer and Vishny, 1993).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중 가장 폭넓게 인용되고 있는 최초의 연구는 Mauro(1995)의 연구

결과이다. Mauro는 1960년부터 1985년까지 58개 국가별 자료를 사용하여 부패와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횡단면 분석하였으며, 부패의 표준편차가 한 단위 증가할 때,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은 0.8% 포인트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부패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부패와 투자 간의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발견함으로써 부패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요한 경로로서 투자를 제시하였다. 한편 Tanzi and Davoodi(1997)는 부패와 공공부문의 투자와의 관계를 주목하여 부패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부패한 관료들은 뇌물을 보다 쉽게 획득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 또는 기존의 사회기반시설을 유지·운영하기 위한 사업 보다는 규모가 큰 사업에 주목하여 공공부문의 지출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부패는 공공부문의 투자를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투자가 생산성 증진 및 기존의 사회기반시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저해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Gupta et al.(2001)은 정부지출 중에서 국방비는 뇌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반면, 경제 성장에는 주요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부패수준과 국방비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한편 Ehrlich and Lui(1999)은 정부의 개입, 정치 제도, 그리고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960년부터 1992년까지 152개 국가별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분석을 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 정부의 개입 및 부패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경제 발전 단계를 구분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패 및 정부의 개입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선진국일수록 더 작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렇듯 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부패가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으로 귀결되고 있다 (Jain,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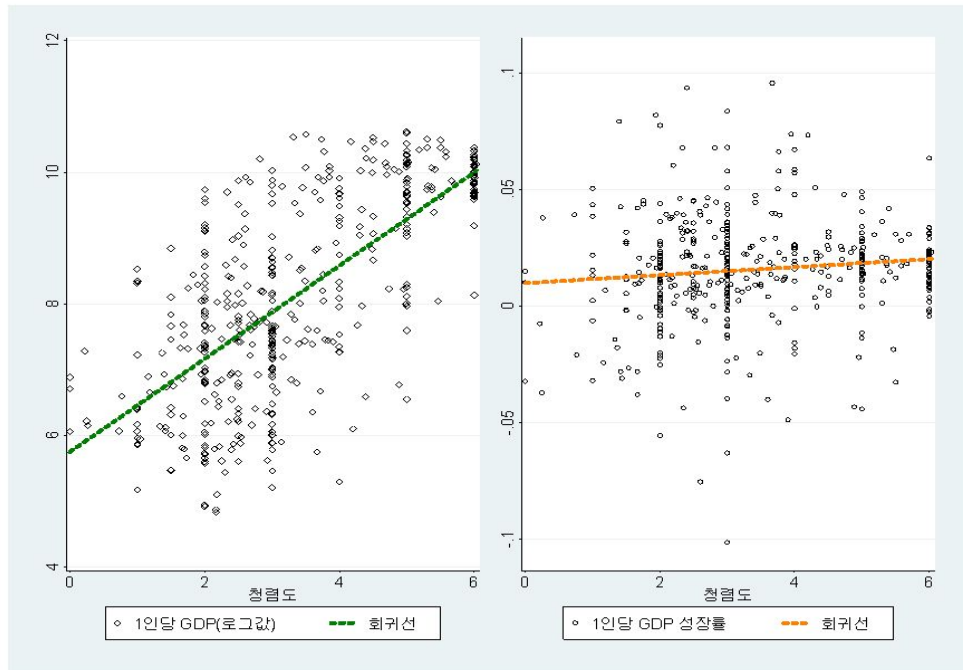
한편 최근에는 부패와 경제성장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이들 간의 관계의 주요한 경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Pak(2001)은 1960년부터 1985년까지 5년 단위의 평균값으로 구성된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Pak은 부패가 인적자본의 수준과 사적 투자의 비중을 감소시키며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함으로써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각 경로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은 각각 14.8%, 21.4%, 53.0%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부패가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약 11.8%이며, 나머지는 인적자본과 사적 투자의 감소, 그리고 정치적 불안

정으로 인한 간접효과로 설명된다고 주장하였다. Pellegrini and Gerlagh(2004)는 Pak과 유사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부패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와 그 경로에 관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부패와 경제성장의 주요한 경로로 Pak이 고려한 투자, 인적자본, 정치적 불안정과 더불어 Pellegrini and Gerlagh는 무역정책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 부패로 인해 가장 많이 왜곡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은 투자와 무역 개방도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Meon and Sekkat(2005)은 정부의 질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패가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증폭되고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이 악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의 낮은 질적 수준의 대리지표로서 Meon and Sekkat는 법질서의 약화와 비효율적인 정부, 그리고 정치적 혼란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정부의 질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 커지며, 이는 투자를 통제한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발견을 통해 Meon and Sekkat는 부패가 투자의 감소를 통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부패와 경제성장간의 음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으며, 그 주요한 통로로서 투자 감소, 인적자본의 감소, 무역정책, 정치적 불안정, 제도의 질적 수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연구방법

[그림 5-6]은 국가별 청렴지수와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산포도이다. 좌측의 산포도는 청렴지수와 1인당 국민소득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렴지수와 1인당 국민소득간의 상당히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우측의 산포도는 청렴지수와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좌측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들간의 관계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청렴지수의 증가가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을 여전히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가 제시하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바탕으로 청렴과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5-6] 청렴과 GDP 수준 및 GDP 증가율 산포도



청렴과 경제성장 사이의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 회귀식의 추정에 사용된 주요 독립변수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독립 변수들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한다는 것은 부패가 누락된 다른 변수의 대리변수가 되어 성장에 영향을 주는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추정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성장회귀식은 기존의 주요 독립변수를 다 포함하는 포괄적(encompassing) 추정식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 입각하여 이 연구는 기존의 경제성장 추정식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되었던 자본, 교육, 제도, 정책 관련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청렴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추정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의 자료를 포함하여 가능한 장기간의 시계열자료와 횡단면 자료를 구축하여 패널 추정을 시도한다. 둘째, 그동안의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에 대한 문헌의 성과를 고려하여 기존 문헌에서 강조하였던 결정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패와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추정한다. 즉 자본축적, 인적자본, 제도, 무역, 인구성장률 등의 변수와 더불어 부패를 독립변수로 추가한 후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셋째, 경제성장에 미치는 시간불변적인 요인들을 제어하기 위해 고정효과 패널분석을 시도한다. 넷째, 본 연구의 논의는 부패에 관한 두 종류의 연구 성과들, 즉 부패가 경제성장률에 주는 영향과 부패가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진행한다.

실증분석에 쓰인 추정식은 다음의 두 개의 식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1980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단위의 평균값으로 구성된 204개 국가별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Growth = \alpha_0 + \alpha_1 Corruption + \alpha_2 Corruption^2 + T' \Gamma' + X' A' + e$$

$$T_j = \beta_0 + \beta_1 Corruption + \beta_2 Corruption^2 + Z' B' + v$$

첫 번째 식은 Barro(1991)의 성장회귀 모형을 기반으로 구성된 부패와 경제성장률간의 추정식이다. 따라서 통제변수 X 는 Barro의 기본성장회귀 모형에서 사용한 1인당 실질 GDP의 초기값, 인적자본의 초기값, 인구성장률을 나타낸다. T 는 경제성장의 동력인 동시에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통로로서 기존 연구에서 지금까지 주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투자와 인적자본, 그리고 무역을 고려하였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는 무역정책의 대리변수로서 무역 개방도를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부패가 무역개방 수준을 악화시키고 그로인해 경제성장이 저해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변수로서 GDP대비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부패가 무역 감소의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적자본은 시차를 두고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기의 인적자본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Barro의 성장회귀 모형에서 고려한 인적자본의 초기값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함과 동시에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통로으로써 인적자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민주적 책임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실증분석 결과의 견고함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식은 부패가 각 경제성장 동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한 추정식이며, Z 는 통제변수로서 1인당 실질 GDP, 인구증가율, 제도가 이에 포함된다. 제도변수는 관료들의 권력 분배를 위한 제도화된 제약, 즉 제도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1(법적 의회의 부패)부터 7(다수 정당의 민주주의)까지 지수화되어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한편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 부패와 성장간의 비선형관계를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모형에 부패의 제곱항을 추가하였다.¹⁶⁾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패지수는 Political Risk Services Inc.에서 매년 제공하는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자료이다. ICRG 부패지수는 특정 국가의 부패정도를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하여 평가하며, 가장 부패한 것을 의미하는 0부터 가장 청렴한 것을 의미하는 6까지 지수화 되어있다. 이때 부패는 수입과 수출의 인허가, 세금 책정, 대출 등과 연관하여 정부 관료들에게 비합법적으로 지급되는 뇌물의 형태를 의미한다.¹⁷⁾

부패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가설은 첫 번째 식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패와 경제성장간의 주요한 통로인 경제성장 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첫 번째 식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식을 추정함으로써 부패가 각각의 경제성장 동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부패가 경제성장 동력을 악화시키고 그로 인해 성장을 저해하는 간접 효과를 모두 추정하고자 한다.

다. 분석결과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단위의 평균값으로 구성된 204개 국가별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부패와 경제성장, 그리고 제반 변수들의 장기적인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 5년 단위의 평균값의 사용은 단기 변동성을 감소시켜준다(Deininger and Squire, 1996 ; Li et al., 2000; Paldam, 2002; Mendez and

16) Ehrlich and Lui(1999)는 부패가 GDP 수준과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상이하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부패와 성장간의 비선형관계가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Mendez and Sepulveda(2006)는 부패의 제곱항을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부패와 성장간의 단조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7) 부패지수는 ICRG 이외에 IMD(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지수와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Mauro(1995)는 서로 다른 부패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Gupta et al.(1998)와 Mendez and Sepulveda(2006)은 부패지수를 달리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계수값이 견고(robustness)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Sepulveda, 2006). 한편 추정방법은 Pooled OLS와 고정효과 패널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사회·정치적 제도의 수준, 문화적 차이, 법적 구조 등 부패 및 경제성장에 모두 영향을 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부패와 경제성장 간의 내생성 문제를 야기한다. 때문에 이와 같은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OLS로 추정하게 되면 편의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정효과 패널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국가 간의 시간불변적인 이질성을 통제함으로써 Pooled OLS 추정치보다 신뢰성있는 추정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Pooled OLS와 Fixed Effect 추정방법에 근거하여 부패와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5-2>와 <표 5-3>과 같다. 모형(8)은 Mauro가 사용한 기본모형이며, 모형(9)와 모형(10), 모형(11)은 Mauro의 기본모형에 부패와 경제성장의 통로로서 투자변화율과 무역을 추가적인 통제변수로서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모형(12)는 제도 변수인 민주적 책임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분석결과의 견고함을 검증하였다.¹⁸⁾

한편, 모형(8)(또는 모형(13)), 모형(9)(또는 모형(14)) 그리고 모형(10)(또는 모형(15))의 결과를 통해 전기의 인적자본, 투자변화율, 무역 등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성장동력 요인의 유의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투자변화율은 모든 추정식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OLS와 고정효과 패널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유의수준 1%에서 투자와 경제성장률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한편, 중등교육 취학률을 이용한 전기 인적자본과 GDP 대비 무역의 비중을 사용한 무역 관련 변수도 투자와 마찬가지로 OLS와 고정효과 패널 추정식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 변수의 경우 고정효과 패널모형으로 추정한 모형에서 민주적 책임성과 경제성장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그밖에 GDP의 초기값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감소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됨으로써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 모형¹⁹⁾에서 제시하는 성장수렴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인구성장률과 일인당 경제성장률은 음의 관계가 존재함이 검증되었다.

18) 모형(13)~모형(17)은 각각 모형(8)~모형(12)를 고정효과 추정방법에 근거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19) Solow(1956), Cass(1965), Koopmans(1965)을 구체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표 5-2〉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980년~2007년) : Pooled OLS

	(8)	(9)	(10)	(11)	(12)
부패	0.010 (2.93)***	0.011 (3.05)***	0.010 (2.99)***	0.011 (3.10)***	0.010 (2.90)***
부패 ²	-0.001 (2.42)**	-0.001 (2.56)**	-0.001 (2.55)**	-0.001 (2.67)***	-0.001 (2.60)***
초기 GDP	-0.007 (5.47)***	-0.007 (5.56)***	-0.008 (5.88)***	-0.008 (5.99)***	-0.008 (6.01)***
인구 성장률	-0.772 (6.05)***	-0.771 (6.33)***	-0.861 (6.85)***	-0.854 (7.14)***	-0.818 (6.48)***
초기 인적자본	0.018 (2.29)**	0.021 (2.75)***	0.017 (2.19)**	0.020 (2.65)***	0.018 (2.39)**
투자 변화율		0.148 (5.09)***		0.144 (5.08)***	0.142 (4.95)***
무역			0.005 (1.90)*	0.004 (1.77)*	0.004 (1.83)*
민주적 책임성					0.001 (0.92)
관측치수	403	396	398	392	392
R ²	0.1806	0.2530	0.2128	0.2829	0.2826
F-test	[0.000]	[0.000]	[0.000]	[0.000]	[0.000]

주 : 1) 종속변수는 1인당 경제성장률임.

2) ()의 숫자는 t값이고 []의 숫자는 P값이다.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부패지수는 높을수록 부패수준이 낮다는 것, 즉 청렴하다는 것을 의미

4) 초기 GDP와 초기 인적자본은 1980년의 값을 사용

5) 고정효과 패널모형과 같이 초기값을 전기값으로 사용하여 관측치 수를 동일하게 하였을 경우에도 추정치의 유의성 및 결과가 이상의 결과와 동일하게 검증됨.

〈표 5-3〉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980년~2007년) : 고정효과 모형

	(13)	(14)	(15)	(16)	(17)
부패	0.007 (1.70)*	0.007 (1.96)*	0.008 (1.94)*	0.008 (2.05)**	0.006 (1.68)*
부패 ²	-0.001 (2.45)**	-0.001 (2.54)**	-0.001 (2.41)**	-0.001 (2.48)**	-0.001 (2.35)**
전기 GDP	-0.035 (7.41)***	-0.028 (6.28)***	-0.038 (7.64)***	-0.030 (6.14)***	-0.031 (6.36)***
인구 성장률	-0.836 (4.46)***	-0.878 (5.04)***	-0.802 (4.15)***	-0.858 (4.71)***	-0.794 (4.37)***
전기 인적자본	0.020 (2.55)**	0.012 (1.59)	0.015 (1.81)*	0.010 (1.30)	0.006 (0.76)
투자 변화율		0.156 (6.80)***		0.146 (6.15)***	0.139 (5.88)***
무역			0.022 (3.06)***	0.011 (1.50)	0.010 (1.36)
민주적 책임성					0.003 (2.79)***
관측치수	419	411	414	407	407
no. of groups	80	80	80	80	80
R ²	0.2159	0.3208	0.2383	0.3219	0.3381
F-test	[0.000]	[0.000]	[0.000]	[0.000]	[0.000]

주 : 1) 종속변수는 1인당 경제성장률임.

2) ()의 숫자는 t값이고 []의 숫자는 P값이다.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부패지수는 높을수록 부패수준이 낮다는 것, 즉 청렴하다는 것을 의미

4) 고정효과 패널모형에서는 인구성장의 초기값과 같은 시간불변의 변수는 자동적으로 통제가 되므로 여기서는 그 전기의 값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통제

이 연구의 목적 상 가장 중요한 결과로서 <표 5-2>와 <표 5-3>은 부패와 경제성장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모든 추정식에서 부패와 경제성장은 음의 관계가 발견되었으며 그 계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값의 크기로 이를 살펴본다면 부패의 제곱항을 제외하고 부패지수 자체가 1만큼 감소할 때, 즉 추정식에서 사용된 부패지수 변수가 의미하는 대로 청렴지수가 1만큼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약 0.6% 포인트에서 0.8% 포인트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패지수가 1만큼 감소할 때 경제성장률은 0.8% 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Mauro(1995)의 추정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한편, 부패의 제곱항과 경제성장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검증됨으로써 부패와 경제성장 간의 비선형관계, 즉,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부패수준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부패와 성장 사이의 이 결과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유의하며 특히 다른 변수와 관련된 추정 결과도 대부분의 경제성장 분석 결과와 유사하여 이 연구의 발견의 신뢰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 발견과 이상에서 논의한 부패지수와 경제성장 사이의 발견을 종합하면 부패는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는 부패가 감소함에 따라 체감한다는 것이다.²⁰⁾ 이는 다음의 예시가 보여주듯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음의 효과가 부패의 제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양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서 얻은 결과이다.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예시될 수 있다. 부패지수의 평균은 3.4이며 부패의 제곱의 평균은 13.6이다. 모든 통제변수를 다 추가하여 추정한 (17)모형의 고정효과 추정에서 부패의 계수값은 0.006이며 부패의 제곱항의 계수값은 -0.001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부패지수의 한 단위, 즉 1 만큼의 변화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에 0.41%의 영향을 미친다. 즉 부패지수가 1만큼 감소한다면 연평균경제성장률은 0.41% 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²¹⁾ 예를 들어 2000년-2007년까지의 한국의 부패지수는 평균 2.55이었으며 동일한 기간 일본의

20) <표 4-5>의 추정식 (13)-(17)에서 부패와 부패의 제곱항의 계수값에 따르면 부패의 감소가 성장에 미치는 정의 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부패지수가 3-4 사이에 있을 경우이다. 예를 들어 추정식 (17)의 경우 부패지수가 3일 때 부패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0.09%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패지수의 최고값, 즉 부패가 가장 낮은 경우인 6일 때는 부패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없으므로 나타났다. 즉 청렴도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부패지수가 0에서 3-4에 이를 때까지 증가하다가 3-4에 이르러 최고에 달한 다음 부패지수가 계속 증가하면 부패가 성장에 미치는 한계 효과는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21) 이런 의미에서 부패의 제곱항을 변수로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연구, 예를 들면 Mauro(1995)의 연구는 결과적으로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과대추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패지수는 3.41이었다. 이는 만약 한국이 일본의 수준만큼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한국의 연평균경제성장률이 0.35% 포인트 더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는 부패가 투자, 인적자본, 무역 등의 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효과, 즉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와 부패와의 관계, 즉 성장동력과 부패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4>와 같다. 모형 (18)은 부패가 투자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며, 모형(19)은 부패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형(20)은 부패가 인적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각각의 모형은 고정효과 추정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유의수준 1%에서 부패수준과 각 성장동력 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검증되었다. 이를 통해 부패수준이 높을수록 투자가 감소하며 GDP 대비 무역 비중이 줄어들고 인적자본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부패의 제곱항과 경제성장 동력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검증됨으로써 부패와 경제성장동력 사이의 비선형관계, 즉, 부패가 투자, 무역, 인적 자본 등 경제성장동력에 미치는 영향은 부패지수가 증가할수록, 즉 청렴도가 개선될수록 그 한계 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른 변수들과 경제성장 동력과의 관계는 대체로 예상과 일치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의 질은 투자변화율 및 무역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모형(18)과 모형(19)의 추정을 통해 검증되었다. 또한 1인당 GDP 수준이 높을수록 무역은 증가하고, 인적자본의 수준은 향상된다는 것을 모형(19)과 모형(20)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밖에 인구성장률은 무역 및 인적자본의 수준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모형(19)과 모형(20)을 통해 검증되었다.

〈표 5-4〉 부패가 경제성장 동력에 미치는 영향 (1980년~2007년)

	(18) 투자변화율	(19) 무역	(20) 인적자본
부패	0.025 (2.59)***	0.062 (2.02)**	0.101 (3.32)***
부패 ²	-0.003 (2.33)**	-0.014 (3.09)***	-0.017 (3.96)***
GDP수준	-0.002 (0.23)	0.211 (6.07)***	0.233 (6.82)***
인구성장률	0.472 (1.06)	-3.960 (2.68)***	-10.134 (7.05)***
제도	0.001 (3.16)***	0.002 (1.85)*	0.001 (0.96)
관측치수	365	370	368
no. of groups	73	73	71
R2	0.0688	0.2804	0.3917
F-test	[0.001]	[0.000]	[0.000]

주 : 1) 모형(18)~모형(20)의 종속변수는 각각 투자변화율, 무역, 인적자본임.

2) ()의 숫자는 t값이고 []의 숫자는 P값이다.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부패지수는 높을수록 부패수준이 낮다는 것, 즉 청렴하다는 것을 의미

제2 절 청렴이 성장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1. 자 료

본 절에서는 PRS Group의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ICRG)와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DI) 등의 1990~2006년 동안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에 쓰인 변수가 모두 사용 가능한 대상국을 분석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ICRG 자료는 조사대상범위가 넓고 타 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시계열자료를 수록, 학술적인 연구뿐 아니라 투자나 기획 등의 의사결정과정에도 널리 쓰이고 있는 지표이다.

부패와 경제성장의 안정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회귀모형에서는 총 75개국을 대상국으로 선정하였고, 경제위기 경험확률에 대해 분석한 프로빗 모형에 쓰인

대상국의 수는 69개국으로 이는 경제위기 경험 횟수에 대한 가용자료 한계에 기인한다. 제도적 변수, 특히 부패가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1990~2006년 동안의 평균치를 활용한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상대적으로 단기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990~1999년, 2000~2006년까지의 두 기간으로 나누어 추정을 시도하였다.

2. 부패와 성장변동성 - 실증분석

가. 모형

각 경제의 부패 수준과 성장변동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쓰인 기본적인 함수의 형태는 아래와 같다.

$$v = \beta_0 + f(\text{corruption}) + \beta'X + e$$

여기서 v 는 성장변동성 (각 기간별 연평균 성장률의 표준편차), β_0 는 상수, $f(\cdot)$ 는 각국의 평균 부패 수준의 함수, β 는 계수의 벡터이며, X 는 성장변동성과 관련된 다른 변수들, 그리고 e 는 고전적인 가정들을 만족시킨다고 가정되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벡터 X 는 전통적 성장 분석에서 활용되는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부패 수준과 통제변수 간의 교호항을 설명변수로 채택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기본적으로 OLS로 추정한 결과, GLS 추정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아 OLS 추정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하겠다.

모형에서 쓰인 변수를 구축하기 위해 성장변동성을 설명하는 통제변수들(즉, 일인당 GDP 초기값, 총투자, 재학년도, 수출입 등)은 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 통해 구하였고, 인적자원 변수는 Barro and Lee(2000)에서 계산된 평균 재학년도를 적용하였다.

나. 회귀분석 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1990~2006년 동안의 부패 수준이 ICRG 지수로 한 단위만큼 개선됨에 따라 성장변동성(표준편차)은 0.39%p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 기간을 나누어 추정한 결과, 1990~1999년 동안에는 그 효과가 0.44%p로, 2000~2006년 동안에는 0.43%p로 추정되었으며 모든 기간에서의 추정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표 5-6 참조).

분석결과를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부패지수의 증가율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단기적인 부패 수준의 증감보다는 법·질서 준수 수준 자체가 성장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990~2006년 동안의 추정결과에서 부패 수준의 단기적 증감 효과에 대한 약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2000~2006년 이후 부패지수와 총투자 혹은 총교역액의 교호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게 되는데 이는 2000년 이후 국가 간 투자 확대 및 교역 증대가 부패 수준과 함께 성장변동성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수준을 대변하는 재학년도와 부패 수준의 교호향의 유의성에 대한 약한 증거를 통해 청렴교육 등을 통해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는 교육 수준을 고려한 상태에서 부패 수준과 성장변동성 간의 관계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초기 일인당 GDP은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보이고 있어, 예상한 바와 같이 초기의 일인당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성장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불안정한 경제성장 추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일인당 소득 수준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할 경우 법·질서 준수와 성장변동성 간의 분석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2000~2006년 동안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간별로 초기 일인당 소득 수준이 부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중·장기에 걸쳐 부패 수준의 개선이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일부 추정결과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청렴도의 변화가 성장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고려해야 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표 5-5〉 부패와 성장변동성: 기간별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

변 수	1990~2006			
	(1)	(2)	(3)	(4)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상수항	4.0890*** (0.5653)	3.1769*** (0.7143)	3.6936*** (0.9076)	3.7549*** (0.9951)
부패	-0.3855** (0.1563)	0.0270 (0.2551)	-0.6365 (0.4447)	-0.6534 (0.4608)
부패 증가율	-2.9418* (1.5594)	-3.0688** (1.5283)	-2.9167* (1.5031)	-2.9054* (1.5157)
일인당 소득		-0.5595** (0.2769)		-0.1373 (0.8807)
부패 × 일인당 소득			-0.0161 (0.0235)	-0.0155 (0.0240)
부패 × GDP 대비 총투자			-0.1843*** (0.0678)	-0.1582 (0.1813)
부패 × 재학년도			0.0614* (0.0318)	0.0614* (0.0321)
부패 × GDP 대비 총교역액			2.3012 (1.6732)	2.2622 (1.7038)
F 통계량	5.87	5.44	3.93	3.32
Adj. R_Square	0.1163	0.1526	0.1919	0.1802
관측값수	75			

주: 1) ()는 추정계수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 **, *는 각각 추정계수가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F 통계량은 모든 회귀계수의 결합이 유의한지에 대한 검정통계량을 나타냄.

3) 부패지수 증가율은 기간 증가율을 적용

4) 일인당 소득(GDP per capita)는 각 기간별 초기값을 나타내며, 단위는 US\$ 10,000임.

〈표 5-6〉 계속

변 수	1990~1999			
	(1)	(2)	(3)	(4)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상수항	4.3313*** (0.5566)	3.1196*** (0.7346)	3.7469*** (0.9454)	3.9329*** (1.0018)
부패	-0.4408*** (0.1565)	0.0889 (0.2657)	-0.6114 (0.4653)	-0.6547 (0.4734)
부패 증가율	-2.8990 (3.2038)	-5.8025* (3.3232)	-3.9686 (3.2448)	-4.4897 (3.3799)
일인당 소득		-0.7243** (0.2985)		-0.5412 (0.9245)
부패 × 일인당 소득			-0.0207 (0.0240)	-0.0185 (0.0244)
부패 × GDP 대비 총투자			-0.1969*** (0.0699)	-0.0957 (0.1866)
부패 × 재학년도			0.0600* (0.0327)	0.0589* (0.0330)
부패 × GDP 대비 총교역액			2.4280 (1.7027)	2.2885 (1.7275)
F 통계량	4.35	5.06	3.45	2.97
Adj. R_Square	0.0831	0.1413	0.1656	0.1574
관측값수	75			

주: 1) ()는 추정계수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 **, *는 각각 추정계수가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F 통계량은 모든 회귀계수의 결합이 유의한지에 대한 검정통계량을 나타냄.

3) 부패지수 증가율은 기간 증가율을 적용

4) 일인당 소득(GDP per capita)는 각 기간별 초기값을 나타내며, 단위는 US\$ 10,000임.

〈표 5-6〉 계속

변 수	2000 ~ 2006			
	(1)	(2)	(3)	(4)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Coefficient
상수항	4.3140*** (0.6230)	4.0913*** (0.7621)	4.5284*** (0.9722)	4.0373*** (1.0881)
부패	-0.4291** (0.1714)	-0.3208 (0.2727)	-0.9929** (0.4832)	-0.8378* (0.5072)
부패 증가율	-2.2885 (1.5735)	-2.1583 (1.6018)	-2.0986 (1.5512)	-2.4105 (1.5818)
일인당 소득		-0.1547 (0.3018)		0.9009 (0.8968)
부패 × 일인당 소득			-0.0284 (0.0259)	-0.0307 (0.0260)
부패 × GDP 대비 총투자			-0.1337* (0.0748)	-0.3345 (0.2134)
부패 × 재학년도			0.0681* (0.0352)	0.0656* (0.0353)
부패 × GDP 대비 총교역액			3.1585* (1.8402)	3.1718* (1.8401)
F 통계량	5.27	3.56	3.21	2.90
Adj. R_Square	0.1022	0.0930	0.1502	0.1503
관측값수	75			

주: 1) ()는 추정계수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 **, *는 각각 추정계수가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F 통계량은 모든 회귀계수의 결합이 유의한지에 대한 검정통계량을 나타냄.

3) 부패지수 증가율은 기간 증가율을 적용

4) 일인당 소득(GDP per capita)는 각 기간별 초기값을 나타내며, 단위는 US\$ 10,000임.

3. 부패와 경제위기 - 실증분석

가. 모형

부패가 경제위기 경험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y_i^* = \alpha + \beta' X_i + u_i, \quad u_i \sim_{i.i.d} (0, \sigma^2)$$

$$y_i = \begin{cases} 1 & \text{if } y_i^* > 0 \\ 0 & \text{otherwise} \end{cases}$$

여기서 y_i^* 는 성장안정성에 대한 잠재변수²²⁾이고, y_i 는 경제위기 경험 유무이며, α 는 상수항, β 는 계수의 벡터이며, X_i 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다른 변수들, 그리고 u_i 는 위의 모형에서 고전적인 가정들을 만족시킨다고 가정되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앞서 살펴본 회귀식에서 쓰인 성장변동성을 설명하는 통제변수들(즉, 일인당 GDP 초기값, 총투자, 재학년도, 수출입 등)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험 확률 및 한계효과라는 두 가지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부패와 경제위기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주어진 설명변수의 (평균)값에 대한 경험확률을 추정(혹은 예측)하는 방법이다. 여기서의 경제위기 경험확률은 표준누적정규분포 함수를 연계함수로 갖는 프로빗 모형 하에서 주어진 설명변수의 평균조건인 경우의 경제위기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한다. 경제위기 경험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begin{aligned} P(y_i = 1 | \bar{X}_i) &= F(\bar{X}_i \beta) \\ &= \Phi(\bar{X}_i \beta) = \frac{1}{\sqrt{2\pi}} \int_{-\infty}^x e^{-\frac{z^2}{2}} dz \end{aligned}$$

22) 경제 성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경우에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가정함.

둘째, 연계함수(누적정규분포함수)를 이용한 한계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한계효과는 위의 조건(평균조건)과 동일한 경우, 주어진 설명변수들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경제위기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값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를 의미한다. 즉, 설명변수 k 에 대하여 평균조건을 고려한 상태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한계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rac{\partial P(y_i = 1)}{\partial \overline{X_{ik}}} = \frac{\partial}{\partial \overline{X_{ik}}} (\Phi(\overline{X_i} \beta)) = \phi(\overline{X_i} \beta) \beta_k$$

나. 프로빗 회귀분석 결과

부패 수준이 평균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경우, 1990~2006년 동안 69개국의 경제 위기 경험확률은 0.724~0.736 정도로 나타났으며, 일인당 소득 수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경우에 이러한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간별로, 1990~1999년 동안 경제위기 경험확률은 0.728~0.773로, 2000~2006년 동안의 확률은 0.719~0.731로 기간별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앞서 살펴본 회귀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부패 수준과 경제위기 간의 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초기 일인당 소득수준을 적절히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최근(2000~2006년)보다는 그 이전 동안(1990~1999년)의 추정결과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난 점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어진 평균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 하에 부패 지수가 한 단위만큼 개선됨에 따라 경제위기 경험확률은 7.7~15.7%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0~1999년 동안의 부패 지수 증가율이 경제위기 경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약한 증거²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동 기간 동안의 부패 지수 증가율이 1%p 증가함에 따라 경제위기 경험확률이 추가적으로 4~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6 참조)²⁵⁾.

23) 1990~2006년 동안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부패지수와 그 증가율만을 고려한 경우(18.6%)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임.

24) 통상적 수준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은 찾기 힘들지만,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25) 본 절에서 쓰인 「부패지수 증가율」 변수는 % 단위가 아닌 소숫점 단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과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예를 들어, 부패지수 증가율이 1%p 증가함은 부패지수 증가율 변수가

결론적으로, 부패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경제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며, 특히 1990년대에는 그 수준이 빠르게 감소하는 경우가 경제위기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패 수준이 경제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5-6〉 부패와 경제위기: 프로빗 회귀분석 결과

변 수	1990~2006							
	(1)		(2)		(3)		(4)	
	Coef. (Std. Err.)	M.E.	Coef. (Std. Err.)	M.E.	Coef. (Std. Err.)	M.E.	Coef. (Std. Err.)	M.E.
상수항	2.0300*** (0.5779)	-	1.5157** (0.7045)	-	1.5436* (0.8096)	-	2.1878** (0.9424)	-
부패	-0.4708*** (0.1456)	-0.1574	-0.2316 (0.2370)	-0.0769	-0.2576 (0.3139)	-0.0861	-0.4448 (0.3482)	-0.1455
부패 증가율	-6.3602 (6.5641)	-2.1259	-6.0528 (6.6866)	-2.0102	-5.5748 (6.7875)	-1.8634	-7.9844 (7.1525)	-2.6120
일인당 소득			-0.3180 (0.2497)	-0.1056			-1.2239 (0.8239)	-0.4004
부패 × 일인당 소득					-0.0499 (0.0591)	-0.0167	0.2195 (0.1912)	0.0718
부패 × GDP 대비 총투자					-0.0022 (0.0221)	-0.0007	0.0038 (0.0229)	0.0012
부패 × GDP 대비 총교역액					0.0212 (1.8028)	0.0071	-0.3788 (1.8163)	-0.1239
Log-Likelihood	-35.66		-34.86		-35.30		-34.18	
LR 통계량 (p 값)	13.48 (0.0012)		15.09 (0.0017)		14.21 (0.0144)		16.45 (0.0115)	
Pseudo R_Square	0.1589		0.1779		0.1675		0.1940	
Prob(y=1)	0.7240		0.7276		0.7240		0.7357	
관측값수	69							

주: 1) ()는 추정계수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 **, *는 각각 추정계수가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Prob(y=1)은 각각의 모형별로 주어진 설명변수(평균)를 이용하여 예측한 확률값을 나타냄.

3) M.E.는 사건확률(Prob(y=1))에 대한 한계효과를 나타냄.

4) LR 통계량은 Log-likelihood에 대한 검정통계량을 나타냄.

5) Pseudo R_Square는 MLE 추정시에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측정

0.01 단위 증가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며, 이는 부패지수 증가율이 1%p 증가함에 따라 경험 확률도 $\frac{4}{100} \sim \frac{10}{100}$ % 감소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함.

〈표 5-6〉 계속

변 수	1990~1999							
	(1)		(2)		(3)		(4)	
	Coef. (Std. Err.)	M.E.	Coef. (Std. Err.)	M.E.	Coef. (Std. Err.)	M.E.	Coef. (Std. Err.)	M.E.
상수항	2.2832*** (0.5573)	-	1.4596** (0.7002)	-	1.4623* (0.8161)	-	2.6645** (1.0549)	-
부패	-0.5163*** (0.1487)	-0.1712	-0.1343 (0.2458)	-0.0433	-0.1723 (0.3153)	-0.0567	-0.4683 (0.3582)	-0.1413
부패 증가율	-4.1148 (3.1712)	-1.3645	-6.7362* (3.5237)	-2.1704	-5.2629 (3.2884)	-1.7311	-9.7882** (4.2249)	-2.9530
일인당 소득			-0.5373* (0.2772)	-0.1731			-2.1509** (0.9847)	-0.6489
부패 × 일인당 소득					-0.0812 (0.0615)	-0.0267	0.3685* (0.2144)	0.1112
부패 × GDP 대비 총투자					-0.0072 (0.0221)	-0.0024	-0.0004 (0.0230)	-0.0001
부패 × GDP 대비 총교역액					0.1913 (1.8364)	0.0629	-0.3366 (1.8727)	-0.1015
Log-Likelihood	-35.28		-33.37		-34.33		-31.75	
LR 통계량 (p 값)	14.25 (0.0008)		18.05 (0.0004)		16.13 (0.0065)		21.29 (0.0016)	
Pseudo R_Square	0.1680		0.2129		0.1902		0.2511	
Prob(y=1)	0.7284		0.7433		0.7328		0.7726	
관측값수	69							

주: 1) ()는 추정계수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 **, *는 각각 추정계수가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Prob(y=1)은 각각의 모형별로 주어진 설명변수(평균)를 이용하여 예측한 확률값을 나타냄.

3) M.E.는 사건확률(Prob(y=1))에 대한 한계효과를 나타냄.

4) LR 통계량은 Log-likelihood에 대한 검정통계량을 나타냄.

5) Pseudo R_Square는 MLE 추정시에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측정

〈표 5-6〉 계속

변 수	2000 ~ 2006							
	(1)		(2)		(3)		(4)	
	Coef. (Std. Err.)	M.E.	Coef. (Std. Err.)	M.E.	Coef. (Std. Err.)	M.E.	Coef. (Std. Err.)	M.E.
상수항	2.2146*** (0.5844)	-	1.7496*** (0.6738)	-	1.6622** (0.7860)	-	2.2969** (0.9244)	-
부패	-0.4864*** (0.1480)	-0.1640	-0.2241 (0.2361)	-0.0748	-0.2136 (0.3189)	-0.0718	-0.3429 (0.3366)	-0.1133
부패 증가율	-0.2929 (2.8704)	-0.0987	1.6731 (3.2945)	0.5582	1.1648 (3.2654)	0.3917	2.5303 (3.5552)	0.8358
일인당 소득			-0.3876 (0.2752)	-0.1293			-1.1808 (0.8297)	-0.3900
부패 × 일인당 소득					-0.0647 (0.0633)	-0.0218	0.1806 (0.1831)	0.0597
부패 × GDP 대비 총투자					-0.0065 (0.0228)	-0.0022	-0.0041 (0.0236)	-0.0014
부패 × GDP 대비 총교역액					0.0305 (1.8207)	0.0103	-0.3294 (1.8405)	-0.1088
Log-Likelihood	-36.12		-35.13		-35.57		-34.54	
LR 통계량 (p 값)	12.56 (0.0019)		14.54 (0.0023)		13.67 (0.0179)		15.72 (0.0153)	
Pseudo R_Square	0.1482		0.1715		0.1611		0.1854	
Prob(y=1)	0.7191		0.7250		0.7206		0.7305	
관측갯수	69							

주: 1) ()는 추정계수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 **, *는 각각 추정계수가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Prob(y=1)은 각각의 모형별로 주어진 설명변수(평균)를 이용하여 예측한 확률값을 나타냄.

3) M.E.는 사건확률(Prob(y=1))에 대한 한계효과를 나타냄.

4) LR 통계량은 Log-likelihood에 대한 검정통계량을 나타냄.

5) Pseudo R_Square는 MLE 추정시에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측정

제3절 청렴과 각종 사회·제도적 변수의 관계

부패와 더불어 이와 관련이 깊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 개의 제도적 변수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제도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 현실적으로 이 변수들이 상호 영향력을 갖고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임을 시사한다(표 5-7 참조). 기존의 성장모형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된 사례가 많지 않지만, 부패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제도적 변수들이 경제성장 및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표 5-7〉 제도적 변수 간의 상관관계 (1990~2006)

	부 패	법·질서 준수	민주주의	관료제의 질
부 패	1			
법·질서 준수	0.7500	1		
민주주의	0.7009	0.5277	1	
관료제의 질	0.7720	0.7399	0.6975	1

1991~2000년 동안 세계 66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표 5-8>에서 예시된 제도적 변수들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 제도적 변수들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형태는 각기 다르나 경제성장에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차문중[2005]). 관료체제의 질의 경우, 평균적으로 양질의 관료체제를 갖춘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부패와 민주화수준의 경우에는 선형의 형태로는 경제성장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Barro(1996), Rodrick(2000) 등의 선행 연구와 부합된다.

〈표 5-8〉 제도적 변수와 경제성장 - 정량적 분석결과

변 수	부 패			민주주의			관료제의 질		
	(1)	(2)	(3)	(4)	(5)	(6)	(7)	(8)	(9)
상수항	-2.34 (1.89)	-1.44 (2.22)	9.37 (6.01)	0.21 (2.10)	3.97 (2.45)	3.89 (2.51)	1.94 (1.67)	1.45 (1.71)	1.97 (1.44)
제도적 변수	0.69* (0.35)	0.06 (1.20)	-10.3* (5.5)	-0.10 (-0.32)	3.82*** (1.33)	3.31 (2.88)	1.13** (0.43)	0.40 (1.38)	1.42 (2.29)
제도적 변수 제곱		0.09 (0.16)	3.13** (1.51)		0.53*** (0.19)	0.39 (1.00)		0.17 (0.32)	0.40 (1.38)
제도적 변수 제곱제곱			-0.27** (0.13)			0.01 (0.07)			0.09 (0.24)
F 통계량	17.2	14.9	14.2	15.8	16.2	14.1	18.6	16.1	14.1
Adj. R_Square	0.67	0.68	0.70	0.66	0.69	0.69	0.69	0.69	0.69
관측값수	66								

주: 1) ()는 추정계수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 **, *는 각각 추정계수가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2) F 통계량은 모든 회귀변수에 대한 결함이 유의한지에 대한 검정통계량을 나타냄.
 3) 오차항의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White(1980)을 이용하여 Standard Error 추정
 4) 제도적 변수를 제외하고, 추정에 포함된 통제변수들의 계수는 편의상 생략
 자료: 차문중, 2005(부표 12-2 등을 재가공).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부패와 다른 제도적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편이며, 정량적 분석 결과가 사실상 다른 제도적 변수들 또는 포괄적 의미의 제도적 여건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도적 경쟁력이 부패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낮으며, 동시에 세계 각국의 제도적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0~40위권에 머물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로 제도를 들 수 있다(표 5-9 참조). 따라서 부패를 격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변수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사회 제도 전체적인 틀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표 5-9〉 한국의 경쟁력 항목별 순위

IMD		WEF	
항목	순위('06→'07→'08)	항목	순위('06→'07→'08)
법 규제 프레임워크	35 → 43 → 53	기본요인	22 → 14 → 16
사회정의의 구현	36 → 29 → 31	효율성 증진	25 → 12 → 15
투명성	34 → 33 → 36	기업혁신 및 성숙도	20 → 7 → 10
뇌물수수 및 부패	29 → 28 → 30	노동시장 효율성	47 → 24 → 41
노사관계 생산성	61 → 55 → 55		

자료: WEF(2008), IMD(2008).

제 6 장

청렴이 경쟁력 및 국가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 1 절 청렴과 경쟁력, 국가브랜드

1. 개 요

한 국가의 청렴 수준은 그 국가의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대외적 이미지, 경쟁력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중에서 청렴 혹은 그 역인 부패 수준과 경제성장에 관해서는 많은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청렴과 경제성장에 관한 기존의 문헌들의 발견, 즉 청렴수준의 제고는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경험적 발견들을 보다 엄격한 실증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함과 동시에 청렴수준과 성장의 통로들을 보다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청렴과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경향이 있었던 청렴과 국가경쟁력, 그리고 청렴과 국가브랜드와의 관계에 대해 이 연구는 청렴이 다양한 형태로 국가의 주요 지표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경쟁력 및 국가 브랜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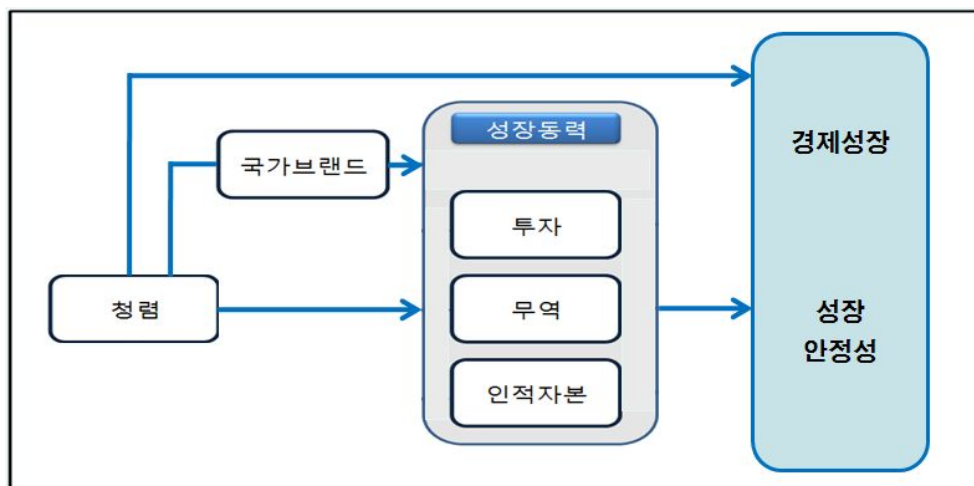
청렴 수준은 경제성장과 국가브랜드, 그리고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그 영향의 방식은 직접적, 간접적 효과를 포괄한다. 즉 청렴수준은 이 세 변수들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으며 또 다른 결정 요인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특히 경제성장의 문헌에 따르면 투자, 인적 자본, 무역 등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결정요인인데 청렴은 이 각각의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제도가 경제성장의 근본적 결정요인, 즉 제도의 질은 투자, 인적 자본 등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결정짓는 가장 최초의 변수라는 제도주의

자들의 연구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더욱이 청렴과 경제성장에 관한 최근의 문헌들은 청렴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Pak(2001)은 부패와 인적자본, 투자,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Pellegrini and Gerlagh(2004)는 Pak의 경로에 무역정책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청렴 혹은 그 역인 부패와 경제성장의 주요한 통로로서 투자, 인적자본, 무역, 정치적 불안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정치적 불안정과 부패의 관계는 주로 후진국에서 발견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국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려는 이 연구의 목적상 이 연구의 범위에서 배제하기로 한다.

한편 국가브랜드는 경제성장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브랜드가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나 국내 관광 수입 등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중 투자는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브랜드는 청렴에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인 동시에 투자에 영향을 주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독립변수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그림 6-1]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청렴과 성장동력 및 국가브랜드,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장에서의 계량 분석도 이러한 틀을 기초로 하여 진행될 것이다.

[그림 6-1] 청렴과 성장동력 및 국가브랜드, 경제성장간의 관계



이상의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먼저 청렴은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의 부패지수를 사용하기로 한다. ICRG 부패지수는 특정 국가의 부패정도를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 평가하며, 가장 부패한 수준을 의미하는 0부터 가장 청렴한 수준을 나타내는 6까지 지수화 되어있다. 따라서 부패지수가 높다는 것은 곧 청렴도가 높다는 것과 동일하다. 한편, 국가브랜드는 Anholt가 개발한 국가브랜드 지수(Nation Brands Index)를 사용하기로 한다. Anholt의 국가브랜드 지수는 수출·국민·정부·관광·이민과 투자·문화와 유산 등 총 6개 항목으로 평가되며, 전체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브랜드, 곧 국가 이미지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경쟁력은 WEF(World Economic Forum)에서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를 사용하기로 한다. WEF는 매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를 통해 국가경쟁력 지수를 발표한다. 이 지수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요인을 경제 동력 요인, 경제 효율성 요인, 경제 혁신 요인 등 크게 세 범주로 구분하고 각 범주에서 세부 항목을 분류하여 총 12개 부문에서 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한다. 그리고 12개 부문에 대한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국가경쟁력 지수가 되는데 이 지수가 높을수록 국가경쟁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론은 패널데이터의 이용이 가능한 연구에서는 패널추정법을 활용하여 추정한다. 그러나 장기 패널데이터의 구축이 어려운 연구에서는 횡단면 추정을 시도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브랜드와 국가경쟁력에 관해서는 장기 자료의 축적이 어려우므로 기본적으로 국가간 횡단면 분석을 시도한다. 만약 국가의 횡단면 자료가 장기의 균제상태를 반영한다면 추정 결과의 신뢰성은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자료가 단기 변인과 경기변동 요인들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 추정결과에 일정한 편의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능한 이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도별 국가브랜드와 경쟁력 자료의 기간 평균을 구해 이들과 이들의 결정 요인들의 관계를 분석한다.

2. 청렴과 경쟁력, 국가브랜드 간의 상관관계

먼저 청렴과 국가경쟁력과 국가브랜드와의 관계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표 6-1>은 2005-2007년도 자료를 이용, 국가별 청렴지수와 국가브랜드, 그

리고 국가경쟁력 지수의 상·하위 10%에 해당되는 국가를 열거하고 있다. 청렴도 지수와 국가경쟁력 순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들 지수에서 모두 상위 10%에 해당되는 국가는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6개 국가이며, 하위 10%에 해당되는 국가는 파라과이, 짐바브웨 등 2개 국가이다. 그리고 영국, 독일, 스위스 등 4개 국가는 국가브랜드 순위와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모두 상위 10%에 해당되는 국가군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청렴도와 국가브랜드 및 국가경쟁력 지수가 높은 국가들에서 서유럽 및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반면 이들 지수가 낮은 국가의 대부분은 아프리카 지역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표 6-1〉 청렴, 국가브랜드, 국가경쟁력의 상·하위 10% 국가

	상위 10%	하위 10%
청렴도	핀란드(6), 덴마크(5.5), 아이슬란드(5.5), 뉴질랜드(5.5), 캐나다(5.02), 오스트리아(5), 네덜란드(5), 노르웨이(5), 스웨덴(5)	가봉(1), 이라크(1), 레바논(1), 미얀마(1), 파푸아뉴기니(1), 파라과이(1), 수단(1), 케냐(0.73), 짐바브웨(0)
국가브랜드	영국(1), 캐나다(3), 독일(3.3), 스위스(4)	인도네시아(36.3), 라트비아(37), 이스라엘(37.5), 이란(39)
국가경쟁력	핀란드(3), 미국(3), 스웨덴(3.3), 덴마크(3.67), 스위스(3.67), 싱가포르(6), 일본(9), 독일(9.3), 네덜란드(10), 타이완(10.67), 영국(10.67), 노르웨이(12.3), 캐나다(14.3)	모잠비크(113.3), 파라과이(113.3), 부르키나파소(114), 키르기스스탄(114), 에디오피아(116.3), 가이아나(117.3), 레소토(118), 잠비아(118.5), 동티모르(119), 짐바브웨(119), 모리타니(119.5), 차드(123.67), 앙골라(125), 부룬디(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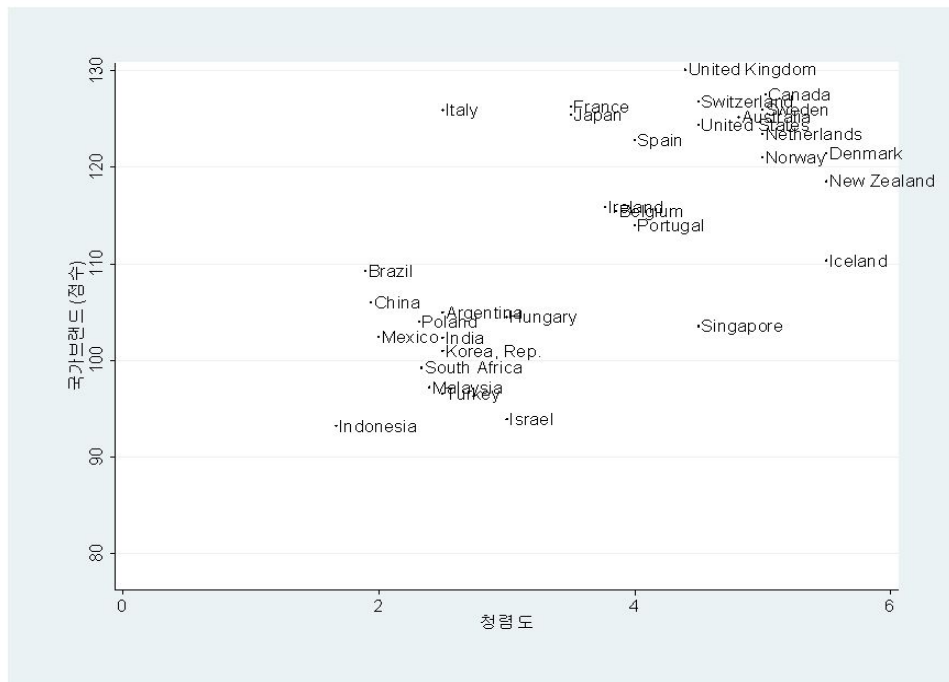
- 주 : 1) 청렴도는 0부터 6까지 6점 척도의 지수이며, 국가브랜드 및 국가경쟁력은 순위자료를 사용
 2) ()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각 지표의 평균값을 나타냄.
 3) 전체 관측치 수는 청렴도와 국가브랜드, 국가경쟁력이 각각 88개, 39개, 134개임.
 4) 청렴도는 높을수록, 국가브랜드와 국가경쟁력 순위는 낮을수록 경쟁력과 브랜드가 높은 것이므로 이 순서에 따라 국가들을 나열

[그림 6-2]와 [그림 6-3]은 각각 32개국과 77개국의 국가별 청렴지수와 국가브랜드, 그리고 국가별 청렴지수와 국가경쟁력과의 산포도를 보여주고 있다.²⁶⁾ 이를

26) 청렴지수와 국가브랜드 지수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는 32개국이며, 청렴지수와 국가경쟁력 지수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는 77개국이다.

통해 청렴지수와 국가브랜드, 그리고 청렴지수와 국가경쟁력사이에는 상당히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청렴지수와 국가브랜드의 상관계수는 0.43으로 높은 편이며 청렴지수와 국가경쟁력의 상관계수는 0.80에 달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캐나다의 경우 국가브랜드는 127.56점으로 두 번째로 가장 높았으며, 이와 동시에 청렴지수도 5.02점으로 두 번째로 가장 높았다.²⁷⁾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가브랜드는 93.2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와 동시에 청렴지수 또한 1.67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국가경쟁력에 관해서는 핀란드의 경우 국가경쟁력은 5.7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와 동시에 청렴지수 또한 6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짐바브웨의 경우 국가경쟁력은 2.93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청렴지수 또한 0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국의 경우는 국가브랜드와 청렴지수 양자는 32개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나 국가경쟁력은 청렴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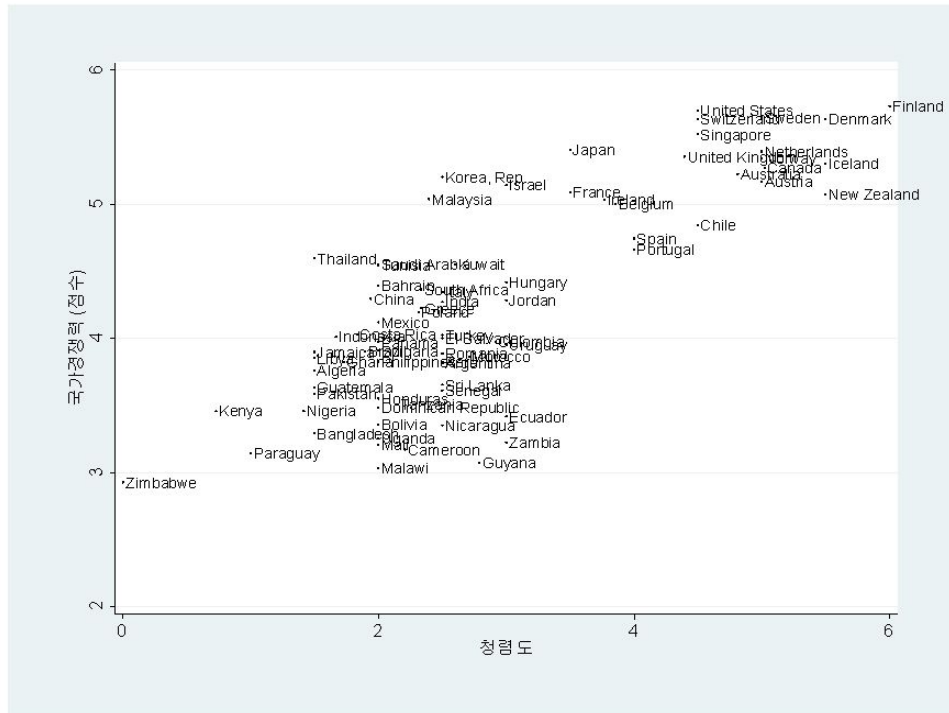
[그림 6-2] 청렴과 국가브랜드 산포도



주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2개 국가의 평균 자료를 사용

27) 청렴지수는 핀란드가 6점으로 가장 높으나 핀란드는 국가브랜드 분석 대상 국가가 아니므로 분포도에서 제외되었다.

[그림 6-3] 청렴과 국가경쟁력 산포도



주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7개 국가의 평균 자료를 사용

제2절 청렴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청렴 혹은 부패가 국가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한 추정 모형은 다음과 같다.

$$NCompetitiveness = \beta_0 + \beta_1 Corruption + X'A' + e$$

여기서 NCompetitiveness는 국가경쟁력 지수이며, Corruption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ICRG의 부패지수이다. 통제변수 X는 인적자본, 투자변화율, 무역인데, 이는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형'에 근거하여 국내 산업의 생산성 증진, 곧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요인이다. 인적자본과 투자변화율은 앞에서의 정의와 동일하며 무역은 GDP 대비 무역액, 즉 수출과 수입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또

한 분석결과의 견고함(robustness)을 검증하기 위해 제도와 1인당 GDP 수준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제도는 관료들의 권력 분배를 위한 제도화된 제약으로 앞서와 동일한 지표를 사용한다.

본 모형의 종속변수인 국가경쟁력 변수는 WEF(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년 발간하는 '세계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s)'에 소개되는 경쟁력 지수이다. WEF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미시적·거시적 기반을 반영하여 총 12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평가함으로써 종합적인 평가지표의 형태를 갖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 사회기반시설, 경제안정, 건강 및 초등교육 등 4개 항목은 기본적인 경제 동력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과 직업훈련, 재화 시장의 효율성, 노동시장의 효율성, 금융시장의 정교함, 기술진보, 시장 규모 등 6개 항목은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서 제시되고 있으며 경영의 정교함, 혁신 등 2개 항목은 경제의 혁신을 이끄는 요인으로서 지수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국가경쟁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가경쟁력 지수의 순위 및 점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평균자료를 사용하여 부패와 국가경쟁력간의 관계를 OLS 추정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2>과 같다. 모형 (4)는 Porter의 '다이아몬드 모형'에 근거하여 인적자본과 투자변화율, 무역을 기본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모형이다. 모형 (5)와 모형 (6)은 제도와 GDP 수준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추정결과의 견고함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7)에서는 모형(4) - 모형(6)의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각 모형의 종속변수인 국가경쟁력 지수는 순위 및 점수 자료를 모두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부패지수는 모든 추정식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패와 국가경쟁력간의 음의 상관관계, 즉 부패가 심할수록 국가경쟁력 순위는 낮아지고, 국가경쟁력의 점수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모형 (5)와 (6)에서와 같이 제도와 1인당 GDP 수준을 각각 통제한 추정에서나 모형 (7)에서처럼 국가경쟁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는 1인당 GDP 수준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모형에서도 부패와 국가경쟁력 사이의 음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일인당 GDP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 즉 모형(4)와 모형(5)를 추정한 결과 유의수준 1%에서 인적자본과 국가경쟁력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검증되었다. 그리

고 동일한 추정식에서 GDP 대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국가경쟁력은 향상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 결과는 국내 산업의 생산성 증진 즉,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인적자본 및 무역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6-2〉 부패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4)		(5)		(6)		(7)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부패	-12.156 (5.39)***	0.351 (7.42)***	-13.122 (5.47)***	0.369 (7.29)***	-6.754 (3.13)***	0.238 (5.35)***	-7.582 (3.33)***	0.252 (5.33)***
인적 자본	-54.887 (4.72)***	0.907 (3.72)***	-58.753 (4.84)***	0.976 (3.81)***	2.355 (0.16)	-0.350 (0.94)	-2.246 (0.15)	-0.278 (0.89)
투자 변화율	9.022 (0.19)	-0.273 (0.27)	22.351 (0.45)	-0.493 (0.47)	-8.139 (0.19)	-0.391 (0.16)	17.677 (0.41)	-0.524 (0.58)
무역	-10.114 (2.55)**	0.218 (2.62)**	-8.169 (1.94)*	0.184 (2.07)**	-3.516 (0.97)	0.067 (1.04)	-2.058 (0.55)	0.044 (0.56)
제도			2.488 (1.41)	-0.043 (1.17)			2.182 (1.47)	-0.043 (1.11)
GDP 수준					-20.734 (5.30)***	0.455 (5.25)***	-20.357 (5.16)***	0.449 (5.49)***
관측 치수	68	68	66	66	67	67	65	65
R ²	0.6870	0.7330	0.6865	0.7280	0.7698	0.8115	0.7698	0.8076
F-test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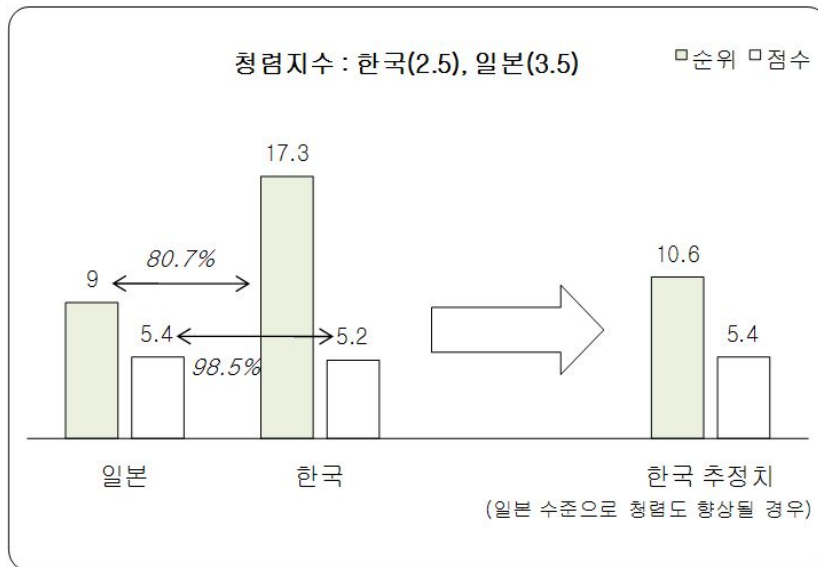
주 : 1) 종속변수는 국가경쟁력 지수의 순위 또는 점수임.

2) ()의 숫자는 t값이고 []의 숫자는 P값이다.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국가경쟁력 순위는 낮을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

이상의 추정결과를 통해 부패가 감소할수록 즉, 국가의 청렴도가 높아질수록 국가경쟁력은 강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렴지수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양적인 효과는 다음의 [그림 6-4]이 제시하는 예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청렴지수의 표준편차인 1.2 만큼 청렴지수가 개선되면 국가경쟁력 순위는 적어도 8단계, 국가경쟁력 점수는 0.29점 가량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의 예를 들어 보면 2005년-2007년의 평균 청렴지수가 2.5인 한국이 일본의 수준으로 청렴지수를 개선시킨다면, 즉 2.5가 3.5가 된다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점수는 0.2점, 국가경쟁력 순위는 6.7단계 가량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2005-2007년의 한국과 일본의 연평균 국가경쟁력 점수의 차이(0.203점)의 98.5%, 연평균 국가경쟁력 순위의 차이 (8.3단계)의 80.7%가 양 국가의 청렴 수준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을 시사한다.²⁸⁾

[그림 6-4] 청렴지수와 국가경쟁력의 양적 관계 : 한국, 일본



28) 한국과 일본의 경제수준이 3배가량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양 국가의 청렴 수준의 차이가 국가경쟁력 점수 및 순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이는 국가브랜드 지수와 달리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경쟁력 점수 및 순위의 표준편차는 각각 0.8, 35.8인데 반해, 한국과 일본의 국가경쟁력 점수 및 순위의 차이는 각각 0.2, 8.3 정도로 그 편차가 매우 작다. 그 이유 때문에 비록 경제수준이 비슷한 국가간의 비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개선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매우 크게 추정되었다.

제3절 청렴이 국가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청렴 또는 부패가 국가브랜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추정식을 사용한다.

$$NBrand = \beta_0 + \beta_1 Corruption + X'A' + e$$

NBrand는 국가브랜드 지수이며, Corruption은 ICRG의 부패지수이다. '국가브랜드의 결정요인에 관한 앞 절의 논의에 근거하여 통제변수 벡터 X에는 인적자본, 투자변화율, 제도가 포함된다. 인적자본은 전체 인구 중에서 중등교육을 수료한 자의 비율이며, 투자변화율은 GDP 대비 총고정자본 비중의 변화율이다. 그리고 제도는 관료들의 권력 분배를 위한 제도화된 제약(constraints on executives), 즉 제도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여기서 제도는 1(법적 의회의 부재)부터 7(다수 정당의 민주주의)까지 지수화 되어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견제와 균형이 높은 제도, 즉 제도의 질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또한 분석결과의 견고함(robustness)을 제시하기 위해 수출, 수입과 1인당 GDP 수준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수출은 GDP 대비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며, 수입은 GDP 대비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본 모형에서 사용한 국가브랜드 변수는 Anholt가 개발한 지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브랜드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nholt의 국가브랜드 지수는 2005년부터 GfK Roper 연구소와 함께 객관적 평가제를 도입하여 산출된 지표로서 수출, 국민, 정부, 관광, 이민과 투자, 문화와 유산이라는 6개 항목으로 평가된다.²⁹⁾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가브랜드 변수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가브랜드 지수의 순위 및 점수이다.

29) '수출품의 품질'은 그 나라의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바로 투영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이미지와 수출품의 품질에 따라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달라진다. '정부'는 세계 각국의 호감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국가이미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비민주주의 국가는 정부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갖는다. '문화와 유산'은 보다 직접적인 교류를 반영한다. '국민'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에 의해 국가 미지 및 국가 브랜드 지수가 변동될 수 있다. '관광'은 세계인들이 각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써 그 나라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호감도를 높여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민과 투자'는 세계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을 반영한다. 이는 각 나라의 사회·경제적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평균자료를 사용하여 부패와 국가브랜드간의 관계를 OLS 추정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3>와 같다. 모형(1)은 '국가브랜드 체계모형'에 근거하여 인적자본과 제도, 투자를 기본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모형이다. 모형(2)와 모형(3)은 수출·수입과 GDP 수준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추정결과의 견고함을 제시하였다. 각 모형의 종속변수인 국가브랜드 지수는 순위 및 점수 자료를 모두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표 6-3> 청렴이 국가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1)		(2)		(3)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청렴	-4.069 (2.74)**	4.837 (3.26)***	-5.492 (2.99)***	6.410 (3.55)***	-3.545 (1.81)*	4.337 (2.29)**
인적자본	-20.112 (2.07)**	21.215 (2.18)**	-16.793 (1.60)	17.554 (1.70)	1.369 (0.11)	1.136 (0.10)
제도	0.294 (0.20)	0.455 (0.31)	1.597 (0.81)	-0.963 (0.49)	2.564 (1.34)	-1.993 (1.08)
투자 변화율	-30.030 (0.66)	21.306 (0.47)	3.543 (0.07)	-15.573 (0.32)	-41.139 (0.82)	31.986 (0.66)
수출			-7.363 (0.30)	9.226 (0.38)	5.683 (0.24)	4.661 (0.20)
수입			19.203 (0.70)	-22.150 (0.82)	7.025 (0.27)	-9.187 (0.36)
GDP 수준					-7.528 (2.07)**	8.013 (2.28)**
관측치수	31	31	30	30	30	30
R ²	0.4923	0.5776	0.5169	0.6086	0.5773	0.6688
F-test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주 : 1) 종속변수는 국가브랜드 지수의 순위 또는 점수임.

2) ()의 숫자는 t값이고 []의 숫자는 P값이다.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국가브랜드 순위는 낮을수록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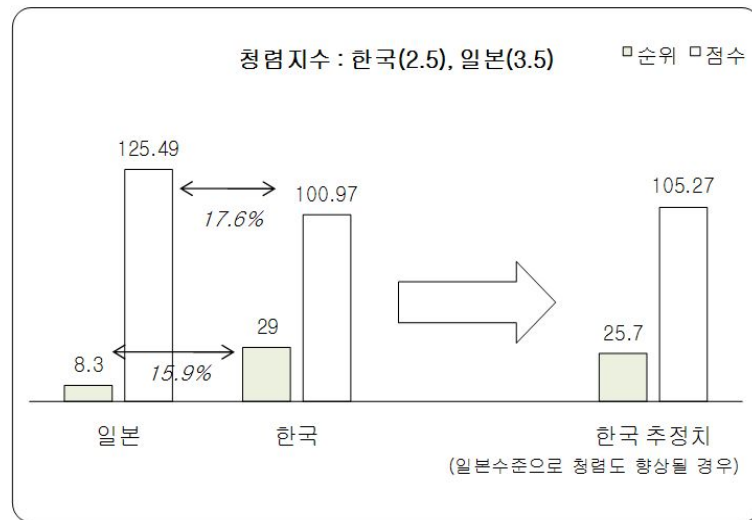
추정결과, 모든 추정식에서 부패와 국가브랜드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즉 부패지수가 높을수록 국가브랜드 순위는 낮아지고, 국가브랜드 점수는 높아진다는 것을 각 모형을 통해 알 수 있다. 모형 (1)은 기본추정(baseline estimation)으로서 청렴은 국가브랜드 점수와 순위에 예상한 바와 같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수출과 수입을 추가적 통제변수로 사용한 모형 (2), 그리고 국가브랜드 향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1인당 GDP 수준을 더 추가하여 통제된 모형 (3)에서도 유의성과 효과의 방향 면에서 차이가 없이 나타났다. 즉 부패지수가 낮을수록 국가브랜드지수는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추정결과를 통해 부패가 감소할수록 즉, 국가의 청렴도가 높아질수록 국가브랜드, 곧 국가이미지는 제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모형(1)과 모형(2)를 추정한 결과 인적자본과 국가브랜드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검증되었다.

청렴지수와 국가브랜드와의 양적인 관계는 다음의 [그림 6-5]과 [그림 6-6]가 제시하는 예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청렴지수의 표준편차인 1.2만큼 청렴지수가 개선되면 국가브랜드 순위는 적어도 4단계 가량 상승할 수 있으며 국가브랜드 점수는 5.2점 가량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2005년-2007년의 평균 청렴지수가 2.5인 한국이 일본의 수준으로 청렴지수를 개선시킨다면, 즉 2.5가 3.5가 된다면 한국의 국가브랜드 순위는 3.3단계, 국가브랜드 점수는 4.3점 가량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브랜드 순위의 차이(20.7단계)의 15.9%, 국가브랜드 점수의 차이(24.5점)의 17.6%가 바로 양 국가의 청렴 수준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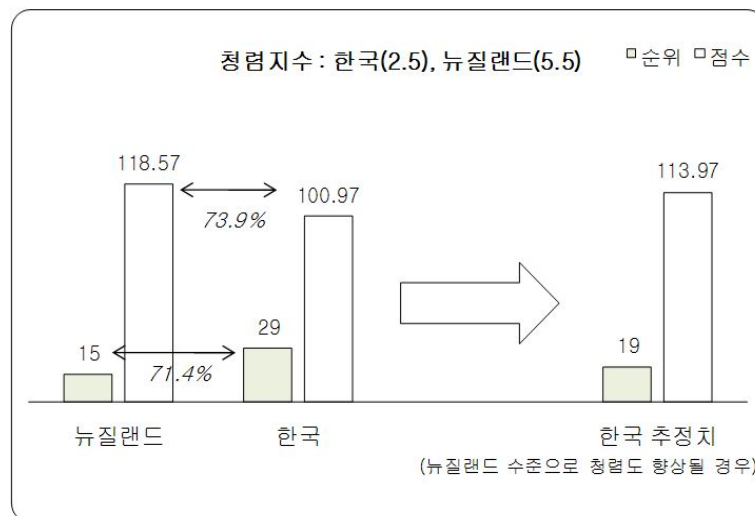
그런데 만약 양 국가의 경제수준의 차이가 크다면 경제수준의 차이가 국가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청렴수준의 차이가 국가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은 과소 추정될 수 있다. 즉,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과 일본의 1인당 평균 GDP 수준이 각각 US \$13,552, US \$39,392로 약 3배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경제수준의 차이가 국가브랜드 개선에 기여하는 청렴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수준이 비슷한 국가를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6-6]는 청렴지수와 국가브랜드의 양적관계를 1인당 GDP 수준이 비슷한 한국과 뉴질랜드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과 뉴질랜드의 1인당 평균 GDP 수준은 각각 US \$13,552, US \$15,148이다. 만약 한국이 뉴질랜드 수준으로 청렴지수를 개선시킨다면, 즉 2.5가 5.5가 된다면 한국의 국가브랜드 순위는 10단계, 국가브랜드 점수는 13점 가량 상승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뉴질랜드의 국

가브랜드 순위의 차이(14단계)의 71.4%, 국가브랜드 점수의 차이(17.6점)의 73.9%가 양 국가의 청렴 수준의 차이로부터 기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수준이 국가브랜드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비슷한 경제수준을 갖는 국가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양 국가의 국가브랜드 점수 및 순위 차이의 약 70%는 청렴도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그림 6-5] 청렴지수와 국가브랜드의 양적 관계 : 한국과 일본



[그림 6-6] 청렴지수와 국가브랜드의 양적 관계 : 한국과 뉴질랜드



제4절 청렴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패 및 성장동력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와 부패와 성장동력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모두 추정하였다. 지금까지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크기를 다음의 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frac{d\text{경제성장}}{d\text{부패}} = \frac{\partial\text{경제성장}}{\partial\text{부패}} + \left(\frac{\partial\text{경제성장}}{\partial\text{성장동력}} \times \frac{\partial\text{성장동력}}{\partial\text{부패}} \right)$$

예를 들어 부패 감소가 투자 증가의 경로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모형(14)와 모형(18)의 추정결과를 사용한다. 모형(18)에서 부패지수가 1만큼 감소할 때, 투자변화율은 0.025만큼 증가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또한 부패의 제곱항은 투자변화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부패수준과 부패수준의 제곱을 모두 고려하여 부패가 투자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할 수 있다. 이를 모형(14)에서 추정된 투자변화율의 계수값(0.156), 즉 투자변화율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와 곱함으로써 부패가 투자변화율의 경로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한편 모형(14)에서 부패지수가 1만큼 감소할 때, 경제성장률은 0.007만큼 증가하며, 부패의 제곱항이 1만큼 감소할 때, 경제성장률은 0.001만큼 감소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부패수준과 부패수준의 제곱을 모두 고려하여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부패가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효과, 즉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부패와 성장동력, 그리고 경제성장간의 보다 종합적인 관계는 각 성장동력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다. 즉 투자, 무역, 인적자본을 모두 포함하여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에서 개별 성장동력이 미치는 간접효과의 상대적인 비중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모형(17)은 성장동력, 즉 투자, 무역, 인적자본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민주적 책임성을 고려함으로써 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

였다. 따라서 이 모형을 이용한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부패와 경제성장간의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를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6-4>과 같다.³⁰⁾ 앞에서 상술한 것처럼 부패지수 자체와 그 제곱항을 고려하여 부패가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0.41%로 추정된다. 그리고 간접효과 중에서 먼저 부패가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패 지수가 1만큼 감소할 때 이는 투자변화율을 증가시켜 약 0.56% 포인트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부패지수의 개선은 GDP 대비 무역의 비중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데, 그 효과는 약 0.05%이다. 마지막으로 부패지수가 1만큼 개선될 때, 인적자본의 수준이 향상되어 경제성장은 약 0.21% 포인트 상승할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 간접효과의 합은 0.64%로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더한 총 효과는 1.05%로 추정되었다. 이는 부패지수 1단위의 감소는 경제성장율을 약 1.05% 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총 효과 중 직간접 효과의 기여도를 보면 전체 중 39%는 부패가 직접적으로 성장에 영향을 주는 효과이다. 그리고 나머지 61%는 부패가 성장동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효과이다. 다시 말해서 부패지수의 1단위 감소는 투자변화율을 증가시키고 무역을 증진시키며 인적자본의 수준을 향상시켜 경제수준을 약 0.64% 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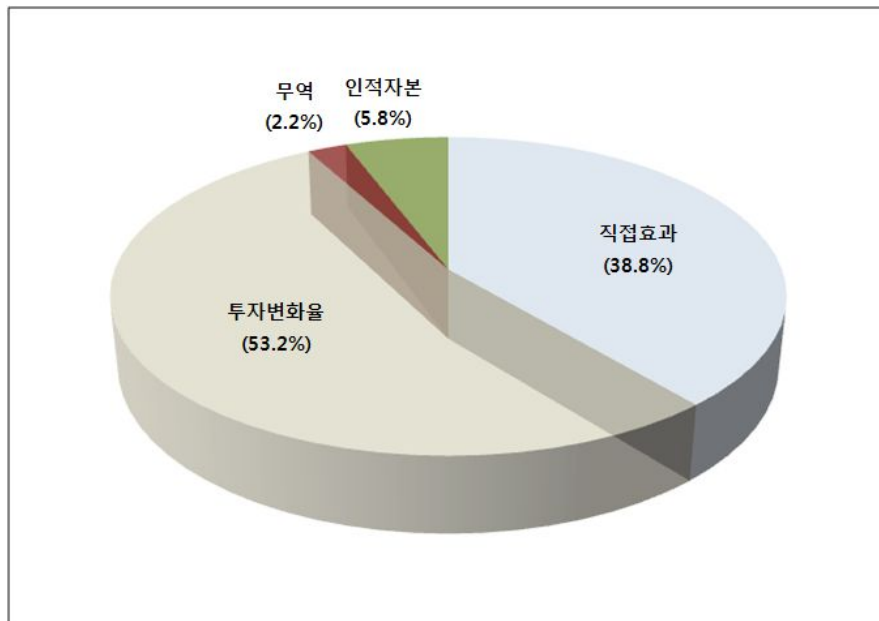
부패가 성장동력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상대적인 비중은 [그림 6-7]이 다시 보여주고 있다. 부패지수의 개선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전체 효과 중에서 투자변화율 증가를 통한 간접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3.2%이다. 또한 GDP 대비 무역액 비중의 증가를 통해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전체 효과에서 약 2.2%를 차지한다. 그리고 인적자본의 수준 향상을 통해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전체 효과에서 약 5.8%를 차지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 국가의 부패지수의 개선, 즉 청렴도 향상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주요한 통로로써 투자변화율과 무역, 인적자본의 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투자가 미치는 간접효과의 비중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무역 또는 인적자본에 비해 부패가 투자에 미치는 악영향이 보다 직접적이고 주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30) 비록 모형(17)의 추정결과 인적자본과 무역변수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이들 변수의 부호는 양으로서 예상과 동일하였다. 또한 OLS 추정방법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즉 모형(12)의 추정결과를 통해 인적자본과 무역변수의 계수값이 각각 유의수준 5%, 유의수준 10%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4〉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투자변화율	무역	인적자본	
실제 크기	0.41%	0.56%	0.02%	0.06%	1.05%
상대적 비중	38.8%	53.2%	2.2%	5.8%	100%

[그림 6-7]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상대적 비중



한 국가의 청렴도 개선이 국가브랜드, 곧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런데 국가브랜드, 즉 국가의 이미지 제고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청렴이 투자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부패와 성장 사이의 전체 효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앞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청렴과 투자의 또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국가브랜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브랜드가 제고되면 외국인 투자를 포함한 투자가 증가할 뿐 아니라 외국에서의 본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알

고 있는 국내투자자들도 투자를 증대시킬 유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평균값으로 구성된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브랜드가 투자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국가브랜드의 순위가 낮을수록, 즉 국가브랜드 지수가 개선될수록 투자변화율이 상승한다는 것이 유의수준 5%에서 검증되었다. 또한 GDP 수준과 투자변화율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검증되었다.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투자는 활성화되므로 경제수준과 투자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투자수준이 아닌 투자변화율을 고려하였으므로 경제수준과 투자변화율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검증되었다. 그밖에 인적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투자변화율이 증가한다는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³¹⁾

$$\begin{aligned} \text{투자변화율} = & -0.002\text{국가브랜드} - 0.021\text{GDP수준} + 1.662\text{인적자본} \\ & (2.54)** \quad (2.38)** \quad (1.72)* \\ & -0.009\text{민주적 책임성} + 0.015\text{제도} \\ & (0.95) \quad (1.47) \end{aligned}$$

$$R^2 = 0.0216, \quad \text{no. of obs.} = 31.$$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렴도 개선이 국가브랜드지수를 향상시키고 그 결과 투자변화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또한 투자변화율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전체적인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즉, 부패지수가 1단위 상승할 때, 국가브랜드 곧 국가 이미지는 제고되며, 이는 투자변화율을 상승시켜 경제성장을 약 0.30% 포인트 상승시킨다. 이는 투자가 연평균성장율에 미치는 간접효과, 0.56% 포인트 중 53.6%가 국가브랜드 개선효과에 기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³²⁾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와 부패지수의 개선을 통해 상승한 국가브랜드지수가 투자 상승을 통해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종합적인 관계를 요약

31) 국가브랜드 지수의 점수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추정결과를 얻었다. 즉, 국가브랜드 지수의 점수가 높을수록 투자변화율이 상승한다는 것이 유의수준 5%에서 검증되었다.

32) 더욱 엄격한 검증을 위해서는 국가브랜드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하면 다음과 같다. 한 국가의 청렴도의 1단위 개선은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을 약 0.41% 포인트 상승시키며, 성장동력을 촉진하여 간접적으로 약 0.64% 포인트 경제를 성장시킨다. 각 성장동력의 간접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패지수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에서 투자변화율 상승이 미치는 영향은 약 0.56%이고 무역 증진이 미치는 영향은 약 0.02%, 인적자본 수준의 향상이 미치는 영향은 약 0.06%로 설명된다. 한편, 청렴도 개선은 국가브랜드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이는 투자 증진과 연결되어 약 0.30% 포인트 경제를 성장시킨다.

제 7 장

청렴과 국가적 품격 및 성장여건

제1 절 국가적 품격 제고를 위한 청렴의 활용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과제 중에서 부패척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발전의 사활이 걸린 절박한 문제이다. 부패척결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면, 국제무역질서에서 퇴출당하고 경제성장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최근 UN, WTO,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부패국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반부패라운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에서도 부패척결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또한, 부패척결은 선진국 도약의 필수조건으로 자리잡았다. 글로벌 경제 확산에 따른 부패문제의 국제화로 부패척결은 국가경쟁력 향상 및 경제 선진화의 선결 조건화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인다. 또한, 부패감소는 사회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실증분석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국가 이미지 제고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 하에서, 『반부패를 선도하는 청렴한 나라』라는 국가이미지를 관리하고 해외에 알리려는 움직임은 국가이미지를 하나의 상품처럼 포지셔닝하고 브랜드화하여 선진 경제로의 도약을 달성하는데 일종의 후광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크다. 즉, 청렴도 제고를 통해 높아진 국가이미지의 후광효과를 통해 직접적으로 상품판매,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 등의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한 상징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곧 『청렴한 나라』라는 국가이미지의 브랜드화(이철한·김병철, 2008)라는 인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한 국가의 브랜드화에 성공한다면 경제적 차원에서 자국의 제품

경쟁력이 높아지는 동시에 기업과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하게 된다. 이외에도 국가이미지 제고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파급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결국, 부패문제를 단순히 법질서 확립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가발전을 위한 품격을 제고하는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절실하다.

제2절 반부패정책의 실천적 대안 제시

1. 반부패 국제동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경제의 확산으로 부패방지의 국제화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동서독 통합, 소련 붕괴 등에 따른 냉전 종식으로 글로벌 경제가 확산되면서 반부패는 국제사회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는 힘의 경쟁이 이데올로기 중심에서 경제 중심으로 이동하였다는 반증이며, 세계 경제계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 확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국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부패수준이 국가경쟁력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UN·WTO·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부패국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OECD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고(‘99년), UN의 반부패국제협약 체결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고, 격년제로 반부패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기구를 주축으로 추진되고 부패라운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세계무역기구(WTO)

- 정부조달투명성협정(1996년) 1997년 1월 발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국제상거래에서 해외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체결(1997년) 1999년 2월 발효,
 - 국내 이행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1998년)
- 국제연합(UN)
 - 반부패협약 제정(2003년), 2005년 12월 발효
 - 회원국의 반부패정책 추진 조직 설치 등 제도 정비, 부패자산 회복 및 국제 공조
- 국제상공회의소(ICC)
 - 국제상거래에서 뇌물수수 방지 행동규칙 채택(1977년)

개발도상국이나 구 사회주의 국가들도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이 부패 만연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 척결에 착수하였다. 아시아권의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및 호주가 부패척결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며, 아프리카에서는 우간다와 탄자니아가 부분적 성공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의 경우, 자국기업 이익 옹호를 위해 부패문제를 계속하여 쟁점화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 소비자 보호 등 기업윤리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EU부패방지총국(OLAF)은 2004년 사기 및 금융비리에 대한 대응강화를 위해 '개혁안' 발표하였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은 2004년에 'APEC 반부패행동계획'을 채택하고 2005년 「APEC 반부패·투명성 T/F 회의」 창설한 상태이다. 이처럼 앞으로도 부패행위에 대한 국제적 제재 및 압력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UN, IMF,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부패방지를 위해 폭넓은 활동을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표 7-1>에 정리하였다.

〈표 7-1〉 국제기구별 부패방지활동 비교

추진과제		중점활동 영역 및 감시대상	주요협약 및 권고안
기구	부속기구 및 위원회		
국제연합(UN) 불법적 금품지급 방지 국제협정위원회(CIAIP), 국제무역법 위원회(UNCITRAL)		1970년대 초 광의의 불법금품에 대한 국제적 논의 시도	· 국제비지니스의 부패와 뇌물 에 관한 선언('96. 2.) ·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모범답 안 ('95.) · UN부패방지협약 제정 ('03.10.)
국제통화기금(IMF)		부패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감시	· 부패국에 대한 자금지원 중 단에 관한 가이드라인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투명성에 관한 작업반(WGTGP)		뇌물로 인한 해외기업차별감시	· 정부조달협정(AGP, '94)
세계은행(World Bank)		개도국의 Good Governance구축과 반부패노력지원	· Corporate governance개혁을위 한 OECD-World Bank공동선 언 ('99); 'OECD 기업지배구 조 원칙'의 준수·이행
국제투명성기구(TI)		국가별 부패인지수(CPI) 발표 OECD국가 뇌물공여지수(BPI) 발표 (2년 주기)	· 국가청렴시스템(NIS) 제시 · 글로벌부패척도조사 발표 ('04.12.)
국제반부패회의(IACC)		홍콩의 엄정공서가 주도	· 리마선언('97) · 2003년 서울에서 11차 회의 개최
미주기구(OAS)		미주지역 내 사법공조, 범인인도, 불법적 재산증가 감시	· 범미주반부패협약('96)
국제의원연맹(IPU)		국제적 자금세탁 금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도 범죄화하는 결의	· 부패통제와 협력을 위한 결의 ('95)
세계경제포럼(WEF)		토목·건축 분야 조달에 참여하고 있는 전 세계 기업들을 감독하기 위한 반부패 방침 개발	· 토목·건축이사회(E&C) 특별 대책 위원회 구성

〈표 7-1〉 계속

추진과제		중점활동 영역 및 감시대상	주요협약 및 권고안
기구	부속기구 및 위원회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 (CIME)	· 국제상거래 뇌물방지 실 무 작업반 운영 ·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뇌 물방지 수검회의 개최 · 다국적 기업의 뇌물방지 와 부패대처 방안에 대한 지침 제공	·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채택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 공여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the OECD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채택('94. 5.)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의 세액 공 제 금지와 형사처벌원칙합의 (리우 회의, '96)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해외공무원 에 대한 뇌물방지협약('97) 제정 · 기업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기업 경 영의 우수사례 권고안이 추가된 'OECD 기업지배 구조원칙(OECD's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 승인 ('04. 4.)
	원조개발위원회 (DAC)	· 자금감시, 부패국지원중단	
	자본이동과 보이지 않는 거래위원회(CMIT)	· 자본자유화 및 돈세탁문제	
	행정개혁위원회 (PUMA)	· 행정개혁, 규제완화, 민영화	
	재정위원회(CFA)	· 탈세방지 및 세정개선	
	금융시장위원회 (CFM)	· 회계투명화, 부채관리	
	경쟁법과 경쟁정책위원회 (CCLP)	· 국제적경쟁을 확립	
	기업지배구조개혁 가이드라인	· 기업지배구조 개선안 권고	
	민간자문위원회 (Trade Union Advisory,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뇌물방지협약의 성실한 이행 과 홍보를 위한 시민사회의 극적인 역할과 참여에 대해 회원국들에게 관심 촉구 · 민간부문 대표들은 동 협약의 이행이 소홀한 사유를 지적하 며 개선 요구	
	반부패국 (Anti-Corruption Division)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 물방지협약의 점검과 성 실한 이행에 대한 수검에 초점을 맞춘 사업 수행	
금융안전성포럼 (Financial Stability Forum ; FSF)		· 금융감독과 감시의 국제적 협력과 정보 교환을 통해 국제금융 안전성 증진을 위해 1999년 4월 구성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준수·이행
국제상공회의소 (ICC)		· 금품 갈취와 뇌물 수수 척 결을 위한 상임 위원회를 구성	국제상공회의소 행동강령 ('99)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반부패 담당기관 현황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반부패 담당기관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각 국의 반부패 담당기관의 특징과 그 주요기능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가. 홍콩의 엄정공서

☐ 설립

- 엄정공서 조례에 근거, 1974년 2월 15일에 설립

☐ 주요 법령 및 권한

- 반부패 3륜법 : 엄정공서(ICAC)령, 뇌물방지령(PBO, Prevention of Bribery Ordinance), 선거부정 및 불법행위방지령(ECICO, Elections Corrupt and Illegal Conduct Ordinance)
- 엄정공서령(조례)
 - 엄정공서의 설립 근거·권한 및 기능 규정
 - 조사권, 체포·감금·보석 승인권, 압수권
 - 부패혐의자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 및 48시간 내 구금 가능
 - 부패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공직남용 사실도 조사
- 뇌물방지령(조례)
 - 직무 수행에 있어 ‘이익’을 바라고 하는 모든 행위는 부정이라고 규정, 공적 영역뿐 아니라 사적 분야의 부패행위 단속근거
 -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부문의 뇌물관련 조사권
 - 뇌물위반 조사를 위한 은행계좌추적권, 혐의자의 자산·수입·지출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요구권

- 현직뿐 아니라 전직 공무원도 봉급수준을 상회하는 생활에 대한 설명 못하면 유죄로 인정
- 몰수회피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여행관련 서류 보유권 및 재산처분 방지권
- 선거부정 및 불법행위방지령(조례)
 - 선거에서 부패 및 불법행위 예방권
 - 모든 공직선거에서 후보들은 1000홍콩달러(17만원상당) 이상의 돈이나 서비스, 상품을 받을 경우 반드시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 선관위에 보고해야 함.
 - 선거부정행위자는 20만-50만홍콩달러의 벌금과 3-7년까지 징역 가능
- 홍콩 염정공서는 부패행위고발자가 원하면 새로운 신분을 줄 수 있는 권한 보유(이름, 주소 등)

□ 주요기능

- 집행처
 - 부패사건 고발의 접수 및 심사
 - 《염정공서조례》, 《뇌물방지조례》 및 《선거조례》를 위반한 혐의에 대한 조사
 - 예) 마약, 여권위조, 불법이민, 신용카드 사기, 뇌물 등의 중수죄죄 → 최고 징역 10년, 벌금 100만불(홍콩달러)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범한 공갈죄에 관한 조사
 - 조사공무원 관련 부패행위 조사
- 부패예방처
 -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업무규정 및 절차 심사
 - 부패 취약점 발굴 및 개선방안 건의를 통해 부패가능성 축소
 - 개인기업 등에서 요청시 부패방지건의안 마련·제공

- 부패예방처는 조사 종결 후 부패방지건의안을 조사보고서와 함께 “부패예방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서나기관에 이첩하여 시행토록 하는 권한 보유
- 지역사회관계처
 - 일반 국민들에게 부패의 해악을 인식시킴
 - 부패척결 및 청렴성 구현을 위한 시민지원 획득
 - 사회관계시민자문위원회 자문 등 관련사항 수행

나.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

□ 설립

- 싱가포르는 법에 의한 지배, 공정성, 투명성과 이를 통한 부정부패 척결과 시장개방을 기초로 지난 5년간 국가경쟁력 1위를 고수
 - 신속, 정확, 단호, 공정 등을 중시하여 ‘비리공직자의 저승사자’로 불리움.
- 그 배경에는 1952년에 설립된 수상 직속의 독립기관으로서 부패방지과 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貪汚調査局(부패조사청,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의 역할이 크게 작용
 - 1952년 부정부패조사기관으로 설치
 - 1960년 부정부패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 POAC) 개정
 - 1989년 부당이득환수법 제정
 - 1999년 부정부패, 마약거래 및 기타 중범죄에 관한 법률 제정

□ 조직구성

- 부패조사국장의 사법권 행사, 국가원수가 조사국장 임면
- 청장(Director)을 정점으로 조사국(Operations Division)과 행정 및 특별지원국(Administration & Specialist Support Division)의 2대 부서로 구성

- 조사국은 부패방지법에 의거 부패를 수사하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며, 특별 조사반(SIT, Special Investigation Team)등 4개반으로 나누어져 있음

□ 주요기능 · 권한

- 부패조사청은 공직 부정행위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부정행위까지 조사권 보유
 - 실제로 뇌물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럴 의도만 있었으면 처벌 가능
 - 싱가포르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부정부패행위도 국내에서 저지를 불법행위로 간주해 똑같이 처벌
 - 공무원이 민간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정부는 이해관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에게 주식포기 요구 가능
 - 선물은 소속부처 회계국장이 부과하는 적정가격을 지불해야 선물 소유 가능
- 부패방지법이 규정한 범죄에 관련된 정보가 접수되거나,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특별수사권) 보유
 - 은행계좌, 주식지분, 동산구입, 지출상태를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관련 기록, 물품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음
 -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혐의자의 재산과 서류를 압수, 수색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개인과 기업의 은행계좌 추적권
 - 부정자금세탁행위 기민하게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부패행위 소지여부진단 및 사전예방조치
 - 모든 공무원은 임용된 첫해부터 매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 동산, 주식, 예금 등의 재산신고
 - 만약 재산이 형성된 경위를 해명하지 못할 경우 전부 환수
 - 모든 공무원 해마다 ‘채무부존선언’(Declaration of Non Indebtedness)
-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뇌물을 받았을 경우,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시키고

재기불능 상태

- 5년 이하의 징역과 10만 싱가포르달러(약 7500만원) 벌금 및 불법 취득한 부동산과 재산 모두 반납, 100% 환불 못하는 경우 더 무거운 형벌 부과

다. 대만의 정풍사와 감찰원

□ 설립 및 조직

- 1953년 각 기관내에 안전처를 설치하면서 출범
- 1972년 안전처가 인사처로 개편되면서 정풍업무 담당
- 1992년 ‘정풍기구인원설치조례’에 따라 현재의 정풍사 설치되어 공직내부의 부패문제 다룸
- 2000년까지 1,061개의 정풍기구 설치, 3500여명 정풍업무 담당
- 우리나라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관실과 유사하나 법무부 소속으로 해당부처로부터 독립된 업무 수행
- 1987년 탐오치죄조례 개정

□ 권 한

- 탄핵권, 규거권, 규정권, 조사권 보유
- 정풍실 요원이 적발하지 못한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기관이 적발했을 경우 해당 정풍요원 문책
- 감찰원은 총통, 부총통을 비롯한 공직자가 위법행위나 직무태만 행위를 했을 경우 탄핵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 가짐
- 탄핵권 외에도 사법원의 정-부원장, 대법관, 고시원의 정-부원장을 총통이 임명할 때 감찰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전동의권
- 공무원 직무감찰, 회계감사, 민원처리
- 대과(大過) 두 번이면 공직을 떠나야 함.

-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과 벌금 3000만 대만위안(元, 약12억원)을 병과
- 또 직무범위내에서 비교적 죄과가 심할 경우에는 7년이상의 징역과 6000만 대만위안(24억원)의 벌금을 병과하고 직무범위를 벗어나 뇌물수수를 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10년이상의 징역과 1억 대만위안(40억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가혹한 처벌 규정
- 금권정치 타파와 부패척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93년 도입된 양광법(陽光法, 재산공개법)은 매년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를 의무화해 보고된 재산의 사실 여부를 감찰원이 확인
- 재산신고대상은 총통 부총통을 비롯해 5원(院)의 정·부원장, 부장(장관), 입법의원, 대법관 등 거의 모든 고위관료가 망라되는데 신고재산이 소득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데도 그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

라. 중국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및 최고인민감찰원 등

□ 중앙기율검사위원회

- 개요
 - 설립일 : 1949. 11월
 - 설립근거 : 중국공산당장정규정
(중국 공산당 당규이며, 당의 전국대표대회에서 선거로 구성)
- 소관법규
 - 중국공산당기율검사기관기소업무조례
 -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감찰부의고소고발인보호에관한규정
 - 당내청렴성구현책임제시행에관한규정
- 조직·인원

- 書記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임명(당 중앙위 소속기구)
- 黨과 정부의 결정으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및 감찰부(국무원 소속)가 협약한 「기강확립 공동업무추진기구」 구성 ('93년)
- 당 중앙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당의 기율검사 및 행정 감독

○ 주요기능

- 당 위원회의 기풍 유지, 당의 노선·정책 및 의결사항 집행현황 검사

□ 최고인민검찰원

○ 개요

- SFO법은 엄격한 법적 직무특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무상 비밀보호 의무를 제척하고 있음
- 최고 법률감독기관 및 검찰기관(헌법 제129조)
- 반란죄·국가분열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독립적 검찰권 행사, 공안기관 수사사건 심사, 범죄자 체포 및 기소여부 결정·공소유지

○ 반부패관련 보조기관 : 반부패뇌물총국

- 전국 검찰기관의 부패사건, 공금유용사건 등 처리 감독 및 중대한 부패사건 조사 협조, 부패사건의 특징 등에 대한 연구 분석 및 대안 제시

□ 국무원 소속 감찰부

○ 연 혁

- '49.10 중국인민공화국 건국에 따른 행정감찰체계 수립으로 당시 정무원 (現 국무원) 산하에 “인민감찰위원회”를 설립
- '54. 9 정무원은 국무원으로 개편되고, 정무원 소속 인민감찰위원회는 “감찰부”로 개명
- '59. 4 국가관리체제의 조정에 따라 감찰부 폐지
- '87. 7 제6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감찰부 재

설립 및 성·시·현 각급 지방정부 산하 감찰기구 설치

- '97. 5. 9 「중화인민공화국행정감찰법」 제정

○ 성격·지위

- 행정감찰 전문기관으로서, 원활한 정책시행의 보장, 행정질서 유지, 청렴성 제고, 행정능률 향상,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법치행정 촉진
-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 의거, 전국 행정감찰 업무를 총괄
- 감찰부는 공무원의 지휘를 받으며 여타 행정기관이나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음

○ 기능 및 관할범위

- 「중화인민공화국행정감찰법」규정에 의거, 감찰부 감찰대상은 국무원 산하 각 부처 및 그 소속 공무원,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며,
- 감찰부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감찰부서 및 필요시 타 행정기관 감찰부서의 관할범위 내 감찰업무 직접 처리 가능

○ 주요직책

- 국무원 소속 각 부처 및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법률·법규 및 국무원의 결정·명령의 집행 과정상 문제
- 국가행정기관, 국가공무원 및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자의 행정기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고발사항 수리 및 조사 처리
- 국가행정기관, 국가공무원 및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자가 제기한 관할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의 심판의뢰 및 법률 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한 타 감찰기관이 수리한 심판의뢰건 수리
- 타 감찰기관이 행한 기타 직무

○ 직무권한

- 헌법, 감찰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 검사권, 조사권, 건의권 및 행정처분권 보유

- 국가법률·법규·정책의 집행 현황 및 행정기율 위반행위 검사
- 국가법률·법규·정책의 위반 행위 및 행정기율 위반행위 조사
- 국가행정기관의 법률·법규·정책 위반행위 관련 처리권한이 있는 기관에 처리를 건의하고, 행정효율 제고방안을 건의
- 행정기관의 법령·정책 집행상, 감사부서의 업무처리상 공적이 있는 기관·개인에 대한 포상 건의
- 검사·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감사의견을 제시하여 처리토록 하거나, 감사결정으로 경고, 징계기록, 강임, 해임, 파면 등 행정처분 직접 시행

마. 일본의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 등

□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

○ 개관

- 국가공무원윤리법 시행(2000.4.1)으로 인사원에 설치
- 공무원의 직무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증여 등 금지·제한, 기타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종합 기획
- 국가공무원윤리규정에 제정·개폐에 관하여 내각에 의견 제출
- 윤리법·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기준 작성·변경
- 윤리 유지를 위한 연수의 종합 기획·조정
- 윤리법·윤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징계 등

○ 주요기능

- 금지사항에 대한 기획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전·물품·부동산 수수 등 국가공무원윤리규정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연구 및 종합기획

- 본청 심의관(국장)급 이상자의 보고심사
 - 증여된 물품에 대한 심사
 - 주식거래 신고에 대한 심사
 - 연간소득신고에 대한 심사
- 국가공무원윤리규정 중 행동 및 보고 규정 위반에 대한 대처
 - : 규정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절차 및 개요 공표, 위반자에 대한 해당기관에 징계 요청 및 공동·직권조사 등

○ 조직

- 심사회 : 회장 및 위원 4인으로 구성, 임기는 4년
- 사무국 : 심사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인사원 소속 직원 12명으로 구성

□ 총무성 행정평가국

○ 주요기능

- 정책평가제도에 관한 기획입안
- 사무의 총괄
- 정책 평가 실시
- 행정평가감시 업무
- 독립행정법인 평가에 관한 업무
- 행정상담

바. 말레이시아의 반부패청

□ 설립

- 1967년 수상실의 직속기관 중 하나로 설립

- 1973년 국가조사청으로 변경
- 1982년 반부패청(ACA)으로 명칭 변경
 - 실질적 부패방지 임무 부여
- 1997년 반부패법에 근거하여 설립
- 실질적인 부패감시와 조사를 위한 역할 및 대국민 홍보 기능

□ 권 한

- 반부패청 직원들은 각각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여 경찰이 가지는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사권 행사 가능
- 반부패청 공무원에게 검사에 대한 고지권 부여
- 기소국에 파견된 검사가 부패사건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도록 전적인 보좌
 - 1998년 한해 모두 397건의 기소 이루어짐.
- 1998년 완결된 사건 187건 중 114건(60.96%)이 유죄 판결 받음

사. 호주의 부패방지처

□ 설 립

- 1980년대 후반 노동당 집권당시 뉴사우스 웨일즈주(NSW) 공직사회에 부패행위가 만연하여 국민들의 불신과 비난 극심
- 1988년 당시 야당이던 자유당이 부정부패 추방 분위기 속에서 집권에 성공하여 부패방지청법(The ICAC Act)을 제정 하였고, 1989년 3월 부패방지청(ICAC) 설립
-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조사 및 예방과 공직분야와 지역사회에 부패의 효과에 대한 교육에 초점을 둠으로써 행정 청렴도 증진이 목적

□ 조 직

- 독립기관(독임제 의사결정기관)
- 청장은 주 의회의 여·야 합의에 의하여 주 수상이 직접 임명
- 청장은 형사법 위반이나 정신병 등의 사유로 주 상·하 양원의회의 합동의 결에 의해서만 해임 가능
 - 청장은 5년 임기의 단임제 운영
- 직원은 4개 부서(국)에 120여명
 - 청장, 부청장, 조사국은 평가과 15명 및 조사분석과 50명, 법무국은 법률자문변호사 등 을 포함 10명, 부패방지교육 연구국 22명, 기업협력국의 행정 등 지원인력 22여명임
 - 직원들의 보수수준은 민간의 2/3 수준임

□ 주요 기능

- 공공부문의 부패와 관련되는 어떠한 민간부문도 조사 가능
- 신고접수 및 조사(조사국)
 - ICAC는 부패행위를 적발해 조사할 권한만 가짐, 기소권은 검찰
- 정보·자료 제출 요구권
 - 모든 관공서에 정보와 자료 요청권, 직접 들어가 조사하고 자료 복사할 권한
- 압수수색권 , 재산추적권, 감청권
- 청문회 개최(법무국) 가능
 - 경찰청 간부가 포함된 경찰, 무장강도, 불법도박업자들과의 비리 커넥션 청문회 : 1992년 11월부터 1993년 11월까지 1년간 무려 143차례 청문회 개최, 2년 6개월간의 조사 끝에 1994년 2월 사건보고서 제출 → 관련자 처벌 및 경찰조직 개혁)
 - 청문회는 처장 또는 부처장이 주재하며, 공개청문회는 조사의 투명성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
 -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부패상을 의혹 한점없이 밝히려는 ICAC의 기본

정신에 근거

- 부패방지 교육·제도개선 권고(부패방지교육·연구국)
- 외부기관과의 부패방지 협력관계
 - ICAC는 국제사회의 반부패운동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 수행
 - 다른 공공기관의 제도개선 및 변화를 위해 공동 노력
- 철저한 고발자 보호
 - ICAC법에 따르면, 증인이 청문회에서 제출한 답변, 문서 등은 그 증인에 대한 민사, 형사 및 그 밖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
- 권한 사용에 대한 보고서 작성해 주의회(뉴사우스웨일즈주)에 보고

3. 반부패 운동의 성공 및 실패 사례

가. 성공사례

반부패 운동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나라의 모범 사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홍콩**은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와 함께 반부패정책을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한 나라로 평가받는다. 철저한 독립성, 엄격한 반부패법령, 대중의지지를 통해 홍콩 행정장관 직속으로 그에게서만 지휘를 받고 책임, 그 외 어느 다른 누구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는 반부패 담당기관인 염정공서를 운영하고 있다. 1970년대 초까지도 홍콩에는 부패가 만연, 공직사회에도 뇌물수수가 빈번하였다. 1974년 2월 염정공서(ICAC) 설립을 독립기구로 설립한 이후, 성공적인 반부패기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염정공서는 부패사건 연루자를 14년간 추적해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한 유명한 부패척결사례가 있다(일명 캐리언 사건 - 기네스 북에 '세계최장기 조사기록' : 1987년-2000년, 1970년대 가장 많은 벌금 미화1,600만달러, 징역형 27년 선고). 또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유죄율 87%(1999년), 기소에 대한 유죄율 79%(2001년)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정

부최고책임자의 심각한 문제의식과 일반국민의 두터운 신뢰 등이 기반이 되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99%가 '염정공서의 반부패활동에 지지를 보낸다' 라고 응답하였고, 64.7% '부정부패를 보거나 인지하면 염정공서에 신고하겠다', 67% '염정공서의 발표결과를 신뢰한다', 80%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부정부패에 대해 참을 수 없다' 응답하였다. 시민과의 협력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염정공서 산하 '홍콩윤리개발센터'를 통해 2600여개의 기업 가운데 70%가 염정공서의 도움을 받거나 접촉 후 윤리강령 제정·시행하기도 하였다. 염정공서 직원에 일반기업의 두 배에 가까운 높은 보수와 복리후생을 제공받는데, 1990년대 후반 대졸초임 기준으로 기업체는 월 약 1만 5000홍콩달러, 일반공무원은 1만 9000홍콩달러인 반면, 염정공서 직원은 월 2만 8000홍콩달러(약 476만원) 보수, 민간 기업체의 1.8배)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인해 염정공서 직원들은 정부로부터 엄한 도덕성과 높은 수준의 복무기준 준수 받도록 요구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이익충돌시 처장 보고, 부하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일은 절대로 금지하고 있다.

둘째,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부패하지 않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기업 중심지로 정치적 리더십, 부패 정도, 노동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싱가포르의 반부패 성과의 이면에는 엄격한 부정부패방지법과 강력한 반부패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패조사청(CPIB)이 있다. CPIB는 수상실 직속기관으로 조사국 주요직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여 엄격한 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조사권을 직원에게 부여 등으로 부정부패에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는 조사국의 권한을 부여한 점도 CPIB의 특징이다. 또한, CPIB는 철저한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운영하는데 익명 부패신고 가능, 고발인이 고발 사건의 민·형사재판 증인으로 설 수 없도록 함, 고발인이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반부패 정책의 특징은 단기적인 대증처방보다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최고통치자의 강력한 의지와 독립적인 부패통제기구 등이 싱가포르 부패척결의 성공요인으로 평가된다. 부패척결에 대해 정치지도자들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 부패방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리관유(李光耀), '제3세계에서 선진국으로'(From Third World to First) 중에서)로 받아들이고 있다.

셋째, **말레이시아**는 관련 기구와의 공조와 협력과 더불어 적극적인 대국민

반부패 홍보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반부패청은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하고, 정보 및 연구기능까지 포함한 부패척결 운동의 핵심적인 기관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예산과 인력도 풍부하여 인구 10만명당 4.8명, GDP 대비 0.018% 예산을 기록하였으며(한국은 인구 10만명당 0.29명, GDP 대비 0.002%), 14개 주 사무실 및 9개 산하지부를 보유하고 있다.

넷째, **호주**는 “운전중 과속단속에 걸리면 ‘재수없네’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할 정도로 원칙과 법에 따른 생활방식이 뿌리내린 나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폭로보호법에 따라 부패를 고발한 공공부문 종사자는 해고나 차별 등으로부터 보호, 불리한 조치를 취한 관리자는 기소되거나 징계 대상이 된다.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시작으로 가장 효율적인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한 국가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호주도 1980년대 후반 노동당 집권 당시 뉴사우스 웨일즈주 공직사회에 부패행위가 만연하여 국민들의 불신과 비난이 극심한 상태였으나 1988년 부패방지청법(The ICAC Act) 제정, 1989년 3월 설립된 부패방지청은 기구나 조사방법, 청문회 개최 등은 매우 독특하면서 효과적인 부패방지의 원동력이 되었다. ICAC는 독립 보장과 더불어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고, 장관 또는 정부에 대한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외에도 부패방지 교육과 제도개선을 위한 권고를 꾸준히 지속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다섯째, **핀란드**의 경우에는 의회국가감사원(PSA)과 국가감사원(SAO) 등 감사기관과 옴부즈맨(국민민원처리 담당관)제도 등 다양한 독립기관을 통해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국가예산에 대한 감사제도가 철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AO는 1824년 핀란드 상원의회 재정부 산하에 설치됐으며, 2001년부터 헌법상의 독립적 감사기관으로 새출발. 의회를 비롯해 정부 및 정부 산하 기관 전체의 예산과 운영 전체를 감사대상으로 한다. 또한, PSA 역시 국가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며, 의회 산하기관으로 정부 예산을 주로 감사하며 의회에 감사내역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3명의 의회 옴부즈맨은 정부의 공무원집행을 감시하고 피감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감사권과 형사처벌 명령권까지 포괄적인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여섯째, **덴마크**는 1997년부터 99년까지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로 선정되었다. 또한, 부패로 징계를 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공무원이 거

의 없다고 평가된다. 공무 수행에 관한 법제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뇌물을 꿈꾸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공무 수행중 공무원 개인의 친척과 관련된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상부에 보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한다. 봉급 수준도 민간부문과 동급, '생계형 뇌물' 역시 덴마크 공무원에게는 관심 밖으로 일반범죄에 비해 경제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때문에 뇌물수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평균 46%의 높은 세율과 엄정한 조세제도도 부패의 싹을 자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철저히 감시, 부패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점도 덴마크의 특징이다.

일곱째, **스웨덴**은 '옴부즈맨'제도의 원조(元祖)국이다. 1809년 처음으로 의회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 투명 행정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의회 옴부즈맨제(JO)로, 옴부즈맨은 4명의 덕망 있는 판사들로 의회에 의해 선임되며 임기는 4년이다. 옴부즈맨은 기소는 물론 부정 공무원의 해고와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앙-지방정부, 산하기관이 모두 옴부즈맨의 감시대상이 된다. 소비자 옴부즈맨, 평등기회 보장 옴부즈맨, 인종차별 옴부즈맨, 아동 옴부즈맨, 장애인 옴부즈맨, 언론 옴부즈맨 등 주로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다양한 옴부즈맨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스웨덴 형법은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 매우 강력한 처벌규정, 대부분 정부기관과 민간 기업은 자체 반부패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여덟째,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 시기에 세계최초의 부패방지법 제정 및 엄격 적용으로 "빅토리아 황금시대"를 전개한 경험을 갖고 있다. 산업혁명시기 영국에서는 금품제공, 향응 등 각종 부정선거가 극심하였으며, 향응법(1696), 매수법(1729), 부패행위법(1854), 비밀투표법(1872) 등에도 불구하고 부패의 일상화로 인해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19세기말 영국 글래드스톤의 개혁('부패 및 위법행위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부패 척결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역사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정부부문(공직사회)이 먼저 윤리준법체제를 구축하고 기업 등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로 확산된 특징을 갖는다. 정부부문, 기업 등의 '윤리준법체제'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 중이다. 해외부패방지법, 정부윤리법, 내부고발자보호법 등을 제정하고 특별심사청(OSC)을 설치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기업윤리 세계표준화 추진

(2002년) 등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나. 실패사례

반부패 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들이 있는 반면,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운동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국가들도 존재하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러시아**는 관료주의의 강화, 정부의 지원 하에 경제자원의 재배치로 촉발된 부패의 증가 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소련 국가의 부패는 최근 크게 줄었으나, 러시아는 뇌물제공 등에 대해 간과하는 등 여전히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서구자본 유치를 위한 노력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푸틴효과는 근본적인 변화가 될 수 없어 서방기업의 투자기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최근 부패방지에 관한 형법협약 비준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내는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최근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9%정도가 자국이 세계 10대 부패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는 정도로 국민들의 신뢰도 추락한 상태이다.

둘째, **중국**은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패 상황도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그 수법도 보다 교묘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1980~1990년대 높은 부패 발생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하였다. 특히 고위공무원 부패는 매우 심각하며, 이는 뇌물 수수 고발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중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부패가 꼽히고 있다. 중국의 경우,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권력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보여지며, 일당 체제에서 경제와 균형이 가능한 법의 지배로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경찰 부패, 사법부와 정치인 간의 유착, 국영기업 인사 부패 등으로 인권상황과 빈부 격차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부패근절을 위한 많은 조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정치 및 행정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너무 미약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패와 족벌주의 척결을 위한 특별독립 반부패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넷째, 최근 **폴란드**에는 부패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며, EU 가입성사의 주요인으로 부각된 적이 있다. 폴란드 기업들이 폴란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에 비해 고위 정부관료들에게 뇌물을 수여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뇌물 수수 후 프로젝트 추진,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 폴란드 정부가 공무원과 민간 기업들의 부패 척결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장으로 하여금 부패가 성행하도록 놔두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태국**의 경우에는 Chatichal 정권부터 부패 등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쿠데타와 저항세력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 몇 년간의 부패사건은 관료와 정치인 사이에 공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Thaksin 전 태국수상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바 있지만, 본인 역시 독직 사건에 휘말려 있고 하야한 상태이며, 관료제의 부패 척결에 대한 공직사회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제3절 사례연구 - 반부패 교육을 통한 청렴도 제고

1. 우리나라의 부패방지교육 사례³³⁾

부패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수단은 교육이다. 우리나라 부패방지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과 정별 중점 교육방향은 아래와 같다.

- 반부패·청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해 및 청렴시책에 대한 향후 발전방향 모색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인식과 자율적 참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 역량 학습
- Action Learning을 통한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여 부패 현안에 대한 문제점 발굴과 실천적 해결방안 모색
- 청렴교육 교과반영 내용, 교재활용 방법, 지도방법, 등 교수기법 전파
- 학교 교육과정에 청렴 내용을 반영·지도토록 함으로써 청렴세대 육성기반 조성

또한, 중앙·지방·교육행정기관 과정 및 교원연수 과정과 더불어 맞춤형교육 과정, 공직유관단체 과정, 사이버청렴교육과정 등의 다양한 커리큘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중앙·지방·교육행정기관 과정

□ 과정 성격

- 행정부 중앙행정기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33) “국가청렴위원회, 『2008년도 청렴교육 운영계획』, 2008. 2”에서 발췌하여 재정리

- 시·도, 시·군·구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 교육 목표

- 부패방지관련 법과 제도, 시책 등 반부패·청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각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방안 모색 및 운영 기반 구축
- 교육행정 분야의 청렴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및 실무능력 기반 구축

□ 교육 운영계획

- 대 상 :
 - 중앙행정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 시·도, 시·군·구 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
- 인 원 :
 - 중앙행정기관 : 180명(3일과정 기당 70명, 5일과정 기당 40명)
 - 지방행정기관 : 550명(3일과정 기당 70명, 5일과정 기당 40명)
 - 교육행정기관 : 650명(3일과정 기당 70명, 5일과정 기당 40명)
- 기간/횟수
 - 중앙행정기관 : 3일과정(비합숙) 2회, 5일과정(비합숙) 1회
 - 지방행정기관 : 3일과정(비합숙) 5회, 5일과정(비합숙) 5회
 - 교육행정기관 : 3일과정(비합숙) 7회, 5일과정(비합숙) 4회

나. 교원연수 과정

☐ 과정성격

-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 교육목표

- 부패방지관련 법과 제도, 시책 등 반부패·청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초·중등학교 청렴교육의 배경과 의미, 목표 및 내용 체계 이해
- 도덕·사회과과정 청렴교육 연계방안 및 교재활용과 지도방법 습득

☐ 교육운영계획

- 대 상 : 초·중·고 교장, 교감, 교사
- 인 원 : 830(3일과정 기당 70명, 5일과정 기당 40명)
- 기간/횟수 : 3일과정(비합숙) 9회, 5일과정(비합숙) 5회

다. 맞춤형교육 과정

☐ 과정성격

-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기관수요에 알맞게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운영하는 과정

☐ 교육목표

- 부패방지관련 법, 제도, 시책 등 반부패·청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경찰공무원에게 청렴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및 실무능력 기반 구축

☐ 교육운영계획

- 대 상 : 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 인 원 : 70명(3일과정 기당 70명)
- 기간/횟수 : 3일과정(비합숙) 1회

라. 공직유관단체 과정

☐ 과정성격

-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문적 지식 함양 과정

☐ 교육목표

- 부패방지 제도, 시책 등 반부패 청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공직유관단체의 청렴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방안 및 실무능력 향상

☐ 교육운영계획

- 대 상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인 원 : 510명(3일과정 기당 70명, 5일과정 기당 40명)
- 기간/횟수 : 3일과정(비합숙) 5회, 5일과정(비합숙) 4회

〈표 7-2〉 우리나라 청렴교육전문가 과정(2009년 기준)

과정명	구분	교육대상	교육 시간	교육기간	교육 인원
총계(21개 세부과정)					총 2,760명
맞춤형 과정	건설·건축 분야	주택·건축 인·허가, 공사계약·감독 등 담당자	3일	7. 8(수)~7.10(금)	70명
				8.26(수)~8.28(금)	70명
			5일	9. 7(월)~9.11(금)	60명
				9.14(월)~9.18(금)	60명
	인사 분야	각 기관 인사업무 담당자	3일	9. 2(수)~9. 4(금)	70명
				9. 9(수)~9.11(금)	70명
			5일	10.12(월)~10.16(금)	60명
	예산집행·계약 분야	예산집행, 계약 등 회계실무 담당자	3일	4.22(수)~4.24(금)	70명
				5.13(수)~5.15(금)	70명
				5.20(수)~5.22(금)	70명
				5.27(수)~5.29(금)	70명
				6. 3(수)~6. 5(금)	70명
				7. 1(수)~7. 3(금)	70명
			5일	5.18(월)~5.22(금)	60명
				5.25(월)~5.29(금)	60명
	보조금지원 분야	유관단체 지원·감독업무 담당자	3일	6. 8(월)~6.12(금)	60명
				6.15(월)~6.19(금)	60명
	경찰업무 분야	조사·단속업무 담당자	3일	7.28(수)~7.30(금)	70명
	경찰업무 분야	조사·단속업무 담당자	5일	11.23(월)~11.27(금)	60명
	병무·국방 분야	군사, 무기, 병역, 국가유공자 관리업무 담당자	3일	11.13(수)~11.13(금)	70명
	세무업무 분야	세무조사·고지업무 등 담당자	3일	11.25(수)~11.27(금)	70명
	보건·의료 분야	의료법인, 의약품 허가·관리 담당자	3일	9.16(수)~9.18(금)	70명
	식품·위생 분야	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담당자	3일	9.23(수)~9.25(금)	70명
	환경업무 분야	환경관련 지도·단속 업무 담당자	3일	10. 7(수)~10. 9(금)	70명
	검찰업무 분야	검찰 업무 담당자	3일	10.14(수)~10.16(금)	70명
전문 강사 양성과정		각급 교육훈련기관 강사요원	5일	3. 9(월)~3.13(금)	60명

〈표 7-2〉 계속

과정명	구분	교육대상	교육 시간	교육기간	교육 인원
총계(21개 세부과정)					총 2,760명
청렴 소양 과정	승진자 과정	각급 공공기관 승진자	3일	4. 8(수)~4.10(금)	70명
			5일	4. 6(월)~4.10(금)	60명
	신규자 과정	각급 공공기관 신규임용자	3일	4.15(수)~4.17(금)	70명
중앙행정기관 과정		중앙행정기관 감사·윤리업무 담당자	5일	4.13(월)~4.17(금)	60명
지방행정기관 과정		지방행정기관 감사·윤리업무 담당자	3일	3.11(수)~3.13(금)	70명
			5일	11. 2(월)~11. 6(금)	60명
				11. 9(월)~11.13(금)	60명
교육행정기관 과정		교육행정기관 감사·윤리업무 담당자	3일	3.18(수)~3.20(금)	70명
				11.18(수)~11.20(금)	70명
			5일	3.16(월)~3.20(금)	60명
교원 연수 과정	교감 · 교장 연수	전국 초·중·고교 교장, 교감	3일	6.17(수)~6.19(금)	40명
				6.24(수)~6.26(금)	40명
			5일	6.29(월)~7. 3(금)	40명
				7. 6(월)~7.10(금)	40명
	교사 연수	전국 초·중·고교 사회·도덕과 교사	3일	7.29(수)~7.31(금)	40명
				8. 5(수)~8. 7(금)	40명
공직유관단체 과정		공직유관단체 감사·윤리업무 담당자	3일	3.25(수)~3.27(금)	70명
			5일	10.19(월)~10.23(금)	60명

주: 교육생은 과정 시작 전 각 기관별 공문 통보·회신을 통해 선발 ('08년과 동일)
자료: 권익위 내부자료.

마. 사이버청렴교육 과정

□ 과정성격

-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의 현대적 개념, 청렴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 및 국가청렴정책 방향 등 전문적 지식함양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이버교육과정

□ 교육목적

- 반부패·청렴정책의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위원회의 정책 인지도 제고
- 공직자들에게 청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켜 국가청렴도 제고에 기여
- 바람직한 공직자의 역할을 제시하여 공직사회에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운영방법

- 국가청렴위원회 자체 운영
 - 국가청렴위원회가 자체 개발한 콘텐츠를 중앙공무원교육원 서버에 탑재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식
- 사이버 위탁교육 운영
 - 국가청렴위원회가 개발·위탁한 콘텐츠를 각 수탁기관 자체서버에 탑재하여 자체적으로 운영
 - ※ '07년 10월 선정된 총 4개기관을 대상으로 위탁교육 및 공동 활용 시범운영
- 중앙공무원교육원 서버 공동 활용 교육운영
 - 중앙공무원교육원 서버에 탑재된 콘텐츠를 각 기관이 교육운영자를 지정하여 자체 지침에 따라 운영
 - ※ 별도의 운영지침이 없을 경우 국가청렴위원회 또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 적용

〈표 7-3〉 우리나라 사이버 청렴교육 과정(2009년 기준)

기수	수강신청(★선착순마감)	모집 정원	교육기간	수료처리
1기	2.25(수) 9시~2.27(금) 16시	300명	3.3(화) ~3.17(화)	3.19(목)
2기	3.11(수) 9시~3.13(금) 16시	300명	3.17(화)~3.31(화)	4.2(목)
3기	3.25(수) 9시~3.27(금) 16시	300명	3.31(화)~4.14(화)	4.16(목)
4기	4.8(수) 9시~4.10(금) 16시	300명	4.14(화)~4.28(화)	4.30(목)
5기	4.22(수) 9시~4.24(금) 16시	300명	4.28(화)~5.12(화)	5.14(목)
6기	5.6(수) 9시~5.8(금) 16시	300명	5.12(화)~5.26(화)	5.28(목)
7기	5.20(수) 9시~5.22(금) 16시	300명	5.26(화)~6.9(화)	6.11(목)
8기	6.3(수) 9시~6.5(금) 16시	300명	6.9(화)~6.23(화)	6.25(목)
9기	7.1(수) 9시~7.3(금) 16시	300명	7.7(화)~7.21(화)	7.23(목)
10기	8.12(수) 9시~8.14(금) 16시	300명	8.18(화)~9.1(화)	9.3(목)
11기	8.26(수) 9시~8.28(금) 16시	300명	9.1(화)~9.15(화)	9.17(목)
12기	9.9(수) 9시~9.11(금) 16시	300명	9.15(화)~9.29(화)	10.1(목)
13기	9.29(화) 9시~10.1(목) 16시	300명	10.6(화)~10.20(화)	10.22(목)
14기	10.14(수) 9시~10.16(금) 16시	300명	10.20(화)~11.3(화)	11.5(목)
15기	10.28(수) 9시~10.30(금) 16시	300명	11.3(화)~11.17(화)	11.19(목)

자료: 권익위 내부자료.

2. 해외의 부패방지교육 사례

앞서 살펴본 국내 부패방지 교육과 더불어 해외 각국의 부패방지교육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가. 홍콩

홍콩 염정공서의 직원들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커리큘럼에 염정공서의 교육 요소를 편입시키기 위해 교육부의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위원회의 회원들로 활동하고 있다. 언어 등의 특정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염정공서의 교육 요소를 포함시키도록 교과서 공급업자 및 저자들과 연계하여 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독해연습에 염정공서의 메시지와 더불어 글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정식 커리큘럼에 염정공서의 교육 요소들을 강화하는데에 기여하고 있다.

업무 윤리의식을 개발하고, 장차 전문가와 경영자들이 될 준비를 시키기 위해 염정공서의 학교 교육프로그램을 홍콩에 있는 모든 대학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모든 대학은 1학년 학생들에 대해 필수 과목에 적어도 한 개의 윤리 기준을 포함시키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가치를 설교하는 대신 프로그램은 윤리적 판단의 어려움이 닦혔을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02년 11월부터 홍콩대학교와 제휴해 단기간의 반부패 학위과정(Postgraduate Diploma in Corruption Studies)을 두 가지 코스로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기본 3과목을 수료하면 '부패학 자격증(Postgraduate Certificate in Corruption Studies)'을 수여하고, 기본 3과목에 3과목을 추가하면 '부패학 학위증(Postgraduate Diploma in Corruption Studies)'을 수여하고 있다.

학교에서 염정공서의 메시지들을 전하는 교사들을 격려하고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염정공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교실, 학교회의, 정기적인 특별 커리큘럼 활동 등의 여러 가지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학생들과 교사들은 함께 참여활동과 다양한 윤리적 생활을 탐구하고, 해당 참여과정을 통해 교사가 자신의 학생들에게 알맞도록 융통성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다. 다양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교육자료의 보강을 위해 조사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염정공서 직원들 이외에 교사, 교장, 교육 전문가, 심리학자, 청년근로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에 대해 조사, 창안, 제작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염정공서 주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초등학교들을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1998년에 도입하여 학교 기반 활동들을 통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가

치들을 촉진하고 있다. 17만 초등 학생에 이르는 239개 초등학교 전체에 과거 2년 동안에 '염정공서 주간'을 조직하였으며, '염정공서 주간' 활동 준비를 교사들이 쉽게 이용하고 계획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참고 자료와 교육 보조 자료 등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교사들이 직접 담당하고 있다. 각 학교는 그 포트폴리오가 교사들을 위한 유용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부패를 주제로 한 대학생 발표를 준비 이외에 중학교 고학년 학생들과 교실에서 직접 대화를 통해 부패문제와 부패 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 부패방지에 대해 7만 7천여명의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1760회의 대화를 실시하고, 대학 강사들의 경우 전문가적이고, 경영자적인 윤리학 요소들을 적당히 그들의 교육 자료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용한 윤리학 참고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중등학교 교실에서의 대화의 영향을 고양시키고 관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00년 10월 이후부터는 보다 쌍방향적 접근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학생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그룹 게임 등을 통해서 반부패 메시지들을 전달하려고 노력 등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부패의 악영향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학교에서 상호작용 드라마 공연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좋지 않던 과거에 노출되지 않은 젊은 세대는 부패의 위험에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부패악과 결과를 예증하는 쌍방향 연극 공연을 하기 위해 전문적인 드라마 배우들을 고용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쌍방향 활동 참여를 통해서 사회와 개인들에 미치는 부패의 악영향을 평가하는 계기를 제공받게 된다. 전통적인 교실에서의 대화보다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활동들이 보다 효과적이라는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개인의 참가를 통해서 그들은 부패악을 평가하며, 부패에 대한 확고한 자세를 취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1999년 리더쉽 훈련캠프, 세미나, 회의, 경연대회 등과 같은 총 67개의 활동들이 염정공서와 40만 젊은 청년 조직들에 의해 합동으로 조직된 것이다. 2000년 여름에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젊은이들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홍콩, 중국 본토, 마카오 등으로부터 800명의 젊은이들이 참석하여 정상회담을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여기에 참여한 젊은이들은 토론동안 공감을 하였으며 반부패 운동에 대해 완전한 지지를 맹세하기도 하였다.

염정공서는 윤리에 대한 메시지를 유치원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어린 아이들에게 정직성과 청렴성 같은 긍정적인 가치들을 전달하기 위해 TV 만화프로그램

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만화에서 제안된 메시지들을 강화시키기 위해 그 만화프로그램에 기초한 비디오, 게임, 이야기책을 구성하여 교육프로그램이 모든 유아원들에게 공급하였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비공식적이고 편하며 생생한 교육 환경 형성기 초기에 공정성, 정직성, 법 준수의 개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아동의 도덕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지지를 활용하기 위해 자녀 양육포럼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웹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정보기술 발전을 쫓아가는데 예민한 젊은이들을 위해 염정공서는 컴퓨터 게임과 웹페이지상의 활동을 통해서 반부패 메시지를 공개하고 있다. 유치원에서부터 중학교까지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웹사이트³⁴⁾를 개설하여 운영중이다. 또한, 도덕 교사들이 도덕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도덕교육자료들을 제공하고, 교사들 간 도덕교육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場)도 마련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크게 아래의 4개의 섹션으로, (i) 도덕교육자료 섹션 : 600여종 이상의 교육 자료 및 염정공서가 개발한 학생교육용 반부패가이드 제공, (ii) 학생지도사례 섹션 : 학생 도덕상담 사례 모음과 도덕교육전문가의 조언 및 분석 제공, (iii) 도덕교육활동 섹션 : 염정공서가 운영하는 도덕교육과정들의 소개 및 학교 간 도덕교육 경험의 공유의 장 제공, (iv) 교사 포럼 섹션 : 교사 간 도덕 교육 경험 공유와 토론의 장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3월에는 'Teensland'라고 불리는 젊은이들을 위한 홈페이지³⁵⁾를 개설하였다. 이 홈페이지는 참여자들을 늘리기 위해 사이버 캠퍼스와 학교와의 고성능 링크를 가지고 있고, 학생들을 기자, 웹디자이너, 콘텐츠 제작자로 채용하고 있다. 또한, 염정공서가 처리한 사건내용을 교훈적인 내용의 만화로 재구성하여 제공하고, 10대의 창이란 게시판을 통해 청소년 우상인 유명연예인을 탐방하여 깨끗하고 모범적인 삶에 대한 사례를 발굴·제시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I 쉬어가기라는 코너를 통해 반부패 관련 격언해설 및 격언을 이용한 문제풀이(게임)등으로 자발적 교육참여를 유도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젊은이들이 자주 웹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정보기술 발전을 쫓아가는데 예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나. 말레이시아

34) <http://www.icac.org.hk/me>

35) <http://www.icac.org.hk/teensland>

말레이시아 반부패청은 수상실의 직속기관으로 반부패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와 조사는 물론, 정보 및 연구기능과 적극적인 대국민 반부패 홍보전략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대국민 반부패 홍보의 일환으로 반부패 아카데미 등을 설립하는 등의 반부패 활동 확산을 위한 교육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3년 12월 3일 코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태지역의 ADB-OECD 반부패 이니셔티브 4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 반부패 아카데미(MACA)』 설립을 발표하였다. MACA는 2005년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2007년 4월 12일 정식 인가를 통해 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부패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 국제기구에서도 접근 가능한 우수성과 자원을 충분히 보유한 반부패 기관으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MACA는 수준높은 훈련과 연구 활동을 통해 부패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필수적인 자질과 지식, 스킬을 갖춘 국제적·지역적인 반부패 전문가 양성을 추구, 타 반부패 기관과의 파트너십 진전과 더불어 반부패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 및 능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경쟁력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국제적인 반부패 자원 형성과 반부패 공조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 중이다.

MACA는 8개의 학교로 구성되어 각기 반부패 훈련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으며, 2006~2009년 동안 아래와 같은 16개의 국제적인 코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관과의 반부패 교육 활동을 공조하고 있다.

○ MACA 구성

- School of Investigation
- School of Intelligence
- School of Law and Prosecution
- School of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Corruption
- Corporate Integrity Development Centre

- International Studies Centre
- Basic Training Centre
- Planning, Research and Corporate Centre
- MACA 협력기관
 - Government of Britain
 - British Crown Agent
 - ADB-OECD Anti-Corruption Initiative for Asia and Pacific
 - American Bar Association/Asia Law Initiative
 - Asian Development Bank
 -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 and Crime
 - World Bank
 - Basel Institute of Governance, International Center of Asset Recovery
 - INTERPOL Group of Experts on Corruption

MACA의 과정은 부패와 관련하여 조사, 정보수집, 기소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총 130여개의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 및 과정은 『커리큘럼 개발 위원회(Curriculum Development Committee)』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국제적 과정은 외부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Undercover Operation Course, Record Management Course, Trap Case Management Course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국립대와의 제휴를 통해 부패학 석사 후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Malaysian Institute of Integrity, Companies Commission Malaysia, Securities Commission Malaysia 등의 기업관련 기관과의 협력과정으로 『청렴전문가 인증과정(Certified Integrity Officers Course)』를 최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MACC는 최근 5년 동안 약 5,000여명의 부패 전문가를 배출하였으며, 이러한 전문가들을 수시로 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 훈련과정으로 3개월 기초과정 등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다. 호주

호주의 부패방지위원회(ICAC)는 부패방지교육·연구국을 별도로 설치하여 반부패 연구 활동과 더불어 민간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부패방지 교육은 개인보다 기관에 중점을 둬, 즉, 개인 대상 청렴성 교육보다 각 정부기관별로 부패유형, 취약요인 등 특성을 감안하여 실시되며, 교육대상은 공무원, 민간인, 지역사회 등이 된다. 먼저 공직분야 교육은 윤리와 공익의무의 준수 훈련을 통해 부패방지 도모와 부패방지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분야 교육은 ICAC의 업무소개, 정보 및 자료 제공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부패를 제보하는 것이 부패방지를 위한 책임이라는 의식을 깨우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뉴사우스 웨일스 부패방지위원회는 호주국립대학교의 국립개발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부패·반부패 과정(Corruption and Anti-Corruption Course)'을 3주간 집중 코스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 과정으로, 현장에서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반부패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학습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입학 허가는 실무경력과 직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들에게만 허용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수료하면 호주국립대(NSW)의 반부패 전문가 자격증(ANU Graduate Course Award Certificate)을 수여하고 있다. 이미 호주의 반부패기관의 종사자 중 1/3 가량이 이 과정을 이수, 해외 기관 등에서도 참여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호주국립대에서 공공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참여도 장려하고 있다.

라. 기타

미국의 경우, 공무원,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을 장려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반부패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공무원의 윤리교육을 정부윤리청이 지난 1997년 발표한 '연간 의무윤리교육의 변경에 관한 임시규정'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데 윤리교육은 직급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법대생들에게는 법조윤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하

도록 권고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시험의 경우에도 윤리과목 합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는 일주일간의 합숙과정으로 '부패 통제와 조직 청렴성'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지방 검찰은 중국 공무원들이 카드놀이를 즐기는데 착안하여, 52장의 트럼프 카드마다 한 가지씩, 총 52 가지의 공무원 비리 유형을 설명을 곁들인 만화를 삽입하여 배포하는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반부패 교육용 카드는 부패 유형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고발 의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공무원과 민간에게 함께 배포되었는데, 스페이드 에이스(Spade Ace) 카드의 경우 횡령에 대한 법적 정의와 함께 돈이 가득 담긴 상자를 등뒤로 감추는 공무원의 모습 묘사하고 스페이드 킹(Spade King) 카드에는 공무원에 대한 성(性) 상납을 상징하는 만화가 그려져 있다고 한다. 허베이 성 검찰에 따르면, 이 카드는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게도 인기가 좋아 이미 배포한 3만벌 외에도 주문이 쇄도한다고 전한다.

프랑스의 경우, 법무부 산하 부패예방청(CAPC)이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패방지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기업의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 4 절 반부패운동의 국가브랜드化

권익위 내부자료(2009)에 의하면, 보다 체감도 높은 정책의 개발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추진을 통한 국민의 부패인식 개선과 대외 신인도 제고로 국가경쟁력 향상 도모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즉, 반부패 국제교류협력을 통해 『아태지역 반부패 선도국』이라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국가 신인도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반부패 활동 및 성과 등을 국제적 홍보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최근 반부패 관련 정책목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반부패운동이 국가브랜드를 제고하는데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 살펴본다.

1. 『아태지역 반부패 선도국』 국가이미지 확립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APEC 반부패워크숍 및 ACA 회의의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또한, 반부패 기술지원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APEC 회원국의 반부패 전략수립 및 운영능력 향상 등 반부패 역량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워크숍에는 APEC 회원국의 반부패 기구, UNDP 등 반부패 국제기구 및 부탄 등 기술지원사업 수원국 대표 등 약 30개국 150여명 참석할 예정이다. 제5차 반부패기구 기관장 회의(ACA회의)를 APEC 워크숍과 연계하여 개최하기로 하였다.³⁶⁾ 현재까지는 동남아 반부패기구 중심으로 개최되었으나, '09년 회의시에는 서울에서 회의가 개최되는 점을 고려, 중국(국가부패예방국) 등의 참석을 추진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제 반부패 라운드에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관련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다양한 반부패 교류 및 협력활동을 선도할 계획을 밝혔다. 국제 상거래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처벌하고, '공정한 국제경쟁의 장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OECD뇌물방지협약('99. 2월 발효)을 제정되

36) ACA(Anti-Corruption Agency) 회의는 아태지역 반부패 협력을 위한 반부패기구 기관장 회의로 '02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우리위원회는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다.

었는데, 동 협약과 관련된 국내 이행법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1단계 심사를 완료('99. 7월)하였고, 국내 이행법의 실제적용 실태에 대한 2단계 심사를 완료('09. 3월)할 예정이었다.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국내이행법으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였다('98.12월). 협약이행체제의 최종 단계인 3단계 심사('09년~'13년)는 뇌물방지협약 위반시 제재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3단계 심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가간 상호평가 원칙상 우리나라가 영국과 함께 핀란드에 대한 제3단계 주심사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위원회는 법무부와 함께 제3단계 심사에 참여할 예정이다('09.10월). 우리나라에 대한 제3단계 심사는 핀란드, 뉴질랜드가 수행할 예정이다('11. 2월). 한편, UN반부패협약은 공공과 민간의 부패문제를 포함하고, 예방적 조치와 처벌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패방지를 위한 최초의 세계적 규범으로 출현('03년 10월 체결)하였으나, 아직 이행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³⁷⁾. 우리위원회는 협약비준('08. 2월)에 따른 동 협약상의 부패방지기구로서 당사국총회, 이행점검실무그룹회의 등에 참석하여 이행점검체계 수립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법무부, 외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ADB/OECD 아·태 반부패회의³⁸⁾ 참석을 통해 아태지역 반부패 논의를 주도하고 협력기반을 강화하는데에도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아태지역 반부패 논의에서 우리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우리의 우수 반부패 제도와 정책을 홍보하여 아태지역 반부패기구 간 정책 교류 및 네트워킹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별 반부패 시스템 및 이행현황가('09년 필리핀) 등 지역 협력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2009년 아태지역 반부패 주제연구 보고서 작성을 위한 한국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연구주제 : UN반부패협약에 따른 뇌물죄의 범죄규정), UN반부패협약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작성에 관한 특별회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09. 3월, 마카오).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 중이며, 인니와의 MOU 이행과 더불어 몽골, 베트남, 부탄 등을 대상으로 협력사업 추진방안 강구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와 인니 부패방지위원회 간 체결('06.12.)된 반부패

37) UN반부패협약상 부패방지기구의 역할(협약 제6조)은 부패방지정책의 시행 및 부패방지정책의 시행에 대한 감독과 조정, 부패방지와 관련한 지식의 확충과 보급, 협약의 타당사국에 대한 부패방지정책의 개발·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38) ADB/OECD 아태 반부패회의는 '아태 반부패 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 이행을 위한 국가별 정책 수립·추진 독려를 위하여 '99년 아태 지역 국가,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창설된 회의체를 의미한다.

협력 MOU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부패영향평가 등 반부패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인니 부방위 직원의 한국 연수를 추진하고('09.5.), 한-인니 MOU 이행을 위한 협력조정위원회 및 동 사업을 총괄·결산하는 「반부패 심포지엄」을 개최('09.10.)하기도 하였다. 2007-2008 2개년 사업인 한-UNDP 개도국 기술지원사업의 완료에 따라 UNDP측과 '09년 기술지원사업 협의 중에 있다. UNDP 방콕 지역사무소와 향후 사업 방안 협의 등 추진을 검토 중이며 UNDP 방콕 사무소는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 외교부와 사업 방식, 자금 조달 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착수할 예정이다. UNDP를 통한 다자간 협력사업 외에도 반부패 기관간 양자 협약을 통한 기술지원사업도 추진 중인데 협력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몽골, 베트남, 부탄 등을 대상으로 외통부, 한국국제협력단 사업비를 활용하거나, 위원회 예산을 확보하여 독자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2. 국가신인도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제홍보 강화

권익위에서는 국제홍보의 일환으로, 주한 외국인 여론 형성층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한 미·유럽상공회의소 등 외국 상공인 단체의 정기 모임, 간담회 등에 참여하여 외국인 CEO 등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국가청렴도 제고 노력을 홍보하고 있다. 반부패 노력 홍보와 함께 기업 윤리 관련 정보 제공(민간협력과), 경영 관련 고충 수집·처리(고충처리부) 등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 KOTRA 등 외국인 (투자) 관련 유관 부서·단체와 공동으로 투자저해 요소 발굴 및 반부패 관련 제안 청취를 위한 설문조사,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한 미·유럽 상공회의소 등에 우리위원회를 부패 및 고충처리신고 창구로 소개하는 홍보물 제작·배포되었다.

그 간의 우리나라 반부패운동의 노력 및 성과에 대한 다각적인 국제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반부패 해외 동향 수집·분석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선된 부패상황 및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과 성과를 ACRC Transparency Newsletter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국제평가기관 및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 국내 외 기업 CEO, 상주 외신기자 등을 대상으로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위

원회 영문 홍보물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그간의 위원회 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영문 브로셔, 백서, 법령집,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을 제작하여 국제회의 참석, 외국반부패기관 방문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우리정부의 반부패 노력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는 주요 외국공무원, 연구소,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Korea Herald, Korea Times 등 국내 영자신문 및 주한 외국경제단체 발간물 등에 위원회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영문광고 게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주요 기업인·정치인과 관련된 국내 부패 사건에 대한 해외 언론 동향을 인터넷 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를 위원회 내부망에 등록·공유토록 함으로써 정책수립 및 국가청렴도 관리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회의 참석, 국외출장 등을 통해 파악한 국제사회 동향, 해외우수사례를 정책입안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제 8 장

결 론

제 1 절 청렴 제고의 효과와 필요성

청렴은 단순히 윤리적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추상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본 보고서에서 여러 차례 강조되고, 사실상 본 보고서의 전체를 일관하는 주장은 청렴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의 이미지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 성과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렴,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의 법·제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방대한 기존 연구가 있다. 분석 대상과 분석 방법 그리고 시기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정도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적으로 기존 연구는 청렴 또는 법과 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정을 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변수들이 오히려 거시경제적 변수보다도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성장 요소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부패 현황, 외국의 기존에 대한 검토 등에 더해, 청렴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다양한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가 주로 청렴(부패)과 경제 성장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집중한 데 반해 본 보고서는, 이에 더해 청렴과 경제의 안정성, 그리고 청렴이 국가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그 개념적 모호성과 지수 도출 방법상의 비과학적 한계를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추세를 고려하여, 국제적 기관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지수를 이용하여 청렴이 미치는 영향을 정량

분석하였다.

청렴은 그 자체로서 직접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투자와 수출의 제고를 통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공적 부문의 부패 또는 담합과 같은 사적 부문의 부패가 경제 내의 새로운 기업의 탄생을 저해할 경우 생산과 소비에 미치는 왜곡에 대해서는 차문중(2005)을 근거로 그 폐해를 이론적으로 지적하였다.

부패는 시장의 자본임대율을 왜곡시킨다. 뇌물의 한계편익이 한계 비용을 능가하여 뇌물 수수를 통해 진입과 같은 경제 행위를 추구할 경우 시장의 자본 임대율은 정상임대율보다 낮아진다. 진입을 위해 필요한 자본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패에 의한 진입비용이 존재할 경우 진입기업들은 정상 상태와는 다른 조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주어진 부패 수준과 이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내리는 생산량의 수준은 정상 수준에서의 생산량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당국의 비호를 받는 기업만 진입하고 생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의 수 자체도 감소하므로 결과적으로 경제 내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부패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이론적 모형은 또한 같은 수준의 부패라도 선진국의 성장 또는 소비 증가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 선진국으로의 진입한 우리에게**는 **중전과 같은 수준의 부패를 용인하더라도 성장과 소비의 훼손은 더욱 커질 것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발견은 부패 척결 등을 통한 기업환경의 개선이 최근 우리 경제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한 논거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선형적(비례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차문중(2005)은 3차 함수를 활용하였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1차 또는 2차 함수를 원용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추정식에서 부패와 경제성장은 음의 관계가 발견되었으며 그 계수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ICRG 자료를 이용했을 때, 1980년~2006년간 부패지수의 한 단위, 즉 1 만점의 변화는 연평균 경제성장률에 0.41%의 영향을 미쳤다. 즉 부패지수가 1만큼 감소한다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41% 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³⁹⁾

39) 이런 의미에서 부패의 제곱항을 변수로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연구, 예를 들면 Mauro(1995)의

예를 들어 2000년-2007년까지의 한국의 부패지수는 평균 2.55이었으며 동일한 기간 일본의 부패지수는 3.41이었다. 이는 만약 **한국이 일본의 수준만큼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면 한국의 연평균경제성장률이 0.35% 포인트 더 증가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는 부패가 투자, 인적자본, 무역 등의 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효과, 즉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로 평가할 수 있다.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총 효과 중 직간접 효과의 기여도를 보면 **전체 중 39%는 부패가 직접적으로 성장에 영향을 주는 효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61%는 부패가 투자와 무역, 그리고 인적자본과 같은 성장동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효과이다.** 다시 말해서 부패지수의 1단위 감소는 투자변화율을 증가시키고 무역을 증진시키며 인적자본의 수준을 향상시켜 경제수준을 약 0.64% 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다. <표 8-1>은 이러한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8-1>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투자변화율	무역	인적자본	
실제 크기	0.41%	0.56%	0.02%	0.06%	1.05%
상대적 비중	38.8%	53.2%	2.2%	5.8%	100%

주 : <표 6-4> 재인용.

한 국가의 청렴 수준은 또한 경제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의 안정성은 GDP 성장률의 표준편차(성장 안정성) 또는 경제위기를 경험할 확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경제의 청렴도와 성장 안정성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1990~2006년 동안의 부패 수준이 ICRG 지수로 한 단위만큼 개선됨에 따라 성장변동성(표준편차)은 0.39%p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패지수의 증가율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부패 수준의 증감보다는 장기적인 부패 수준 자체가 성장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는 결과적으로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과대추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부패지수 개선도 경우에 따라서는 성장 안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개연성을 전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다.

경제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는 경제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다. 주어진 평균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 하에 **부패 지수가 한 단위만큼 개선됨에 따라 경제위기 경험확률은 7.7~15.7%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대에는 부패수준을 빠르게 낮추는 경제에서 경제위기 경험확률이 낮아지고 있어, 부패의 수준 뿐 아니라 이를 낮추려는 노력 역시 경제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인다.

부패수준은 또한 국가의 전반적인 경쟁력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렴지수의 표준편차인 1.2만큼 청렴지수가 개선되면 국가경쟁력 순위는 적어도 8단계, 국가경쟁력 점수는 0.29점 가량 상승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예를 들어 보면 2005년-2007년의 평균 청렴지수가 2.5인 한국이 일본의 수준으로 청렴지수를 개선시킨다면, 즉 2.5가 3.5가 된다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점수는 0.2점, 국가경쟁력 순위는 6.7단계 가량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2005~2007년의 한국과 일본의 연평균 국가경쟁력 점수의 차이(0.203점)의 98.5%, 연평균 국가경쟁력 순위의 차이 (8.3단계)의 80.7%가 된다. 청렴이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의 전반적인 법과 제도를 대표하는 변수라고 한다면, 양 국가의 경쟁력 차이의 대부분은 청렴을 포함한 법과 제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을 시사한다.⁴⁰⁾

국가브랜드 역시 청렴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청렴지수의 표준편차인 1.2만큼 청렴지수가 개선되면 국가브랜드 순위는 적어도 4단계 가량 상승할 수 있으며 국가브랜드 점수는 5.2점 가량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2005년~2007년의 평균 청렴지수가 2.5인 한국이 일본의 수준으로 청렴지수를 개선시킨다면, 즉 2.5가 3.5가 된다면 한국의 국가브랜드 순위는 3.3단계, 국가브랜드 점수는 4.3점 가량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브랜드 순

40) 한국과 일본의 경제수준이 3배가량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양 국가의 청렴 수준의 차이가 국가경쟁력 점수 및 순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이는 국가브랜드 지수와 달리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경쟁력 점수 및 순위의 표준편차는 각각 0.8, 35.8인데 반해, 한국과 일본의 국가경쟁력 점수 및 순위의 차이는 각각 0.2, 8.3 정도로 그 편차가 매우 작다. 그 이유 때문에 비록 경제수준이 비슷한 국가간의 비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개선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매우 크게 추정되었다.

위의 차이(20.7단계)의 15.9%, 국가브랜드 점수의 차이(24.5점)의 17.6%가 바로 양 국가의 청렴 수준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국가브랜드는 해당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으로 표시된) 경제 수준의 영향을 유의하게 받고 있어, 한국과 일본의 소득 차이는 한국의 청렴도 개선이 국가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할 개연성을 시사한다. 한국과 유사한 국민소득을 기록한 뉴질랜드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청렴도 개선 효과를 분석할 경우 이러한 편이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과 뉴질랜드의 1인당 평균 GDP 수준은 각각 US \$13,552, US \$15,148이다. 만약 한국이 뉴질랜드 수준으로 청렴지수를 개선시킨다면, 즉 2.5가 5.5가 된다면 한국의 국가브랜드 순위는 10단계, 국가브랜드 점수는 13점 가량 상승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뉴질랜드의 국가브랜드 순위의 차이(14단계)의 71.4%, 국가브랜드 점수의 차이(17.6점)의 73.9%가 양 국가의 청렴 수준(보다 포괄적으로 법과 제도 수준)의 차이로부터 기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의 이러한 분석 결과는 반부패운동 및 정책이 왜 우리에게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인지 적시한다. 청렴도의 제고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가의 경제적 성과는 물론, 외부로부터 평가되는 국가 브랜드 및 총체적인 경쟁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청렴도 상승은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투자와 무역의 증가와 인적자본의 확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에 따른 국가 브랜드의 제고는 다시 무역과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렴도 제고가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한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추진 과제로 자리매김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제2절 적정수준의 청렴도 달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⁴¹⁾

경제 전체적으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면, 경제학적 견지에서 가장 소망스러운 수준의 청렴 수준은 의사 결정권자(부패 행위를 저지르지 여부를 결정할 자)의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수준이

41) 본 절과 제3절은 차문중(2008)에서 많은 부분 원용하였다.

된다. 이러한 결정은 결정 주체가 부패를 저지를 경우 얻게 되는 한계편익과 부패로 인해 지불하게 되는 한계(기대)비용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부패 수준 결정 이론은 Becker(1968)와 Becker and Stigler(1974)가 범죄행위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방법론을 원용한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의 이론에 근거하여 개인 또는 기관이 자신의 편익을 극대화하도록 부패수준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은 이러한 결정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 요인들을 적절하게 제어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기의 단순화를 위해 개인이 부패행위를 통해 자신의 편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우를 상정하자(개인은 공직자, 회사 등으로 환치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이 부패행위를 할 경우 이로부터 편익을 얻는다. 이 편익은 시간의 단축일 수도 있고, 화폐적 이득일 수도 있다. 이러한 편익을 화폐화해서 나타내고, Ω 라고 표기하면 이 Ω 는 부패 수준 c 의 함수가 된다. 편의상, 이 개인이 부패행위를 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같은 양의 기대 편익이 발생한다고 하자.

부패행위로 인해 일정한 편익이 발생하는 대신, 이 개인은 자신의 부패행위가 밝혀질 경우 거기에 대해 가해지는 제재 조치 또는 처벌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위험 중립적인 개인이 부패행위를 할 경우 감수해야 하는 기대 비용은

$$EC = P(c, X) \times \Gamma(c, Y)$$

이다. 여기서 EC 는 총기대비용, P 는 개인이 부패행위를 했음이 발견될 확률이며, 이 확률은 개인의 부패 수준 c 와, 기타 발각될 확률을 결정하는 변수들의 벡터 X 의 함수이다. 한편 Γ 는 부패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지불해야 하는 비용(제재나 처벌)으로, 개인의 부패 수준 c 와, 제재나 처벌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의 벡터 Y 의 함수이다.

벡터 X 에는 그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얼마나 많은 자원과 좋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부패행위를 감시하는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부패행위가 용인되는지 등이 포함된다. 벡터 Y 에는 일단 발각될 경우 얼마나 법의 집행이 공정하고

엄정한지, 부패행위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낙인(stigma)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만일 처벌을 받아 직장을 잃게 될 때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얼마나 큰 지 등이 포함된다. 개별 경제주체는 부패행위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한계 기대수입⁴²⁾과 한계기대비용을 고려하여, 자신의 기대수입과 비용의 차이를 극대화하는 수준 c^* 까지 부패행위를 할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이 자신의 부패행위를 통해 순기대편익을 극대화한다면, 개인이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 함수(순기대편익)는

$$\text{Max}_c \Omega(c) - P(c, X) \times \Gamma(c, Y)$$

가 된다. 즉 이 개인은 자신의 부패 수준 c 를 정하여 순기대편익과 순기대비용의 차이를 극대화한다. 순기대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1계 조건은

$$\Omega'(c) - [P'(c, X) \times \Gamma(c, Y) + P(c, X) \times \Gamma'(c, Y)]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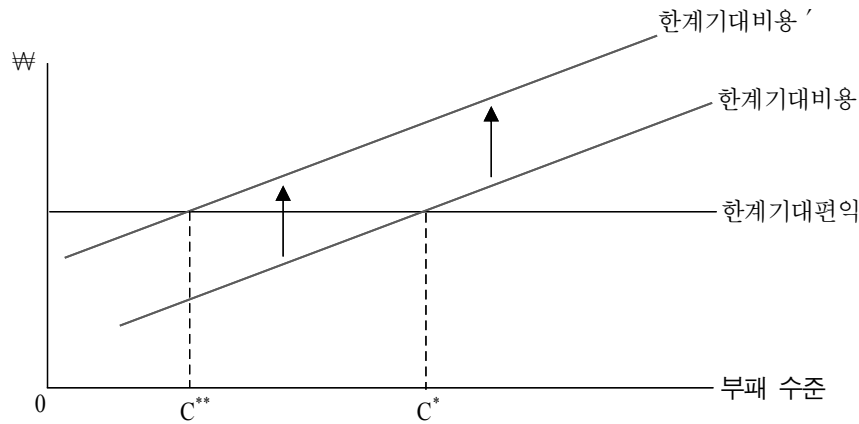
또는

$$\Omega'(c) = [P'(c, X) \times \Gamma(c, Y) + P(c, X) \times \Gamma'(c, Y)]$$

이다. 위 식의 좌측 항은 한 단위 더 부패행위를 할 경우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기대편익이고 우측 항은 한 단위 더 부패행위를 할 경우 추가적으로 기대하여야 하는 기대비용이다. 자신의 부패 정도를 증가시킬 때 발생하는 한계기대수입이, 부패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하다면, 즉 1단위 더 부패함에 따라 추가로 얻어지는 한계 뇌물의 액수가 동일하다면 부패에 따른 한계기대수입은 [그림 4-4]의 수평선 $\Omega'(c)$ 가 된다. 1단위 더 부패함에 따라 한계 뇌물 액수가 증가 또는 감소한다면, 한계기대 수입은 우상향 또는 우하향하겠지만, 기본적인 논의와 함의 자체를 변형시키지는 않는다.

42)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한계’는 전통적 경제학에서 의미하는 바의 ‘추가적인 한 단위’이다. 즉 한 계비용은 추가적으로 한 단위 더 생산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이다.

[그림 8-1] 부패수준의 결정



한계기대편익은 $P'(c, X) \times \Gamma(c, Y) + P(c, X) \times \Gamma'(c, Y)$ 로 구해지는데, P' 과 Γ' 의 부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제 주체의 부패 정도가 심해질수록, 이 경제 주체의 부패 행위가 발각될 확률은 증가하고 ($Pc' > 0$), 또 발각되었을 때 받는 형벌이나 기회비용을 포함한 총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Gamma c' > 0$).

여기에 더해 발각될 확률 P 와 처벌의 크기 Γ 는 모두 양(+)이므로 전체적으로 한계기대비용(다시 말해 총기대비용의 기울기)은 양(+)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한계기대비용에 포함된 모든 항들, P , P' , Γ , Γ' 가 부패 수준 c 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므로, 한계기대비용 자체도 부패 수준 c 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부패 수준이 증가할수록 발각될 확률은 이에 비례해서 증가하든지 ($P''=0$) 아니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P'' > 0$). 적어도 부패 정도의 증가에 따라 각종 사회적·법적 제재가 가중됨을 고려한다면, 한계 비용 Γ' 도 부패 수준에 대해 증가하든지 최소한 불변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계기대비용에 대한 이러한 고려를 반영하면 [그림 8-1]의 우상향하는 한계기대비용 곡선을 얻는다. 그리고 경제 주체는 c^* 에 이를 때까지 부패행위를 하게 된다.

결국, 부패에 대처하는 정책 당국이 경제 주체들 사이에 만연한 부패 행위를 감소시키기를 원한다면, 부패 행위 또는 수뢰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향상시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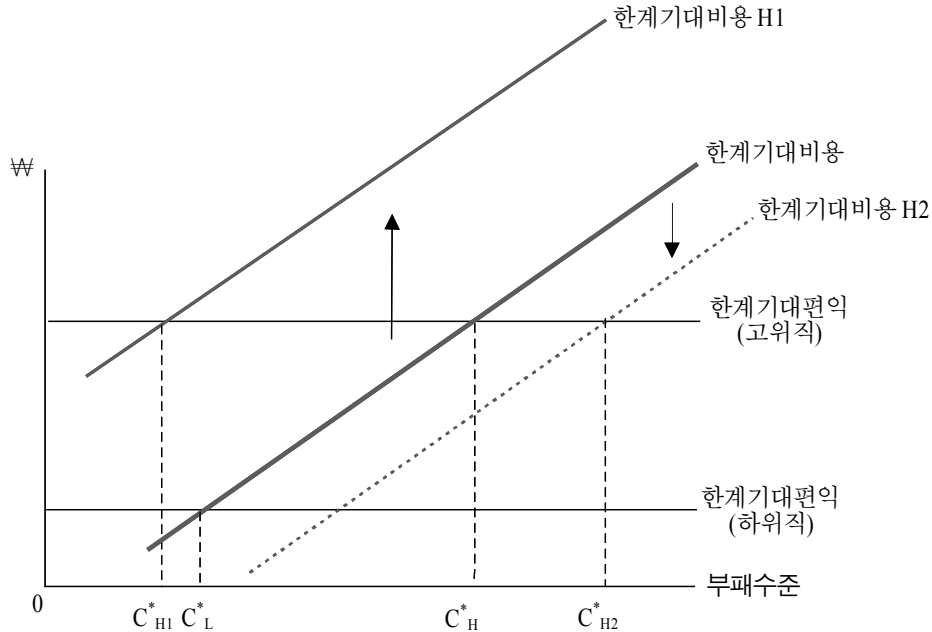
거나, 적발되었을 경우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을 증가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적발 시스템의 향상은 보다 많은 인력, 시간, 자원 등을 통해 가능하며, 비용의 증가는 처벌을 보다 엄격히 하고 적발되었을 경우 잃는 기회비용(예를 들면 공무원으로서 받는 임금 등)을 증가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불법적인 일을 하기 위한 대가로 뇌물이 수수될 경우, 정부의 강력한 억제책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낳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부패 대상자가 발각될 확률이 높아지거나 처벌의 강화로 인해 부패수준을 감소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 예상되는 반응 중의 하나는 자신의 부패 행위에 대한 대가를 인상하여 뇌물 등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так하청의 문제, 즉 부패 행위가 고위 공직자나 고위 정치가들 사이에서 더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거성(2008)은 제1회 법·질서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так하청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상так하청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는, 부패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은밀하고 찾아내기 어려워(특히 고위층에서는 더욱 어려움) 확인하기 쉽지 않다.

Bardhan(2007)은 부패수준의 객관적 추정이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인도의 길거리에서는 매일 무수히 많은 뇌물 수수행위를 목격할 수 있지만, 미국의 무기구매 관련 뇌물 수수는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부패 수준이 상당히 낮은 미국의 경우에도, 하위직 공무원이나 정치가보다는 고위직에서 중대한 부패 행위가 은밀히 자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이다.

상так하청의 문제는 앞에서 사용한 Becker의 모형으로 그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8-2]에서는 고위 관료(또는 정치가)와 하위 관료(또는 정치가)의 한계기대편익이 같은 평면에 그려져 있다. 고위 관료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부패 사안은 하위 관료의 그것보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중요하다 가정한다. 따라서 한계기대편익 역시 하위 관료의 한계기대편익보다 크다. 따라서 고위 관료의 한계기대편익이 더 높게 그려져 있다.

[그림 8-2] 상탁하청 모형



이 경우 고위 관료와 하위 관료의 부패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각각의 한계기대비용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계기대수준은 적발될 확률, 처벌될 가능성과 처벌 강도,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 그리고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이 한계기대비용이 고위직과 하위직 모두에게 동일하다면, 상대적으로 부패행위의 한계기대편익이 높은 고위직이 더 많이 부패에 연루되는 것은 자명하다. 즉 하위직의 부패 수준은 C_L^* 에서, 고위직의 부패 수준은 C_H^* 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고위직과 하위직의 한계기대비용이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누가 더 잘 적발되고 더 많이 기소, 처벌되고 더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더 심각한 사회적 낙인을 감수할 것인가이다. 고위직의 범죄행위는 김거성(2008)이 시사한 바와 같이 적발될 확률이 낮다. 수사하는 측에서도 부담이 있을 수 있

고, 사안 자체가 명백(clear-cut)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위직 또는 (블루컬러와 대비하여) 화이트컬러 범죄가 더 기소율이 낮고, 처벌될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형을 경감 받거나 유예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2000.01~2007.06까지 범죄유형별 집행유예 비율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71.1%, 절·강도의 경우 47.6%, 형법상 횡령·배임죄의 경우 41.9%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관대한 판결을 시사하고 있다(1심 기준, 경제개혁연대, 2007)
- 국민들의 71.9%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조하고 있다(김거성, 2008).

기회비용 역시 마찬가지이다. 고위직이 처벌될 경우 자신의 직위를 잃으며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높지만, 정치계나 기업계 등을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부활’이 가능한 경우 해직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고위직의 한계기대비용이 낮다면 그 선은 (한계기대비용 H_2)가 되고, 고위직의 법·질서 위반은 $C^*_{H_2}$ 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즉 낮은 한계기대비용과 높은 한계기대편익을 지니고 있는 한 고위직의 법·질서 위반 수준은 하위직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상타하청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적발과 처벌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 자신과 같은 과당에 속한 사람을 옹호하고 뒤를 책임지는 과당적 관습, 법·질서 위반이나 부패 행위를 경우에 따라 미덕으로까지 간주하는 전근대적인 사고, 고위직의 법·질서 위반이나 부패 행위에 대한 국민의 관대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계기대편익은 불법의 시장에서 결정되어 주어지는 경향이 강하므로, 고위직의 부패 행위에 대한 주된 정책적 대안은 고위직의 한계기대비용이 적절한 자리를 찾아가도록 제도와 관습,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Noblesse Oblige와 같이 고위직의 도덕적·윤리적 의무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분위기와 고위직의 부패 연루와 같은 법·질서 위반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응은 이들의 한계기대비용을 (한계기대비용 H_1)과 같이 높게 상승시키고, 이 경우 고위직의

부패 수준 C^*_{HI} 이 하위직보다 낮아지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다.

제3절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본 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시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우리 경제에의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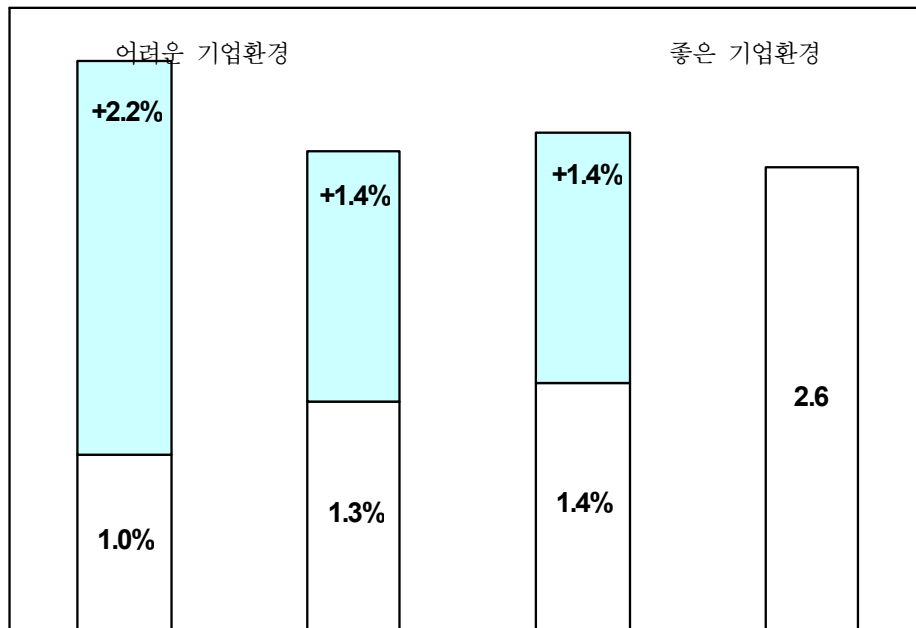
첫째, 부패행위에 대한 감시·적발체제와 처벌의 강화가 절실하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성공적인 반부패운동은 홍콩의 엄정공서나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 강력하고 독립적인 반부패기관의 존재는 청렴도의 제고를 가능하게 한다. 공적 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철저한 감시·적발체제와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발되어 처벌받을 가능성과 처벌의 강도를 적절히 고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공직에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고, 관료의 수는 줄이되 보수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Van Rijckeghem and Weder(2003)의 연구는 각국의 부패와 공적부문의 상대적 임금간의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민간부문과 비교할 때) 공무원의 상대적 임금이 높은 국가에서 부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민간부문에서의 임금과 부패와의 관계 역시 연구되었는데, 그 대표적 예가 Di Tella and Schargrodsky(2003)이다. 단, 우리나라와 같이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평생보수가 안정적이고 높은 경우 추가적인 보수의 상향조정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사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관료제도에 보다 많은 경쟁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공적부문의 부패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공적부패의 상당 부분은 관료제가 지닌 독점력에 기인한다는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수가 일정하게 주어진 상태에서는 이러한 경쟁 도입책은 관료의 나태를 부채질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관료들의 관할권을 중복되게 책정하거나 아웃소싱(outsourcing)을 활용하여 견제와 균형을 장려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시장에 보다 많은 경쟁을 도입하고 공정한 룰 적용되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규제는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이를 회피하기 위한 뇌물 수수 등 부패 발생을 조장한다. 규제의 철폐와 개선은 단기적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및 암묵적 규제인 부패를 조장하는 행위는 사후적인 적발과 단속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한다. Djankov, McLeish and Ramalho(2004)는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의 효과를 도출하였는데, 규제가 아주 심해 기업 환경이 좋지 않은 그룹 국가들의 경우, 기업환경이 가장 좋은 그룹의 국가 수준으로 기업 환경을 개선할 경우 성장률이 약 2.2% 포인트 향상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그림 8-3] 참조).

[그림 8-3] 규제 개혁과 경제 성장 효과



주: 밑의 흰 부분은 실질성장률, 위의 짙은 부분은 추가적으로 가능한 성장률임.
 자료: Djankov, McLeish and Ramalho (2004).

다섯째, 옴부즈만이나 불만처리위원회 등 제도의 활용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 단, 이러한 정책은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이 불충분하고, 특히 정치적 입지가 강한 관료들에 대해서는 추적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작은 일

에 집중되어 있고, 보다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여섯째, 부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패방지법과 동시행령에서 신고자의 신변보호와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과 투명사회협약 제정 이후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부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현실적으로 더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먼저, 명문화된 규정이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공익제보자의 신변이 실제로 안전하게 보호되는지는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패행위 적발자나 뇌물 수수 당사자들은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하므로, 외부 감시로부터 방어체제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내부제보자(whistle blower)의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비정부부문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NGO, 언론, 방송 등의 참여는 정보의 자유 및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들을 통한 반복적이고 공개된 논의는 일반 국민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킬 수 있다. NGO 등은 필요한 경우 부패한 공직자나 위법한 민간부문에 대한 추적·공적 소송 제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총체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총체적 접근법은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국가적 청렴 체계”를 세우고, 평가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다방면에서 추진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민간, 시민사회, 언론 등의 공동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인다. 빠른 속도의 범사회적인 개혁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개혁 초기의 여건이 중요하다. 또한 빠른 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속적인 반부패 운동이 없거나 체계가 취약하면 개혁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사회 전반에 걸친, 성역 없고 차별 없는 적발과 처벌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공공캠페인을 전개하고 위법 집단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관료와 정치인, 기업인과 시민 모두에게 위법과 부패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 감사원 (1988), 감사 40년사, 감사원.
- 강신욱 (2000), 부패지수 어떻게 만드는가-부패지수의 방법론 비교와 평가, STI 연구보고서 2000-1,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청렴편람, 교육인적자원부.
- 국가브랜드위원회 (다년도), 내부 자료.
- 국가청렴위원회 (2004), 공직자청렴도향상 및 부패방지 가이드, 국가청렴위원회.
- 국가청렴위원회 (2007), 청렴국가 건설을 위한 공직자 부패방지 가이드, 국가청렴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다년도), 내부 자료.
- 김경중 (2003), 글로벌 시대의 부패방지 정책방향, 부패방지위원회(발표자료).
- 김득갑 외 (2008), 국가경쟁력지수의 허와 실, CEO Information 제682호, 삼성경제연구소.
- 김유경 (2007), 국가브랜드 개성의 차원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 디니, 키스 (2009), 글로벌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국가 브랜드의 전략적 관리, 김유경 옮김, 나남.
- 박재완 (1997), 부패와 反부패정책의 경제적 함의, 공공경제(제2권), pp.96-125.
- 안홀트, 사이먼 (2003), 국가브랜드·국가이미지, 김유경 옮김, 커뮤니케이션 북스.
- 이민호 (2002), 홍콩의 성공적인 반부패정책과 사회윤리 강화, 기업윤리연구, pp.71-88.
- 이철한·김병철 (2009), 국가이미지 홍보방안의 현황과 제언, 사회과학연구(제15권 제2호), pp.151-175.
- 조동성·문화창 (2006), 국가경쟁력 : 이론과 실제, 한국경제신문.
- 조동성·문화창 (2008), 한국의 국가경쟁력 세계 7위 달성을 위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미션과 로드맵, 산업정책연구원(발표자료).
- 조병구·차문중·김동률 (2006),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연구, 용역보고서, KDI.
- 차문중 (2008),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질서 수준 제고 방안, 용역보고서, KDI.
- 차문중 (2007), 법·질서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KDI 정책포럼, KDI.
- 차문중 (2005), 암묵적 규제로서의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KDI.
- 차용진·이홍재 (2007), 2006 글로벌경쟁력지수(GCI)에 대한 고찰 - GCI 모형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토 -, 정책분석평가학회보(제17권 제3호), pp.113-138.
- 포터, 마이클 (2009), 마이클 포터의 국가 경쟁우위, 문화창 옮김, 21세기 북스.
- 황경식 (2006), 현대 민주사회의 공직윤리 연구 - 청렴개념의 현대적 의미를 중심으로 -, 한국윤리학회(세미나 발표자료).
- KDI (다년도), 내부 자료.
- Acala, F. and A. Ciccone (2004). Trade and productiv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pp. 613-646.
- Acemoglu, D., J. A. Robinson and S. Johnson (2001). The Colonial origin of comparative

- develop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pp. 1369-1401.
- _____ (2002), Reversal of Fortune : Geography and Institutions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Income Distribu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7, no. 4, pp. 1231-1294.
- Ackerman, S. R. (1997). Temporal horizons of justice. *Journal of Philosophy*. vol. 94, pp. 299-317.
- Abed, George T., Davoodi, Hamid, R. (2000), Corruption, Structural Reforms, and Economic Performance in the Transition Economies, *IMF Working Paper* ; WP/00/132, IMF.
- Andvig, J. (2005). *Corruption and fast change*. World Development. vol. 34(2), pp. 328-340.
- Banerjee, A. (1992), A simple model of herd behaviour,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CVII, No. 3, pp.797-817.
- Bardhan, P. (2006). The economist's approach to the problem of corruption, *World Development*. vol. 34(2), pp. 341-348.
- Barro, Robert J. (1991), Economic Growth in Cross Section of Countri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6, no. 2, pp. 407-443.
- Becker, G. S. and G. J. Stigler (1974), Law Enforcement, Malfeasance, and Compensation of Employees, *Journal of Legal Studies*, Vol. 3, pp.1-18.
- Brunetti, A., G. Kisunko, B. Weder (1997). Credibility of rules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a worldwide survey of the private sector.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1760*.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Butkiewicz, J. and H. Yanikkaya (2006). Institutional quality and economic growth: maintenance of the rule of law or democratic institutions, or both?. *Economic Modelling*. vol. 23, pp. 648-661.
- Carothers, T. (1998). The rule of law revival. *Foreign Affairs*. vol. 77(2), pp. 95-105.
- Carothers, T. (2003). *Promoting the rule of law abroad: the problem of knowledg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Cass, David (1965), Optimum Growth in and Aggregative Model of Capital Accumulation,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32, no. 3, pp. 233-240.
- Deininger, K., and Squire, L. (1996), A new data set measuring income inequality,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 10.
- Djankov, S., R. La Porta, F. Lopez-de-Silanes and A. Shleifer (2002). The regulation of entr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7, pp. 1-37.
- Dobel, J. P. (1978), The Corruption of a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2, No. 3, pp.958-973.
- Dooley, G. and Bowie, D. (2005), Place brand architecture : Strategic management of the brand portfolio, *Place Branding*, vol. 1, pp.402-pp.419.
- Dreher A. and M. Gassebner (2007). Greasing the wheels of entrepreneurship? the impact of regulations and corruption on firm entry. *CESifo Working Paper No. 2013*, CESifo GmbH.
- Easterly, W. and R. Levine (2003). Tropics, germs and crops: how endowments influence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50, pp. 3-40.

- Ehrlich, Isaac, and Lui, Francis T. (1999), Bureaucratic Corruption and Endogenous Economic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7, no. 6.
- Eigen, P. (2002). Measuring and combating corruption. *Policy Reform*. vol. 5(4), pp. 187-201.
- Feld, L. and S. Voigt (2003). Economic growth and judicial independence: cross country evidence using a new set of indicator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9(3), pp. 497-527
- Francisco L. R. (2000).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current trends and future prospects, in United Nations. *Interregional Cooperation in Trade and Investment: Asia-Latin America, Bangkok: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Bangkok: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pp. 161-191.
- Gallup, J., Sachs, J., and Mellinger, A. (1999), Geography and Economic Development, *CID Working Paper* No., 1., Havard University.
- Getz, K. A. and R. J. Volkma (2001). Culture, perceived corruption, and economics. *Business and Society*. vol. 40(1), pp. 7-31.
- Gimenez, G. and Sanau, J. (2007). Interrelationship among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growth: an empirical evidence. *Applied Economics*. vol. 39, pp. 1267-1282.
- Glaeser, Edward L., LaPorta, R., Lopez-de-Silanes, F., and Shleifer, A. (2004), Do Institutions Cause Growth?,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9, pp. 271-303.
- Gordon, E., E. Henry and D. Palia (2004).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a value. *Advances in Financial Economics*. vol. 9, pp. 1-27.
- Gould, David J., and Amaro-Reyes, Jose A. (1983), The Effects of Corruption on Administrative Performance,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580.
- Grigorian, D. and A. Martinez (2001). Industrial Growth and the Quality of Institutions: What do (transition) economies have to gain from the rule of law?. *Journal for Institutional Innovation, Development and Transition*. vol. 5, pp. 73-82.
- Gupta, Sanjeev, de Mello Luiz, and Sharan, Raju (2001), Corruption and Military Spending,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7, pp. 749-777.
- Hall, R. E. and C. I. Jones (1999). Public-Sector Capital and the Productivity Puzzl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6(1), pp. 12-21.
- Huntington, S. P. (1968).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usted, B.W. (1999). Wealth, culture and corrup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30, pp. 339-360.
- Ehrlich, I. and F.T. Lui (1999). Bureaucratic corruption and endogenous economic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7, No. S6, pp. S270-29.
- Jain, Arvind K. (2001), Corruption : A Review, *Journal of Economic Surveys*, vol. 15, no. 1.
- Kaufmann D. and S. Wei (1999). Does "grease money" speed up the wheels of commerce?. *NBER Working Papers 7093*.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 Katz, B. and J. Owen (2004). Moving toward the Rule of Law in the Face of Corruption: Re-examining the Big-Bang. *New York University Working Papers 04-34*. New York

University.

- Klitgaard, Robert (1988), *Controlling Corruption*,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1991), *Gifts and Bribes*, in Richard Zeckhauser, ed., *Strategy and Choice*, Cambridge, MA.
- Knack, S. and P. Keefer (1997).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cross-country tests using alternative institutional measures. *Economics and Politics*. vol. 7, pp. 207-227.
- Keefer P. and S. Knack (1997). Why don't poor countries catch up? a cross-national test of an institutional explanation. *Economic Inquiry*. vol. 35, pp. 590-602.
- Koopmans, Tjalling C., On the Concept of Optimal Economic Growth, *The Econometric Approach to Development Planning*, Pontif. Acad. Sc. Scripta Varia. vol. 28, pp. 225-300.
- Leff, N. (1964).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bureaucratic corrup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8(3), pp. 8-14.
- Li, H., Xu, C. L., and Zou, H. (2000), Corruption,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Economics and Politics*, vol. 12, pp. 155-182.
- Luksetich, W. A. and M. D. White (1982), *Crime and Public Policy: An Economic Approach*,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Lui, F. T. (1996), A Dynamic Model of Corruption Deterrenc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31, pp.215-236.
- Mankiw, N. Gregory, Romer, David, and Weil David N. (1992), A Contribution to the Empirics of Economic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7, no. 2, pp. 407-437.
- Mauro, P. (1995), Corruption and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0, no. 3, pp. 681-712.
- Mauro, P. (1997). Why worry about corruption?. *Working Paper*. IMF, Washington DC.
- Mendez, Fabio, and Sepulveda, Facundo (2006), Corruption, Growth and Political regimes : Cross country evidenc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22.
- Meon, P. G., and Sekkat, K. (2005), Does Corruption Grease or Sand the Wheels of Growth?, *Public Choice*, vol. 122, no.1/2, pp. 69-97.
- Mill, J. S. (1848).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London: John W. Parker.
- Myrdal, G. (1971), *Asian Drama*, New York: Pantheon Books.
- North, Douglass,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lins, W. (1989), *Corporate Identity*, Thames and Hudson, UK.
- Pak, Hung Mo (2001),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29, no. 1, pp. 66-79.
- Paldam, M. (2002). The big pattern of corruption, economics, culture, and seesaw dynamic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8, pp. 215-240.
- Pantazis, John, and Rodrigues, Carl A. (1999), *Country Names as Brands-Symbolic Meaning and Capital Flows*, Montclair State University.
- Pellegrini, Lorenzo, and Gerlagh, Reyer (2004), Corruption's Effect on Growth and Its Transmission

- Channels, *Kyklos*, vol. 57.
- Romer, Paul M. (1987), Growth Based on Increasing Returns Due to Specializ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7, no.2.
- _____ (1990),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 no. S5, S71-S102.
- Rigobon, R. and D. Rodrik (2004). Rule of law, democracy, openness and income: estimating the interrelationship. *CEPR Discussion Paper No.4653*. the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 Robert O. Tiltman (1968), Emergence of Black-Market Bureaucracy : Administration, Development, and Corruption in the New Stat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28, No. 5, pp.437-444.
- Rodrik, D. (2000). Institutions for high-quality growth: what they are and how to acquire them.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vol. 35, pp. 3-31.
- Rodrik, D. (2003). *In search of prosperity: analytic narratives on economic growth*.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drik, D., A. Subramanian and F. Trebbi (2004). Institutions rule: the primacy of institutions over geography and integratoin in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9, pp. 131-165.
- Sandholtz, W., and W. Koetzle (2000). Accounting for corruption: economic structure, democracy, and trad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44. pp. 31-50.
- Shang-Jin Wei (2000), Corruption, composition of capital flows, and currency cris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2429*, The World Bank
- Shleifer, A. and R. Vishny (1993). Corrup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9(3), pp. 599-617.
- Solow, Robert M. (1956),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70, no.1, pp. 65-94.
- Svensson, J. (2005). *Eight questions about corruption, governance Indicators: a user guide*. New York: UNDP.
- Tanzi, Vito (1995), Corruption, Governmental Activities and Markets, *Finance & Development*, Vol. 32.
- Tanzi, Vito, and Davoodi, Hamid (1997), Corruption, Public Investment, and Growth, *IMF Working Paper*.
- Temporal, P. (2001), *Why Asian Countries need Branding*, www.asiainc.com
- Trebilcock, M. and R. Daniels (2008). *The rule of law and development*. Edward Elgar.
- Treisman, D. (2000). The causes of corruption: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76(3, June), pp. 399-457.
- Tullock, G. (1996), Corruption Theory and Practice,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Vol. 14, No. 3, pp.7-13.
- UN (1989), *Corruption in Government*, New York : United Nations.
- UNDP (1997). Corruption and good governance. *Discussion Paper No.3*. Management Development

and Governance Division.

Williamson, Oliver (1985),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Firms, Markets and Relational Contracting*, New York: The Free Press.

Woo, C., T. Kim and W. Jang (2007). Social Capital and Policy in Korea. *Working Paper 2007-01*. KDI.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 Miracle*. Oxford University Press.

World Bank (1997). *Helping countries combat corruption: the role of the World Bank*. Washington.

World Bank (2007). *Strengthening World Bank group engagement on governance and anticorruption*.

Joint Ministerial Committee of the Boards of Governors of the Bank and the Fund On the Transfer of Real Resources to Developing Countries. Washington D.C.

World Economic Forum (2007).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7-2008*. New York: Palgrave Macmillan.

Zak, P. and S. Knack (2001). Trust and growth. *The Economic Journal*. vol. 111(April), pp. 295-321.